연구보고서 2026-11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책임 : 김민아(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발 행 인 : 하 금 숙
발 행 일 : 2026. 10. 30.
발 행 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 소 : (36849) 경북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동행관 3층
전 화 : 054-650-7900
홈페이지 : https://forwoman.or.kr
디자인·인쇄 :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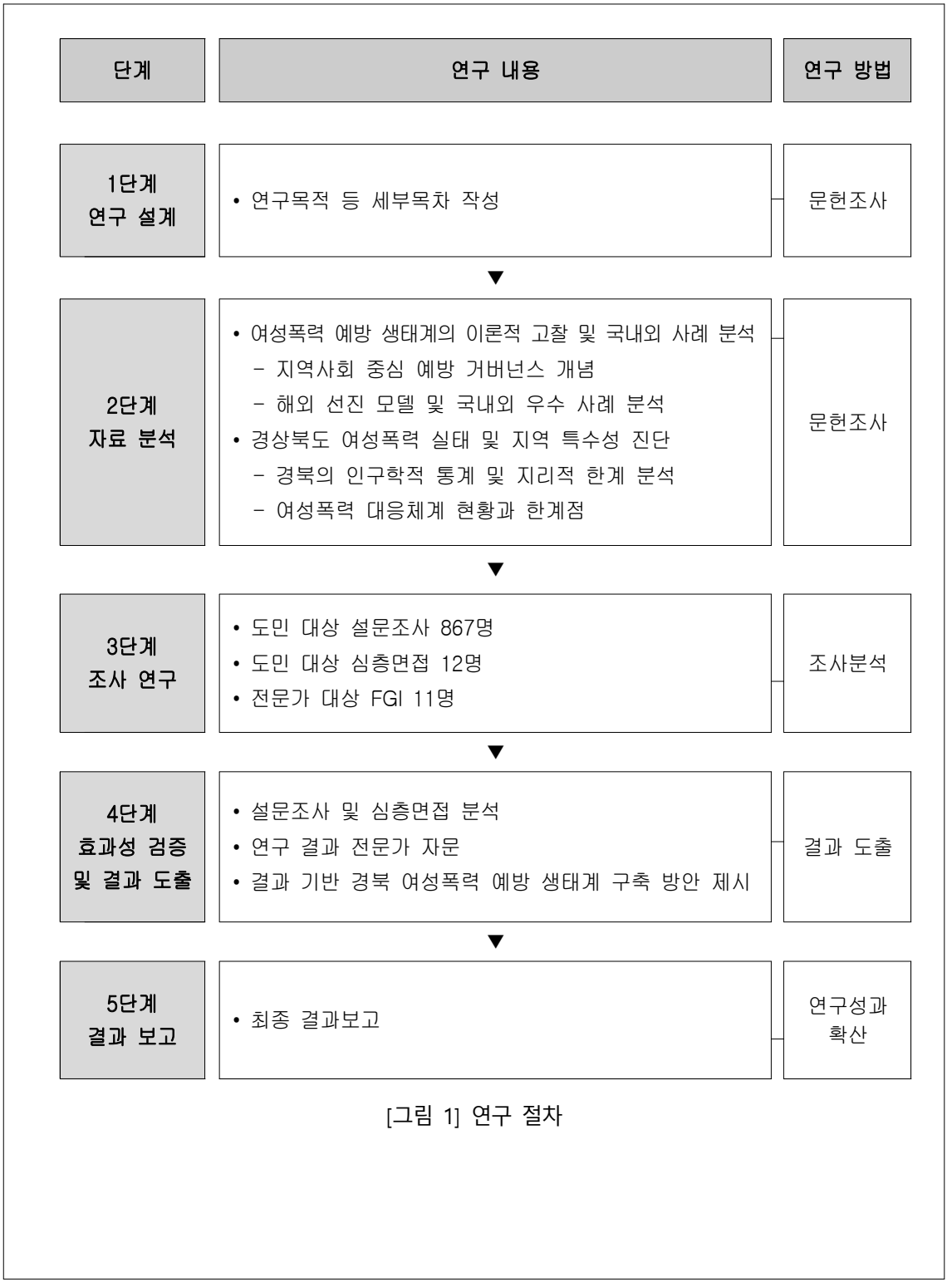
- 여성폭력은 개인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임. 최근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폭력의 발생 양상과 지원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남
- 기존 여성폭력 대응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 신고, 상담, 보호 및 회복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여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 요구됨
- 특히 경상북도는 초고령화, 인구감소, 도·농 복합적 특성과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 산간·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분산 등으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고령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은 지역사회 관계망과 돌봄 의존성, 정보 접근의 제약 등으로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인구학적·지리적 특성과 여성폭력 발생 및 대응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여성폭력 예방 인식과 정책 수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 여성폭력 예방모델과 다기관 협력적 접근에 관한 문헌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발생 현황과 피해자 지원체계, 예방 인프라 및 관련 사업을 분석함
- 또한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성인 남녀 86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 인식, 여성폭력 인식과 피해 두려움, 예방교육 및 캠페인 경험, 지원기관 인지도, 정책 및 인프라 수요 등을 파악함
- 이와 함께 지역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청소년, 청년, 중고령자,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경험과 요구를 살펴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장애인 인권 관련기관, 가족센터, 경찰, 시·군 통합사례관리 분야의 현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여성폭력 대응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함

3)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는 총 5단계의 추진체계에 따라 수행함. 1단계에서는 연구목적과 주요내용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실태와 대응체계 현황을 분석함.
- 3단계에서는 도민 대상 설문조사(867명)와 심층면접(12명),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11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함. 4단계에서는 조사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연구성과를 확산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단계
연구 설계
• 연구목적 등 세부목차 작성
문헌조사
2단계
자료 분석
•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지역사회 중심 예방 거버넌스 개념
- 해외 선진 모델 및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 경상북도 여성폭력 실태 및 지역 특수성 진단
- 경북의 인구학적 통계 및 지리적 한계 분석
- 여성폭력 대응체계 현황과 한계점
문헌조사
3단계
조사 연구
• 도민 대상 설문조사 867명
• 도민 대상 심층면접 12명
• 전문가 대상 FGI 11명
조사분석
4단계
효과성 검증
및 결과 도출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 연구 결과 전문가 자문
• 결과 기반 경북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결과 도출
5단계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
연구성과
확산

[그림 1] 연구 절차

Ⅱ. 지역사회 기반 여성폭력 예방모델과 다기관 협력적 접근

1) 여성폭력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 여성폭력 대응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보호와 지원에서 나아가 폭력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음
- 지역사회 기반 예방은 여성폭력을 특정 개인이나 전문기관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접근은 예방교육과 캠페인, 지역사회 위험요인 개선, 위험징후의 조기발견, 피해자 보호와 전문기관 연계, 재발방지 및 정책 환류가 상호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예방체계 구축을 강조함

2) 지역포화형 예방모델의 적용

- 지역포화형 예방(Community Saturation)은 학교, 직장, 마을, 공공기관 등 주민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여성폭력 예방활동을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 및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임
- 이는 일회성 교육이나 특정 대상 중심의 예방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예방 메시지와 실천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경상북도에 지역포화형 예방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환경에 따른 예방교육 및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Ⅲ. 경상북도 여성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 분석

1) 인구학적·지리적 특성

-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7.5%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특히 의성군 49.2%, 청도군 46.5%, 봉화군 45.4% 등 일부 군 지역은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상북도의 고령 단독가구 비율은 2024년 기준 14.3%로 전국 평균 10.3%보다 높으며, 군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 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7.03%로 전국 평균 5.14%보다 높으며, 군 지역의 평균 장애인 비율(9.22%)이 시 지역(6.49%)보다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여성폭력 피해의 비가시성, 정보 접근의 제약 및 전문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어 지역사회 내 조기발견 및 지원 연계 체계 강화가 요구됨

2) 여성폭력 발생 현황

- 경상북도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22년 9,185건, 2023년 9,237건, 2024년 8,542건으로 나타나 2024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8천 건 이상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2022년 125건, 2023년 196건, 2024년 223건으로 증가하여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예방교육과 전문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됨
- 여성폭력 발생 및 신고 현황은 지역별 인구 규모와 생활환경, 신고 접근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발생건수뿐 아니라 지역별 위험요인과 서비스 접근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한계

- 경상북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정서 및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폭력방지시설은 총 26개소로,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54.5%)에는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산어촌과 산간지역은 전문기관까지의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 등으로 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여성폭력 지원체계는 개별 지역의 시설 설치 여부에만 의존하기보다 권역별 전문지원체계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생활권 기관의 조기발견 및 연계 기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Ⅳ.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조사

- 본 조사 결과, 경상북도 주민의 지역사회 안전감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불안,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지역사회 체감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정보 및 접근성 부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한계 등이 확인되었음
-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감은 높았으나 안전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음. 거주지역의 안전감은 72.8%, 야간 보행 안전감은 65.7%였으나,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음. 특히 여성과 군 지역 주민의 안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환경 개선이 요구됨
- 둘째, 여성폭력에 대한 인지도와 지역사회 문제로서의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나타났음. 여성폭력 인지도는 81.0%였으나,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27.1%에 그쳤으며, 성별·연령·지역에 따라 인식 차이가 확인되어 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이 필요함
- 셋째, 전반적인 폭력 허용도와 피해 두려움은 낮았으나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야간 이동, 불법촬영 등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 피해 이후에도 지속되는 일상생활의 불안이 확인되어 생활밀착형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이 요구됨

- 넷째,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접근성이 부족하였음. 지원기관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는 응답이 54.3%였으며, 폭력 경험자 중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8.1%, 지역 내 전문기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쳐 지원정보 제공과 생활권 기반 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함
- 다섯째,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대상별 접근성에 한계가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예방교육 및 캠페인 경험은 54.4%였으나, 교육 내용의 기억과 활용도가 낮고 일부 대상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여 생애주기별·대상별 실천형 예방교육 확대가 요구됨
- 종합하면,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환경 개선, 주민의 예방 인식과 대응역량 강화, 생활권 중심의 조기발견·연계 및 피해자 전문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Ⅴ.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여성폭력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인구구조,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음. 특히 경상북도의 높은 고령화율, 농산어촌 중심의 생활환경, 넓은 지리적 범위 및 지역 간 지원 인프라 격차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첫째, 지역의 위험도와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인구규모 중심의 자원 배분에서 벗어나 고령화율, 교통 접근성, 여성폭력 발생 및 상담 수요 등을 고려한 권역별 전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농산어촌지역에는 찾아가는 상담·보호·의료 등 이동형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생활권 기반 조기발견과 권역별 전문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등 생활권 기관이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전문기관이 상담·보호·의료·법률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다층적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됨
- 셋째, 폭력 유형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복합폭력에 대한 전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여성·고령여성·이주여성 및 외국인 여성노동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 통·번역, 보호 및 자립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기관 간 협력의 실효성과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 지자체, 상담기관,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사례회의와 공동사례관리를 정례화하여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이·통장, 부녀회, 생활지원사 등 주민조직의 역할을 위험징후 조기발견과 신고·연계로 명확히 하고, 교육과 비밀보장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사후 대응 중심에서 지역사회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됨. 생애주기·대상별 실천형 예방교육, 주민참여형 예방활동, 디지털 안전교육과 함께 CCTV, 비상벨, 안심귀갓길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권역·시군·생활권을 연계하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례·예산·전담인력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 예방부터 위험징후 조기발견, 전문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회복 및 장기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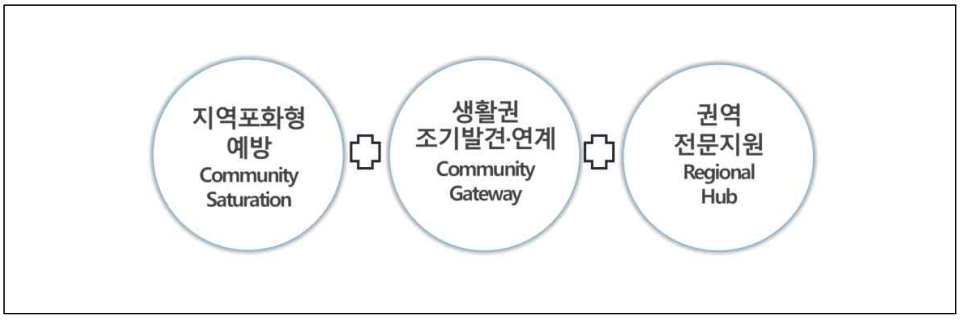
Ⅵ.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1) 기본 방향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지역포화형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접점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권 조기발견·연계’,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보완하는 ‘권역 전문지원’을 핵심 축으로 제안함
- 이를 광역 차원에서 총괄·조정하고 시·군 및 생활권의 예방·지원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예방–조기발견·연계–전문지원–정책환류–예방 강화’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는 '사후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문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공동책임으로', '시설 중심에서 생활권·연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경상북도의 농산어촌 중심 생활환경, 고령화, 지역 간 지원 인프라 격차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모델임
- 호주 빅토리아주의 지역포화형 예방모델(Community Saturation Model)을 참고하여 '지역포화형 예방–생활권 조기발견·연계–권역 전문지원'의 3대 핵심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 지역포화형 예방: 학교·직장·마을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및 주민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사회 규범과 예방문화 형성
  - 생활권 조기발견·연계: 읍·면·동 생활권의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복지기관 및 주민조직 등을 통해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신고 및 전문기관으로 연계
  - 권역 전문지원: 권역별 전문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상담·법률·의료·심리·긴급지원 및 고위험·복합사례에 대응하고,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그림 2]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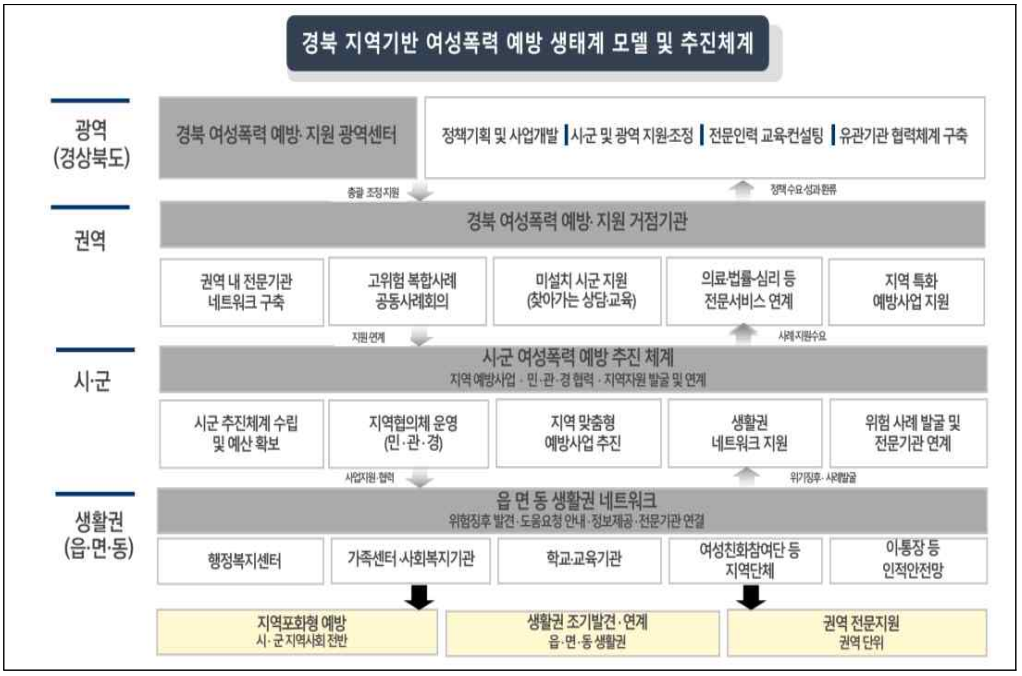
-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역량을 강화하고, 생활권에서 발견된 위험징후가 전문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3)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추진체계

-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권역–시·군–읍·면·동 생활권의 4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하여 상호 연계하도록 함
  - 광역: 경상북도와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사업 개발, 권역·시군 지원 및 조정, 전문인력 교육, 자원연계,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 권역: 「권역별 여성폭력 예방·지원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서비스 연계, 고위험·복합사례 지원, 찾아가는 상담·교육 및 취약지역 지원
  - 시·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사업 추진, 민·관·경 협력체계 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생활권 네트워크 지원
  - 읍·면·동 생활권: 주민 접점의 기관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험징후 조기발견, 지원정보 제공 및 전문기관 연계 등 게이트웨이 기능 수행
- 추진체계는 일방적인 수직적 전달방식이 아닌 상호지원과 정책수요 환류가 이루어지는 순환적 협력체계로 운영함. 생활권과 시·군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서비스 공백을 권역·광역 차원으로 환류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예방–조기발견·연계–전문지원–정책환류–예방 강화'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4)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추진체계

-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는 '지역포화형 예방–생활권 조기발견·연계–권역 전문지원'의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결합한 다층적 예방체계로 구축함
- 이를 위해 학교·직장·마을 등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생활권 기관을 통한 위험징후 조기발견과 전문기관 연계, 권역별 전문자원 공동 활용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함. 또한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지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지원체계를 운영함



[그림 VI-2]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및 추진체계

5)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경상북도의 농산어촌 중심 생활환경, 높은 고령화율, 넓은 지리적 범위와 지역 간 여성폭력 지원 인프라 격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포화형 예방–생활권 조기발견·연계–권역 전문지원'을 핵심 축으로 하는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정책 조정과 시·군의 실행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예방활동부터 위험징후 조기발견, 전문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회복까지 포괄하는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함

<표 1>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정책제안
Ⅰ.지속가능한 지역기반 예방 거버넌스 구축	1-1. 경북 여성폭력 예방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설치·운영
	1-2. 시·군 여성폭력 예방 추진기반 강화	경북 시군 여성폭력 예방 추진기반 강화(제도)
	1-3.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경북 여성폭력 예방·안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
Ⅱ. 지역사회 전반의 여성폭력 예방기반 강화	2-1. 지역 맞춤형 여성 안전 생활환경 조성	주민 참여형 여성 안전 활동사업 **「우리 동네 여성 안전 프로젝트」**
	2-2. 생애주기·대상별 실천형 예방교육 강화	생활공간 연계형 예방교육 **「우리 동네 존중이음」**
	2-3. 생활밀착형 여성폭력 예방·정보 접근체계 구축	주민 생활공간 여성안전 정보망 **「우리 동네 안전 도움 안전망」**
Ⅲ. 생활권 기반 조기발견 및 예방역량 강화	3-1.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웨이 구축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 **「우리 동네 안전 연결소」**
	3-2. 지역주민 참여형 여성안전 인적 안전망 구축	주민 참여형 인적 안전망 구축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3-3. 여성폭력 위험인지 및 주변인 조기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듣고, 믿고, 연결하기」**
Ⅳ. 지역격차 없는 피해자 지원 ·전문연계 강화	4-1. 농산어촌 찾아가는 여성폭력 지원서비스 강화	농산어촌형 통합지원서비스 고도화 **「네잎클로버 플러스(+)」**
	4-2. 권역별 여성폭력 전문지원 연계체계 구축	권역별 여성폭력 통합사례회의 정례화·제도화
	4-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보호·주거 및 회복지원 강화	경북 여성폭력 긴급안전주거 지원사업 운영

□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예방 거버넌스 구축**

- 여성폭력 예방정책이 개별 기관이나 사업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개선하고, 광역-권역-시·군-생활권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예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설치·운영을 제안함. 광역센터는 기존 전문기관의 상담·긴급보호 기능을 대체하기보다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예방정책 기획과 사업개발, 시·군 및 권역 지원·조정, 전문인력 교육·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성과관리 등의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설치·운영**

【사업 대상】
-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여성폭력 예방·지원관련 기관

【사업 주요 내용】
- 경북 여성폭력 예방정책 기획·연구 및 사업 개발
- 시·군 여성폭력 예방정책 수립·사업 추진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도·시군 여성폭력 예방사업 및 지역자원 조사·관리·조정
- 지역별 여성폭력 예방환경 및 정책 사각지대 조사·분석
- 여성폭력 예방교육·캠페인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확산
-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운영 및 모니터링·성과관리
- 1366 경북센터, 여성폭력 전문기관 등과 정책·사업 연계체계 구축

【운영체계】
- 광역센터(예방정책 기획·조정·지원) ↔ 1366 경북센터(상담·긴급보호·위기대응) ↔ 시·군 (지역 예방정책 실행)

- 또한 시·군별 여성폭력 관련 조례 정비, 예방계획 수립,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의 예방 추진기반을 강화함. 특히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의 책임성을 높이고, 민·관·경 협력체계와 생활권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경북 시군 여성폭력 예방 추진 기반」 강화**

【사업 대상】
- 경북 22개 시·군

【사업 주요 내용】
- 시·군 여성폭력 관련 조례 정비 및 예방계획 수립 지원
-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예방 특화사업 발굴·지원
- 여성폭력 예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군 자체예산 확보 및 도비 지원
- 시·군, 민·관·경 협력체계 및 읍면동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운영
- 상담소 등 전문기관 미설치 지역의 예방·상담·전문기관 연계 등 필수서비스 지원 강화
- 광역 컨트롤타워를 통한 사업 컨설팅·담당자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정책제안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 예방·지원 자체 예산」 확보**

【사업 목표】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 주민이 인근 지역의 전문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기관 소재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미설치 시·군의 여성폭력 예방·지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전문기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주민이 필요한 여성폭력 예방·상담 및 전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 대상】
- 여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

【사업 주요 내용】
- 시·군 여성폭력 관련 조례 정비 및 여성폭력 예방·지원 자체예산 편성

- 아울러 안전환경, 여성폭력 인식과 예방역량, 피해지원 접근성 등을 포함한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별 취약요인과 정책성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군 예방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함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사업 대상】
- 경북 22개 시·군

【사업 주요 내용】
- 경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개발
- 안전환경, 여성폭력 인식·예방역량, 피해지원 접근성, 지역사회 추진기반 등 영역별 지표 구성
- 행정통계와 주민 체감안전·인식조사를 연계한 시·군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시·군별 여성폭력 예방·안전수준 및 취약영역 분석
- 모니터링 결과를 시·군 예방계획 및 사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체계 구축

【추진주체】
- 경북 여성폭력 예방 광역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지표 관리·분석 및 시·군 정책 환류

□ 지역사회 전반의 여성폭력 예방기반 강화

- 여성폭력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사회 규범과 예방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먼저, 지역 맞춤형 여성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취약공간 진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읍·면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추진함. 도시지역은 스마트 안전기술, 읍 지역은 생활거점과 이동경로, 면 지역은 조명 및 방치공간 개선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안전환경을 조성하며, 가칭 「우리 동네 여성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참여를

정책 제안 **주민 참여형 여성 안전 활동 사업 (가칭)「우리 동네 여성안전 프로젝트」**

【사업 대상】
- 시·군별 읍·면·동 단위 여성안전 취약 생활권 선정
- 여성, 청소년·청년, 장애인, 이주민, 중·고령층 등 다양한 주민 참여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주민자치회,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기존 주민조직과 연계

【사업 주요 내용】
-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고령층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권 안전지도 제작
- CCTV·조도·빈집·골목길 등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도움 요청 및 지원기관 접근성 등 사회적 안전환경 점검
- 주민이 발굴한 위험요인을 시·군, 경찰, 여성폭력 전문기관 등과 공유하여 개선과제로 연계하고, 개선 후 주민 재점검을 통해 정책 환류
-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여성안전 생활권 모델 구축

• 다음으로 생애주기·대상별 실천형 예방교육을 강화함. 청소년·청년층에는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중장년·고령층에는 가정폭력과 정서적·경제적 폭력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차별화하고, 장애인·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함. 특히 단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위험신호 인지, 도움 요청, 주변인 대응 및 전문기관 연계까지 실습하는 참여형 교육을 추진함

정책 제안	**생활공간 연계형 예방교육 (가칭)「우리 동네 존중이음」**

【사업 대상】
- 읍·면·동 생활권
- 이·통장 등 지역 인적안전망 참여자는 기본교육 이수를 활동요건으로 설정
- 도·시군 여성폭력 예방 관련 보조·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예방교육 이수를 사업 선정·성과관리와 연계

【사업 주요 내용】
- 학교·가정·직장·복지기관·마을·체육시설 등 주민이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존중·성평등·폭력 불용·주변인 실천의 공통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
- 대상과 생활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토론·캠페인 등 참여·실천형 예방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아동·청소년은 존중·동의·디지털성범죄, 청년은 교제폭력·스토킹·건강한 관계, 부모는 성평등한 양육·돌봄, 중장년·고령층은 가정폭력·정서적·경제적 폭력과 위험신호 중심 교육
- (대상 특성별 맞춤교육) 이주여성은 다국어·문화적 접근성을 고려한 폭력 인지 및 도움 요청 정보, 장애여성은 장애유형과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한 폭력 위험신호·자기보호·신고 및 지원기관 이용방법 중심 교육

• 또한 생활밀착형 여성폭력 예방·정보 접근체계를 구축함. 행정복지센터, 병원·약국, 편의점, 복지기관, 학교, 직장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폭력 예방정보와 피해지원기관 이용방법을 제공하고, QR 기반 통합정보망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정책제안 **주민 생활공간을 활용한 여성안전 정보망 (가칭)「우리 동네 안전 도움 정보망」**

【사업 대상】
- 정보 접근 취약 지역 생활권

【사업 주요 내용】
- (생활밀착형 여성안전 정보접점 확대) 행정정보센터,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공공·지원 정보 상시 비치
- (민간 생활공간 활용 정보망 구축) 병원·약국, 편의점, 미용실, 카페, 숙박시설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간 생활공간 정보 제공
- (대상·생활공간별 맞춤정보 제공) 학교·대학, 산업단지·기업 등 청소년·청년 및 근로자의 주요 생활공간에도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
- (찾아가는 여성안전 정보 제공) 지역축제·장터·문화행사 등 주민 밀집공간과 연계한 찾아가는 정보제공 실시
- (경북여성안전 도움정보 QR 구축) 폭력 위험신호, 대응 방법, 1366·해바라기센터·상담소 등 지역별 전문지원기관과 지원내용을 하나의 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조기발견 및 예방역량 강화

- 피해자가 전문기관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과 가까운 생활권에서 여성폭력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웨이를 구축함.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복지관, 학교 등 주민 접점의 기존 기관을 가칭「우리 동네 안전 연결소」로 활용하여 위험징후 발견, 초기 안내, 상담·신고 및 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생활권 기관은 직접적인 전문상담이나 피해 판단보다 안전한 연계에 중점을 두도록 함

정책제안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 (가칭)「우리 동네 안전 연결소」**

【사업 대상】
- 여성폭력 전문지원기관 접근성이 낮거나 조기발견·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한 읍·면·동 생활권

【사업 주요 내용】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웨이 지정·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경찰·의료기관 등 전문지원기관과의 신속 연계체계 구축

• 또한 지역주민 참여형 여성안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함. 이·통장, 생활지원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기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가칭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를 양성하고, 위험신호 인지와 안전한 도움 제공, 전문기관 연계 역량을 강화함. 아울러 기존 「반딧불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장애여성·이주민 등 지원 취약대상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함

정책제안 **지역주민 참여형 여성안전 인적 안전망 구축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사업 대상】
- 여성폭력 전문지원기관 접근성이 낮거나 조기발견·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한 읍·면·동 생활권

【사업 주요 내용】
- 이·통장, 생활지원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성친화도시 위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발굴·양성
- 여성폭력 위험신호 발견 및 주변인 대응교육 실시
- 지역주민-생활권 게이트웨이-전문기관 연계체계 구축

정책제안 **기존 여성장애인 특화 사업에서 대상·지역 확대 「반딧불 프로젝트 +」**

【사업 대상 확대】
- 여성폭력 피해 위험이 크거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이주민으로 대상 확대

【사업 지역 확대】
- 포항·구미·경산·안동 등 권역 중심의 사업을 경북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의 거주지역에 따른 안전·지원 격차 완화

【사업 내용】
- 포항·구미·경산·안동 등 권역 중심의 사업을 경북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안전·지원 격차 완화

• 이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주변인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함.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산시키는 지역문화를 개선하고, '듣고-믿고-연결하기'의 실천원칙을 학교·직장·마을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확산함. 이를 통해 주민이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예방 주체로 참여하도록 함

정책제안 **피해자 중심 지역사회 인식 개선 교육·캠페인「듣고, 믿고, 연결하기」**

【사업 대상】
-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

【사업 주요 내용】
- ('듣고-믿고-연결하기' 피해자 중심 행동원칙 확산) 피해자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기, 피해자의 경험과 의사를 존중하기, 필요한 경우 전문지원기관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기 등 공통 실천메시지 개발·확산
- (생활공간 중심 캠페인 전개) 학교·대학, 직장·산업단지, 복지기관, 마을·경로당, 지역축제·문화행사 등 주민의 주요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포스터·카드뉴스·영상·참여형 캠페인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

□ 지역 격차 없는 피해자 지원·연계체계 강화

- 여성폭력 전문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경상북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역과 이동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상담·보호·의료·법률·심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먼저, 농산어촌 찾아가는 여성폭력 지원서비스를 강화함. 기존「네잎클로버 사업」을 기반으로 전문기관 미설치지역과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정복지센터·보건소·가족센터 등 생활권 기관을 상담거점으로 활용함. 특히 고령여성·장애여성·이주여성의 이동, 의사소통,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제안 **기존 찾아가는 상담사업을 농산어촌형 통합지원서비스로 고도화「네잎크클로버 +」**

【사업 대상】
- 여성폭력 전문지원기관 접근성이 낮은(특히 여성폭력상담소 미설치 지역) 군 지역 및 읍·면 지역

【사업 주요 내용】
- 상담소 미설치 군 및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확대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보건지소, 가족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한 생활권 상담거점 운영
- 초기상담-전문상담-의료·법률·심리-보호-사후관리 통합연계
- 고령여성·장애여성·이주여성 등 접근 취약계층 맞춤지원
- 익명성·비밀보장 및 안전을 고려한 상담방식 운영

【추진체계 및 재원분담】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군-권역별 여성폭력 상담·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찾아가는 상담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 다음으로 권역별 여성폭력 전문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함. 경북의 지리적 여건과 전문기관 분포를 고려하여 동부·서부·남부·북부의 4개 권역에 기존 전문기관을 활용한 거점체계를 마련하고, 상담·의료·법률·심리 등 전문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함. 또한 권역별 실무협의회와 통합사례회의를 정례화하여 고위험·복합사례에 대한 공동판단, 기관별 역할분담,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함

정책제안 **「권역별 여성폭력 통합사례회의 정례화·제도화」**

- 고위험·복합사례 발생 시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사례 판단-기관별 역할분담-서비스 연계-사후관리를 수행하는 통합사례회의 운영
- 청소년안전망의 통합사례회의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조례 또는 운영지침에 회의 구성·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

정책제안 **「경북 권역형 여성폭력 전문지원 네트워크」 운영**

【사업 대상】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시·군,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정신건강·복지기관 등 권역별 여성폭력 관련 기관

【사업 주요 내용】
- 권역별 전문지원 네트워크 구성 :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분포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거점 전문기관 지정
- 권역별 실무협의회 정례 운영 : 분기별 등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지원 현황 및 지역별 피해지원 수요 공유. 기관 간 의뢰·연계 과정의 문제점 및 지원공백 점검, 개선방안 공동 논의
- 상담소 등 전문지원기관이 부족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 거점기관의 사례자문, 찾아가는 상담, 실무자 교육, 공동사례관리 및 전문서비스 연계 지원

【추진체계 및 재원분담】
- 여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찾아가는 상담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보호·주거 및 회복지원을 강화함. 경찰·상담기관·긴급피난처 간 신속한 연계와 긴급보호 운영기반을 개선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와 심리·정서적 회복, 경제적 자립 및 장기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긴급보호 연계체계」 강화**

【사업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 중 긴급분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및 긴급피난처 운영기관

【사업 주요 내용】
- 경찰-1366-상담소 간 긴급피난처 이용정보 공유 및 24시간 의뢰·입소 연계체계 강화 · 긴급피난처 미설치지역의 1366 및 권역별 전문기관 연계
- 이동·동행지원 · 야간·휴일 긴급출동에 따른 시간외수당, 당직·대체인력 등 운영비 지원 · 현장 출동비, 긴급의료비 등 공동대응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긴급안전주거 지원사업」 운영**

【사업 대상】
- 긴급피난처 퇴소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분리 및 독립적인 주거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

【사업 주요 내용】
-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및 기존 주거자원을 활용한 소규모·분산형 안심주거 확보
- 긴급보호 이후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 및 주거비·이사비 등 주거유지 지원
- 법률·심리·복지·취업 등 회복·자립서비스 연계 · 1366, 시·군, 여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한 입주-사례관리-자립-퇴거 후 사후관리 연계

- 이상의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는 광역 차원의 정책기획·조정, 시·군의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생활권의 위험징후 조기발견·연계, 권역의 전문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둠
- 이를 통해 개별 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가 예방에 참여하고, 생활권에서 발견된 위험이 전문지원으로 연결되며,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수요가 다시 예방정책에 반영되는 '예방-조기발견·연계-전문지원-정책환류'의 지속가능한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상에서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 등 예방 및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간 예방·지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통합한 실행 중심의 정책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사업「우리 동네 여성안전 함께 ON」

우리 동네에서 예방하고, 함께 살피고, 안전하게 연결한다.

【주관 기관】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협력 기관】 **경북 여성폭력지원 기관, 여성폭력상담시설협의회, 경찰, 공공·민간 지역기관 및 주민조직**

【사업 목표】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예방 공백 해소 및 지역 간 예방·지원 격차 완화
- 광역센터 중심의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지원과 시·군의 예방 책임성 강화
- 생활권 조기발견·연계와 권역 전문지원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대상】

- 경북 22개 시·군 중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 12개 지역
- 여성폭력 전문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읍·면 지역 및 안전 취약 생활권
- 지역주민, 생활권 기관 종사자, 주민조직 및 여성폭력 예방·지원 관련 기관

【사업 주요 내용】

① 광역센터 중심의 미설치지역 예방사업 집중지원

- 미설치지역의 여성폭력 예방환경, 위험요인, 주민 인식 및 지역자원 조사·분석
- 여성폭력 예방교육·캠페인, 주민참여형 안전환경 개선 등 지역포화형 예방사업 개발·보급
-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를 활용한 미설치지역 예방·안전수준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② 생활권 중심의 예방교육 및 여성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 학교·직장·복지기관·마을회관·경로당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우리 동네 존중 이음」** 예방교육 운영
- 청소년·청년, 중장년·고령층, 장애여성·이주여성 등 생애주기와 대상 특성을 반영한 실천형 예방교육 실시
- 병원·약국, 편의점, 복지기관 등 공공·민간 생활공간을 활용한 **「우리 동네 안전 도움 정보망」** 구축

- 여성폭력 위험신호, 대응방법, 1366·해바라기센터·상담소 등의 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QR 기반 정보 접근체계

③ 주민참여형 안전환경 개선 및 생활권 조기발견체계 구축

- **「우리 동네 여성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참여형 안전 취약공간 진단, 생활권 안전지도 제작 및 지역 맞춤형 CPTED 추진
- 가족센터, 복지관 등 기관을 **「우리 동네 안전 연결소」**로 지정하여 위험징후 발견–초기 안내–전문기관 연계 기능 수행
- 이·통장, 생활지원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성친화시민단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발굴·양성
- 피해자 중심 대응원칙과 비밀보장·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듣고–믿고–연결하기」** 실천지침 개발 및 교육

④ 권역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피해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네잎클로버+」**를 활용한 미설치지역 찾아가는 상담·지원 확대
- 미설치지역의 가족센터, 복지관 등을 생활권 기관을 상담거점으로 활용하고, 권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의료·법률·심리·보호서비스 연계
- 장애여성·고령여성·이주여성 등 지원 취약대상을 위한 **「반딧불 프로젝트+」** 확대 및 이동·통행·통변 지원

⑤ 미설치지역 예방협력체계 운영 및 성과관리

- 미설치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민·관·경 및 생활권 기관·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예방협력체계 구축
- 시·군별 예방협력회의 정례화를 통한 지역 위험요인,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기관 간 연계과제 공유
- 광역센터와 1366 경북센터, 권역 전문기관 간 예방·지원 연계체계 운영 및 역할 조정
- 예방교육,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생활권 안전망 운영 및 전문기관 연계 실적 등 성과관리
- 미설치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사업 개선·확산

【추진체계】

- 경상북도: 사업총괄, 행정·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여성폭력 지원기관 미설치 지역 예방사업 기획·개발, 미설치지역 집중지원, 여성폭력 예방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관리
- 시·군 및 지역기관: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실행, 주민참여 활성화, 위험징후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 경북 여성폭력지원기관 및 여성폭력상담시설협의회: 찾아가는 상담, 전문서비스 연계, 긴급보호 및 피해자 사례관리

【기대효과】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예방 공백 해소와 지역 간 여성안전 격차 완화
-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정보제공·조기발견이 연계되는 생활밀착형 예방체계 구축
- 광역센터의 예방지원 기능과 권역 전문기관의 피해지원 기능을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 주민참여와 시·군의 실행역량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조성

목 차

Ⅰ. 서론 ····· 01
1. 연구의 필요성 ····· 03
2. 연구의 목적 ····· 05
3. 연구의 내용 ····· 05
4. 연구의 방법 ····· 07
5. 연구 추진체계 ····· 09

Ⅱ.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과 다기관 협력적 접근 ····· 11
1. 여성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 13
2.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의 개념과 필요성 ····· 15
3.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 구축과 다기관 협력 ····· 17

Ⅲ. 경상북도 여성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 분석 ····· 27
1. 경상북도 인구학적·지리적 특성 ····· 29
2. 경상북도 여성폭력 발생 현황 ····· 34
3.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 및 지원체계 현황 ····· 38
4. 소결 ····· 55

Ⅳ.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 조사 ····· 57
1. 조사개요 ····· 59
2. 조사결과 ····· 64
3. 소결 ····· 101

Ⅴ.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107
1. 조사개요 ····· 109
2. 조사결과 ····· 111
3. 소결 ····· 122

Ⅵ.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 125
1.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의 기본 방향 ····· 127
2.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 130
3.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추진체계 ····· 132
4.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136
5.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167

참고문헌 ····· 177
부록 ····· 181

표 목 차

<표 Ⅰ-1>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주요 내용 ····· 08
<표 Ⅰ-2> FGI 조사 주요 내용 ····· 08

<표 Ⅲ-1> 경상북도 고령인구 현황(2025년 기준) ····· 29
<표 Ⅲ-2> 경상북도 고령 단독가구 비율(2024년 기준) ····· 30
<표 Ⅲ-3> 경상북도 장애인 비율(2025년 기준) ····· 31
<표 Ⅲ-4> 경상북도 내국인 및 외국인 현황(2025년 기준) ····· 32
<표 Ⅲ-5> 경북경찰청 성·가정폭력 검거현황 ····· 34
<표 Ⅲ-6> 시·도 경찰청별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발생 현황 ····· 35
<표 Ⅲ-7> 시·도청별 가정폭력 신고건수 ····· 36
<표 Ⅲ-8> 성 풍속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 ····· 37
<표 Ⅲ-9>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지역별 발생 현황 ····· 37
<표 Ⅲ-10> 경상북도 지자체 여성폭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황 ····· 39
<표 Ⅲ-11>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상담 및 지원실적 ····· 41
<표 Ⅲ-12> 경북 해바라기 지원 실적(2025년) ····· 42
<표 Ⅲ-13> 경상북도 성폭력 상담소 지원 실적(2025년) ····· 42
<표 Ⅲ-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2025년) ····· 43
<표 Ⅲ-15>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실적(2025년) ····· 44
<표 Ⅲ-16> 경상북도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실적(2025년) ····· 44
<표 Ⅲ-1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2025년) ····· 45
<표 Ⅲ-18> 반딧불프로젝트 지원실적 ····· 46
<표 Ⅲ-19> 네잎클로버 지원실적 ····· 47
<표 Ⅲ-20> 경상북도 여성폭력지원기관 현황 ····· 48
<표 Ⅲ-21> 경상북도 시군별 여성폭력방지시설 분포 및 인구·면적 대비 시설 입지 수준 ····· 51
<표 Ⅲ-22> 경상북도 시군별 지역사회 복지 지원 인프라 현황 ····· 54

<표 IV-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 59
<표 IV-2> 조사대상자 일반적인 특성 ····· 62
<표 IV-3> 성별에 따른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N=867) ····· 66
<표 IV-4> 시군에 따른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N=867) ····· 66
<표 IV-5> 성별에 따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의 충분성(N=867) ····· 68
<표 IV-6> 시군에 따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의 충분성(N=867) ····· 68
<표 IV-7>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의 충분성(N=867) ····· 69
<표 IV-8> 거주 행정구역별 안전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순위별 가중치) ····· 70
<표 IV-9> 권역간 여성폭력 인지도 차이 검증(N=867) ····· 73
<표 IV-10> 성별에 따른 지역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N=867) ····· 75
<표 IV-11> 시군에 따른 지역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N=867)75
<표 IV-12> 행정구역에 따른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N=867) ··· 76
<표 IV-13>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 ·· 78
<표 IV-14> 성별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N=867) ····· 81
<표 IV-15>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보호받는 정도 ····· 82
<표 IV-16>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을 본 경험 여부 ····· 89
<표 IV-17> 성별에 따른 거주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전문기관 충분성에 대한 인식(N=867) ····· 98

<표 Ⅴ-1> FGI 및 심층면접 질문 ····· 109

<표 VI-1>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의 구성축별 기능과 범위132
<표 VI-2>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137
<표 VI-3> 경북 시·군 CPTED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146
<표 VI-4> 생애주기별 대상별 여성폭력 예방 교육 추진 방안 ····· 150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 절차 ····· 09

[그림 Ⅱ-1] 미국 여성폭력방지법의 다기관 협력체계 ····· 21

[그림 Ⅲ-1] 도비 지원 민·관·경 협력 지원사업 ····· 46
[그림 Ⅲ-2] 여성폭력 방지시설 미설치 지역 ····· 49

[그림 Ⅳ-1] 거주 동네의 전반적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 64
[그림 Ⅳ-2] 야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 ····· 65
[그림 Ⅳ-3]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 충분성 ····· 67
[그림 Ⅳ-4] 안전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 ····· 69
[그림 Ⅳ-5] 여성폭력 인지도 ····· 72
[그림 Ⅳ-6] 여성폭력 소식 접하는 정도 ····· 74
[그림 Ⅳ-7] 여성폭력의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 74
[그림 Ⅳ-8]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 ··· 77
[그림 Ⅳ-9]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 80
[그림 Ⅳ-10] 여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 ··· 83
[그림 Ⅳ-11] 폭력 허용도 ····· 85
[그림 Ⅳ-12] 폭력 피해 두려움 ····· 86
[그림 Ⅳ-13]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 경험 여부 ····· 88
[그림 Ⅳ-14]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을 보게 된 경로 ···· 89
[그림 Ⅳ-15] 현재 거주 지역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 서비스 인지 여부 ····· 90
[그림 Ⅳ-1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 90
[그림 Ⅳ-17] 폭력 경험 여부 ····· 91
[그림 Ⅳ-18]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 91

[그림 Ⅳ-19]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 ····· 92
[그림 Ⅳ-20] 이웃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응답자의 행동 ····· 92
[그림 Ⅳ-21]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 여부 ····· 94
[그림 Ⅳ-22] 여성폭력지원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94
[그림 Ⅳ-23] 이용과정에서 불만족 스럽거나 아쉬운 점 ····· 95
[그림 Ⅳ-24] 여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운영 만족도 ····· 95
[그림 Ⅳ-25] 거주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전문기관 충분성 97
[그림 Ⅳ-26] 경북에서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 98
[그림 Ⅳ-27]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 ····· 99

[그림 Ⅵ-1]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구성요소 ····· 131
[그림 Ⅵ-2]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및 추진체계 ····· 135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방법
5. 연구 추진체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여성폭력은 과거 가정 내 문제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던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여성폭력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가 서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피해자의 삶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이주민 및 노인 등 복합적 취약성을 지닌 대상자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단일 기관의 분절된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수사·의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대응 체계가 요구됨

○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양상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음. 나아가 사후적 대응뿐만 아니라 폭력의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음

○ 특히 최근 수립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서는 앞서 언급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과 예방 생태계 조성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

○ 해외 주요국 또한 이미 다기관 협력(Multi-agency approach)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 이후 경찰, 검찰, 피해자 옹호단체 간의 지역 파트너십을 의무화하였고, 영국은 제3섹터와 지역사회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수립해 운영 중임

○ 이처럼 여성폭력 유형의 복합적 양상,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복합적 취약성을 지닌 대상자의 여성폭력 대응의 패러다임은 예방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다기관 협력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지리적·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경상북도의 경우 기존의 보편적 정책 모델을 그

대로 적용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함

- ❍ 복합적인 피해 양상과 대상자별 특수한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적 한계가 있음
- ❍ 첫째,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로 인한 접근성의 한계임. 경북은 도서·산간 지역이 넓게 분포하여 피해 발생 시 긴급 출동 및 전문 보호시설로의 물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음. 넓은 면적과 제한적인 대중교통은 피해자가 적기에 지원을 받는 데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되며 이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로 이어짐. 즉 도내 거점 도시를 제외한 다수의 군 단위 지역에는 전문상담소나 보호시설이 부재하는 등으로 거주지에 따른 지역 격차가 발생함
- ❍ 둘째, 경북의 고령화율과 도·농 복합 구조는 여성폭력의 비가시성임. 읍·면·동 단위의 광범위한 농산어촌 지역은 물리적 거점 중심의 지원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보수적인 공동체 문화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구 내부나 마을 단위에서 은폐되거나 방치될 위험이 높음. 특히 고령 여성의 경우 폭력을 인지하는 감수성이 낮고 외부 도움 요청에 소극적이어서 사법·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 셋째, 취약계층의 다변화에 따른 생활권 기반 안전망의 부재임. 1인 가구 여성,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등 복합적 취약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 반경 내에서 작동하는 촘촘한 안전망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의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은 대개 일회성 또는 형식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실제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 넷째, 기관 간 파편화된 대응 체계의 통합 필요성임. 도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1366센터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주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취약 지역 단위에도 가족센터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범용적 복지망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재한 외곽 지역과 거점 전문기관을 잇는 유기적인 연계망이나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거버넌스 모델은 미흡한 실정임
- ❍ 더욱이 현재의 지역 내 대응 체계는 폭력 발생 이후의 응급조치와 가해자 처벌 등 '2차 예방'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음.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각을 높이는 1차 예방과 피해자의 사후 적응 및 자립을 돕는 3차 예방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다기관 협력 접근법(Multi-agency Approach)'과

같이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결합된 선순환 생태계 설계가 시급한 시점임

○ 따라서 도농 복합 구조와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 경상북도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보호하고 일반적 여성폭력을 사전에 감지·차단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지리적·인구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여성폭력의 비가시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대응–회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여성폭력 대응을 사후 개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합적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지리적·인구학적 특수성과 여성폭력의 구조적 비가시성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대응–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선순환적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먼저, 지역 밀착형 예방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고자 함. 경상북도 농산어촌 지역은 폐쇄적 공동체 구조와 높은 고령화로 인해 여성폭력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성'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예방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읍·면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이장, 부녀회 등 마을 리더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상적 생활권 내에서 위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자 함

○ 나아가 여성폭력을 개인 또는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안전 문

제'로 재정의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 둘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디지털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모색할 것임. 경상북도는 산간·오지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전문 서비스 기관과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으며, 특히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이동성과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기존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 또한 AI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망 구축을 병행함. AI 음성인식 기반 비상벨, 스마트 안심 애플리케이션 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 ❍ 다만,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마을 단위 인적 안전망 및 지자체 공공 대응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장 인력, 지역 공동체, 디지털 기술이 상호 연계되는 '경북형 스마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예방–조기 감지–신속 대응으로 이어지는 작동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자 함
- ❍ 셋째, 다기관 협력 기반 통합지원 및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함. 여성폭력 피해는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의료, 법률, 심리·정서 지원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으로, 기관 간 연계 부족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
- ❍ 이에 따라 도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가족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연계 모델을 설계하고자 함
- ❍ 특히 이주여성, 고령 여성, 장애인 등 복합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수사–의료–법률 지원이 단절 없이 제공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회복 이후 자립까지 연계되는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의 ‘2차 예방’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1차 예방)과 회복 및 재발 방지(3차 예방)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대응체계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함
❍ 이에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지역사회 중심 예방 거버넌스 개념
- 해외 선진 모델 및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 경상북도 여성폭력 실태 및 지역 특수성 진단
- 경북의 인구학적 통계 및 지리적 한계 분석
- 여성폭력 대응체계 현황과 한계점
❍ 도민 및 전문가 대상 인식 및 요구도 조사
- 폭력에 대한 감수성, 예방 인프라 체감도 등 조사
❍ 경상북도 지역 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조성
- 경상북도 지역 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모델 제안

4.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논문 및 정책보고서 등 문헌 분석
❍ 도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22개 시군 성인 남녀 867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및 분석
- 도민 12명 대상(청소년 3명, 청년 2명, 중고령 2명, 이주민 2명, 장애인 3명) 심층면접

<표 Ⅰ-1>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사회 안전 및 폭력 인식	• 거주 지역의 안전 민감도 • 지역사회 여성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 등
폭력 허용도 및 폭력 피해 두려움	• 폭력의 민감도, 여성폭력 두려움 등
지역 기반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	• 여성폭력 관련 교육 및 캠페인 여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도 등
정책 및 인프라 만족도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 인터뷰

- 현장 전문가 11명(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장 3명,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종사자 및 기관장 2명, 가족센터 센터장 2명, 경찰(APO) 2명,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2명) 대상으로 심층 면접

<표 Ⅰ-2> FGI 조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사회 여성폭력 실태 및 인프라 진단	• 경북지역의 여성폭력 양상 • 지원기관 및 배치의 지역별 수요 정도 등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의 연계 체계(거버넌스)	• 민·관·경 협력체계 현황 및 한계 • 주민 참여 안전망 구축 방안 등
지역 밀착형 예방 생태계 구축	• 주민 참여형 안전망 구축 활성화 방안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 생태계 조성 방안 등
정책 제언 및 제도적 보완	•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안 • 지역사회 폭력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등

5. 연구 추진체계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단계 연구 설계	• 연구목적 등 세부목차 작성	문헌조사
2단계 자료 분석	•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지역사회 중심 예방 거버넌스 개념 – 해외 선진 모델 및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 경상북도 여성폭력 실태 및 지역 특수성 진단 – 경북의 인구학적 통계 및 지리적 한계 분석 – 여성폭력 대응체계 현황과 한계점	문헌조사
3단계 조사 연구	• 도민 대상 설문조사 867명 • 도민 대상 심층면접 12명 • 전문가 대상 FGI 11명	조사분석
4단계 효과성 검증 및 결과 도출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 연구 결과 전문가 자문 • 결과 기반 경북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결과 도출
5단계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	연구성과 확산

[그림 Ⅰ-1] 연구 절차

Ⅱ.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과 다기관 협력적 접근

1. 여성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2.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의 개념과 필요성
3.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 구축과 다기관 협력

Ⅱ.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와 다기관 협력적 접근

1. 여성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인권 담론의 확산과 함께 국가 및 사회가 개입해야 할 공적 의제로 재구성되어 왔음. 초기 대응은 주로 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둔 사후 개입 중심의 접근이었으며, 이는 단기적 피해 완화에는 기여하였으나 폭력의 구조적 원인 해소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여성폭력 대응은 '예방 중심 접근(preventive approach)'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황정임 외, 2024). 이는 폭력 발생 이후의 대응에 국한되지 않고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과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의 전주기적 대응체계로 개념화됨(장미혜, 2014). 특히 1차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김정혜, 2021, 정혜원 외, 2024)

○ 한편, 여성폭력의 유형이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다층화·복합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 중심의 대응체계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따라 수사, 사법, 의료, 상담, 복지 등 다양한 영역 간의 협력적 연계를 강조하는 다기관 협력 접근(Multi-agency approach)이 주요 대응 모델로 자리잡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

○ 정책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반영해 왔음. 지난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법무부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성평등가족부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통합지원 사업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통

합상담소 확대'를 추진함. 이어 현 정부에서도 대표 국정과제로 여성폭력,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또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서도 여성폭력 통합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음. 이에 지역에서도 지방 여성폭력방지정책위원회 활성화, 광역단위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음(성평등가족부, 2025)

- ❍ 이러한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됨
- ❍ 지역사회 기반 대응은 여성폭력을 공동체 안전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조기 감지 및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됨. 지역사회 기반 접근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공동체 역량(community capacity)을 활용하여 비공식적 통제와 상호 돌봄을 강화함으로써(Sampson et al., 1997; Putnam, 2000; Kawachi & Berkman, 2000), 제도적 대응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함. 또한 이는 예방 중심 패러다임과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 나아가 이러한 접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
- ❍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방식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디지털 기반의 안전망은 위기 상황의 실시간 감지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인적 자원 중심의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김애라, 2025). 이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대응 공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됨
- ❍ 종합하자면, 여성폭력 대응 패러다임은 사후 개입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단일기관 대응에서 다기관 협력으로, 공공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참여 기반으로, 나아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통합적 대응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변화는 여성폭력 문제의 복합성과 구조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함

2.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의 개념과 필요성

1)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의 개념

- ❍ 여성폭력은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회성 사건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 성차별적 문화와 규범, 권력관계, 경제적 불평등,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임
- ❍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여성폭력 정책은 과거 피해 발생 이후의 보호와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community-based prevention model)'이 중요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음(WHO, 2002)
- ❍ 지역사회 기반 여성폭력 예방모델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예방 생태계로 인식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여성폭력 지원기관, 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의미함
- ❍ 이는 여성폭력을 특정 기관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임
- ❍ 이러한 모델은 사회생태학적 모델(Socio-Ecological Model)을 이론적 기반으로 함(Heise, 1998, WHO, 2002).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여성폭력이 개인 수준뿐 아니라 가족과 친밀한 관계,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수준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함.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 개선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과 제도, 조직문화, 사회규범을 함께 변화시키는 다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봄
- ❍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은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직장의 성희롱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주민 참여형 캠페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또한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은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을 포괄하는 예방체계를 지향함. 즉, 지역사회 기반 예방모델은 예방과 조기개입, 피해자 지원, 회복까지를 하나의 연속적인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적 예방모델이라 할 수 있음

2) 지역사회 기반 여성폭력 예방모델의 필요성

○ 지역사회 기반 여성폭력 예방모델의 필요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논의될 수 있음

○ 첫째, 여성폭력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음. 피해자는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심리치료,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지만, 기관 간 협력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지원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둘째, 여성폭력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발생 양상과 위험요인이 다르게 나타남. 대도시와 농산어촌은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접근성이 상이하며, 고령화, 인구감소, 이주여성 증가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예방정책도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 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모델이 필요함

○ 셋째, 여성폭력 예방은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임.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뿐 아니라 의료비, 사법비용, 사회적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반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문화 조성, 건강한 관계 교육, 주민 참여형 캠페인,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넷째, 여성폭력 예방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함. 지역주민, 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이 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폭력을 개

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이 향상될 수 있음. 또한 공동체 내 상호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폭력 발생 시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됨

○ 다섯째,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 양상 또한 복합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 지원체계를 넘어 예방, 조기발견, 대응, 회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예방체계가 요구됨.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교육, 경찰, 정보통신, 상담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다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예방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종합하면, 지역사회 기반 여성폭력 예방모델은 여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임. 이러한 모델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예방–조기개입–대응–회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됨.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한 지역기반 예방체계 구축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여성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3.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 구축과 다기관 협력

1)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 구축

○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는 여성폭력을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예방과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협력적 시스템을 의미함

○ 이는 예방을 단순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여성폭력 지원기관,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임. 또한 예방교육, 위험요인 조기발견, 피해자 지원, 사후회복 및 재발방지까지 연계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고 전문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역 내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함
- ❍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는 이러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짐

2)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다기관 협력

- ❍ 여성폭력 대응에 있어 지역사회 기반 예방은 폭력 문제를 개인 또는 가정 내부의 사적 영역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적 문제로 인식하는 데 있음.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예방과 대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조기 감지와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식임. 특히 이러한 접근은 공식 제도권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접근은 지방 여성폭력방지정책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등의 협력체계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네트워크를 핵심 기반으로 함(Putnam, 2000). 신뢰와 상호작용, 규범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 내 비공식적 감시와 지지체계를 강화하여 폭력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함(Sampson et al., 1997). 이에 따라 마을 단위 주민조직, 이장, 부녀회 등 지역 리더의 참여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
- ❍ 한편, 여성폭력의 복합성과 다층적 특성은 단일 기관 중심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사법·의료·상담·복지 등 다양한 영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다기관 협력 접근(Multi-agency approach)이 주요 대응 모델로 자리잡고 있음. 다기관 협력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연속성과 통합

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Rabinson, 2006)

- ❍ 즉, 다기관 협력은 물리적인 지원 시설의 확충을 넘어 가족센터·상담소 등 전문기관, 지자체의 행정력, 사법기관의 공조 체계에 지역 주민 조직이라는 풀뿌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동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활권 중심의 다기관 협력망(Network)을 의미함
-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이후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예방과 다기관 협력 강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 ❍ 특히 경상북도는 광범위한 면적과 산간·오지 중심의 공간 구조, 초고령화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시설 중심 대응체계로는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 더불어 경상북도 여성폭력 대응의 주요 과제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취약계층 접근성 문제', '기관 간 연계 부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기반 예방 체계와 다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기반 안전망 구축과 여성폭력 대응의 지역화 전략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안되고 있음(김민아, 2024)
- ❍ 이러한 흐름을 종합할 때, 지역사회 기반 예방과 다기관 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대응–회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
- ❍ 종합하면, 지역사회 기반 예방과 다기관 협력은 각각 '생활권 중심의 조기 감지 및 예방'과 '전문 영역 간 통합적 대응'을 의미하며, 두 접근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함. 특히 이러한 접근은 경상북도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이론적·실천적 틀로 이해될 수 있음

2) 지역기반 여성폭력 다기관 협력의 국외 사례

□ 미국

❍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을 기반으로 여성폭력을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로 접근하며, 경찰·검찰·법원·의료기관·피해자 지원기관·지역사회단체 등이 협력하는 조정된 지역사회 대응(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CCR)을 주요 정책 접근으로 활용하고 있음(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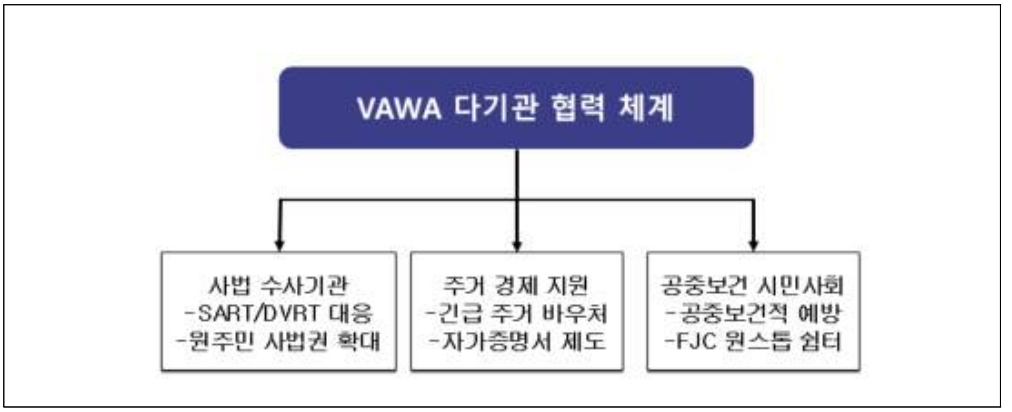
❍ 특히 VAWA의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and Prosecutors) 보조금을 통해 경찰, 검찰, 법원, 피해자 지원기관 등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성폭력 대응팀(SART), 가정폭력 대응팀(DVRT), Family Justice Center(FJC) 등 다양한 다기관 협력모델이 운영되고 있음. 이를 통해 수사·의료·법률·상담·피해자 보호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미국 법무부 여성폭력 방지국OVW, 2025)

❍ 2022년 재승인된 VAWA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하여 주거안정, 부족(Tribal) 사법권, 취약·소외집단 지원, 기술매개 폭력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등을 강화함. 2024년에는 HUD·USDA·재무부·보훈부·법무부가 VAWA 주거보호에 관한 범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CDC·교육부·HHS·EEOC 등이 참여한 성폭력 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해 기관별 성폭력 통계와 측정체계의 조화를 추진함(U.S. Department of Justice, 2024, 고은정, 2025)

❍ 또한 VAWA 2022는 기술적 학대(technological abuse)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사이버스토킹과 비동의 친밀이미지 유포 등 기술매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피해자 지원 및 기술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기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OVW, 2025)

❍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여성폭력 예방·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기관의 기능 확대뿐만 아니라 기관 간 역할분담과 연계를 조정하는 주체와 지역 단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함을 보여줌. 이는 경상북도에서도 광역 차원의 조정·지

원체계를 중심으로 권역 전문기관, 시·군, 경찰·의료·복지·교육기관 및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다층적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Ⅱ-1] 미국 여성폭력방지법의 다기관 협력체계

□ **영국**[1)]

❍ 영국은 2025년 12월에 발표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여성과 아동을 위한 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범정부 전략”을 통해 실행 계획을 제시함

❍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년 내 여성폭력 발생율 50% 절감을 목표로 함

- 핵심 비전: 영국 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VAWG)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범정부적 접근: 내무부(Home office)가 주도하며 공공 서비스, 시민 사회, 학계, 기업 등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접근(Whole of Society approach)'을 강조함

❍ 2026-2029 실행 계획(Action Plan)의 주요 과제는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 디지털 성범죄 및 AI 대응, 피해자 지원임

❍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강화와 남성성 인식 개선

- 학교 교육 강화: 동의(Consent)의 중요성과 음란물의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을

1) UK Government(2025. 12)에서 발간한 “Freedom from violence and abuse: a cross-governmet strategy to build a safer society for women and girls” volume 1 strategy를 기반으로 작성함

교육하고, 교사가 유해 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남성성 인식 개선 및 성평등: 청년들이 긍정적인 성 역할을 형성하도록 돕고, 여성 혐오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해로운 영향을 이해하도록 지원

❍ 디지털 성범죄 및 AI 대응 방안
- AI 딥페이크 및 누드 합성 규제: AI를 악용한 '누드 합성(Nudification)' 앱을 금지하고, 아동의 휴대전화에서 누드 이미지 공유를 차단하기 위해 기술 기업 협력
- 온라인 안전 및 글로벌 동조: 비동의 친밀 이미지(NCII) 공유를 중단시키기 위한 글로벌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 마련

❍ 피해자 지원
- 전문 대응반 조직: 영국 내 모든 경찰서에서 강간 및 성범죄 전담 유닛 설치
- 새로운 법적 조치: 스토킹 방지 명령을 강화하고, 온라인 스토커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부여
- 주거 및 재정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지 마련에 1,900만 파운드를 투입하는 등 대규모 예산 편성

❍ 지역별 맞춤 전략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최신 프레임워크가 가동되고 있음
- 스코틀랜드: '제로 톨레런스(Zero Tolerance)' 원칙에 기반하여 여성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4단계 액션 플랜(네트워크 개발, 캠페인 공유, 정책 개발, 프로젝트 관리)을 수행함
- 북아일랜드: 2024-2026년 제1차 인도 계획(Delivery Plan)을 통해 지역사회 투자와 협업을 강화함

□ 호주[2)]

❍ 호주는 여성폭력을 개인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2032」를 중심으로 예방(Prevention),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피해자 지원(Response), 회복(Recovery)을 연계하는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가계획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사법·보건·복지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예방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호주는 국가 여성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Our Watch"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Our Watch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 차원의 1차 예방 전문기관으로, 정부, 경찰,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여성폭력의 근본 원인을 성불평등과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찾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교육, 캠페인, 근거 기반 연구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Change the Story」 프레임워크를 통해 학교, 직장, 스포츠클럽, 지방정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여성폭력 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그중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Act 2018」에 근거하여 Respect Victoria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함, 주요 기능은 여성폭력 예방정책 개발, 연구 및 근거 구축, 예방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예방사업 지원, 공공 캠페인 및 정책 자문 등이며, 폭력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변

2) Australian Government. (2022). 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2032.., Our Watch(2016), Community based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 toolkit for practitioners를 기반으로 작성함

화시키는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Respect Victoria는 "모든 사람이 폭력 없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성평등과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빅토리아주 정부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여성·인권단체, 지역사회 조직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근거 기반 연구와 정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예방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Respect Victoria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예방전략은 Community Saturation Model(지역 포화모델)이다. 이 모델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학교, 경찰, 스포츠클럽, 기업,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이 동시에 참여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폭력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예방모델이다. 단일 기관이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동일한 예방 메시지와 행동 변화를 확산시키는 접근으로, 교육, 캠페인, 조직문화 개선, 지역 리더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폭력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Respect Ballarat은 Community Saturation Model을 대표하는 실천 사례임 Ballarat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경찰, 학교, 기업, 스포츠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성평등 교육, 주민 참여형 캠페인, 직장과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 지역 리더 역량 강화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여성폭력 예방과 함께 장애여성, 원주민(Aboriginal), 문화·언어적으로 다양한 공동체(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의 사례는 여성폭력 예방의 핵심이 개별 기관의 사업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예방 생태계 구축에 있음을 보여줌. 특히 국가 차원의 예방전문기관(Our Watch), 주정부의 예방 전담기관(Respect Victoria), 지방정부와 학

교·기업·경찰·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포화 모델(Community Saturation Model)은 예방정책의 지속성과 지역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함

□ 시사점

○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는 여성폭력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자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줌. 이에 따라 여성폭력 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조기개입, 피해자 지원, 회복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 국가별 추진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은 법, 제도에 기반한 다기관 협력체계(CCR), 영국은 전 사회적 접근(Whole of Society Approach), 호주는 지역사회 포화모델(Community Saturation Model) 기반 예방전략을 추진함

○ 모두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연계하고, 경찰, 사법기관,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여성폭력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 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함

○ 특히 해외 사례는 여성폭력 예방의 핵심을 성평등 문화 조성, 상호존중 문화 확산, 학교와 직장 등 생활공간 중심의 예방교육,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1차 예방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여성폭력 정책의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줌.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스토킹 등 새로운 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과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피해자 지원 중심의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예방 생태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도 단위 통합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시·군, 경찰, 교육청, 의료기관,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직장·마을을 중심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예방교육, 주민참여형 캠페인을 연계한 '경북형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인구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체계도 요구됨. 농산어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 고령화, 이주민 증가 등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사회 리더 양성, 예방사업 성과평가 및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예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여성폭력 예방은 단일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예방문화의 정착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따라서 경상북도도 지역사회 전반에서 동일한 예방 메시지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경북형 지역사회 포화모델(Community Saturation Model)'을 도입하여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Ⅲ. 경상북도 여성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 분석

1. 경상북도 인구학적·지리적 특성
2. 경상북도 여성폭력 발생 현황
3.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 및 지원체계 현황
4. 소결

Ⅲ. 경상북도 여성폭력 실태 및 대응체계 분석

1. 경상북도 인구학적·지리적 특성

○ 경상북도는 인구학적·지리적 특성 측면에서 타 지역과 구별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에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우선,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고령비율이 27.5%로 다수의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특히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 단독가구 비율이 20%가 넘어 전국 10.3%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는 폭력에 대한 인지 및 외부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여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성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표 Ⅲ-1> 경상북도 고령인구 현황(2025년 기준)

구분	고령인구비율 (A÷B×100)%	65세이상인구 (A)명	전체인구 (B)명
경상북도	27.5	688,172	2,506,526
포항시	23.9	116,942	488,707
경주시	28.9	70,432	244,055
김천시	28.9	38,720	133,791
안동시	29.8	45,475	152,610
구미시	14.2	57.260	403,883
영주시	33.4	32,480	97,162
영천시	35.6	33,929	95,185
상주시	38.5	34,609	89,888
문경시	37.8	24,731	65,348
경산시	22.0	58.007	263,853
의성군	49.2	23,570	47,902
청송군	45.3	10.588	23,363
영양군	43.0	6,850	15,941
영덕군	45.0	14,718	32,698

청도군	46.5	18,650	40,117
고령군	40.0	11,872	29,667
성주군	41.2	16,762	40,720
칠곡군	21.9	22,933	104,842
예천군	34.5	18,567	53,887
봉화군	45.4	12,844	28,315
울진군	33.6	15,436	45,896
울릉군	32.2	2,796	8,696

자료 : 통계청

<표 Ⅲ-2> 경상북도 고령 단독가구 비율(2024년 기준)

구분	고령 단독가구 비율 (A÷B×100)%	65세이상 1인가구 (A)명	전체 가구 (B)명
전국	10.3	2,288,807	22,294,419
경상북도	14.3	167,622	1,174,597
포항시	12.1	26,495	219,703
경주시	14.8	17,031	115,464
김천시	15.0	9,225	61,623
안동시	16.2	11,766	72,810
구미시	6.6	11,926	180,308
영주시	17.3	7,974	46,210
영천시	18.9	8,780	46,469
상주시	20.3	8,888	43,835
문경시	20.6	6,424	31,172
경산시	10.0	12,934	129,430
의성군	26.9	6,576	24,419
청송군	23.7	2,835	11,965
영양군	25.3	1,946	7,698
영덕군	27.0	4,550	16,834
청도군	24.2	4,683	19,368
고령군	20.8	2,932	14,069
성주군	20.2	3,848	19,015
칠곡군	10.8	5,253	48,495
예천군	20.0	4,992	25,009
봉화군	24.3	3,421	14,081
울진군	20.3	4,462	21,992
울릉군	14.7	651	4,428

자료 : 통계청, 독거노인가구비율

❍ 2025년 기준 경상북도 장애인 비율을 전체 인구 대비 7.03%로 전국 평균 5.14%보다 높음. 시군 중 의성군의 장애인 인구 비율이 12.10%로 가장 높았음. 시 지역(10개 시)의 평균 장애인 비율은 6.49%이나 군 지역(12개 군)은 평균 9.22%로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약 2.73% 높게 나타남.

❍ 경상북도는 일반적으로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고령화 영향이 커 장애인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나타냄

<표 Ⅲ-3> 경상북도 장애인 비율(2025년 기준)

구분	장애인 비율 (A÷B×100)%	장애인 인구			인구 (B)명
		(A)명	남	여	
전국	5.14	2,627,761	1,524,995	1,102,776	51,117,378
경상북도	7.03	176,183	99,245	76,938	2,506,526
포항시	5.63	27,512	161,90	11,322	488,707
경주시	6.65	16.233	9,284	6,949	244,055
김천시	7.68	10,274	5,625	4,649	133,791
안동시	8.63	13,168	7,280	5,888	152,610
구미시	4.33	17,498	10,323	7,175	403,883
영주시	8.34	8,102	4,444	3,658	97,162
영천시	8.64	8,223	4,674	3,549	95,185
상주시	10.33	9,288	4,899	4,389	89,888
문경시	9.71	6,347	3,447	2,900	65,348
경산시	5.82	15,366	9,004	6,362	263,853
의성군	12.10	5,798	3,033	2,765	47,902
청송군	11.39	2,660	1,407	1,253	23,363
영양군	11.40	1,817	934	883	15,941
영덕군	10.77	3,520	1,861	1,659	32,698
청도군	10.48	4,206	2,212	1,994	40,117
고령군	10.77	3,195	1,793	1,402	29,667
성주군	9.55	3,888	2,187	1,701	40,720
칠곡군	5.72	6,600	3,892	2,708	104,842
예천군	9.30	5,014	2,645	2,400	53,887
봉화군	10.96	3,104	1,696	1,408	28,315
울진군	8.36	3,843	2,122	1,721	45,896
울릉군	5.70	496	293	203	8,696

❍ 경상북도 내국인 및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외국인 비율은 내국인의 3.5% 수준이나 일부 산업·노동복합지역이 경산시(8.5%), 경주시(6.4%), 칠곡군(5.7%)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Ⅲ-4> 경상북도 내국인 및 외국인 현황(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제 인구			외국인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경상북도	2,506,526	1,268,493	1,238,033	88,013(3.5)	57,005	31,008
포항시	488,707	247,802	240,905	7,946(1.6)	5,156	2,790
경주시	244,055	122,181	121,874	15,621(6.4)	10,648	4,973
김천시	133,791	67,383	66,408	4,256(3,2)	2,803	1,453
안동시	152,610	75,577	77,033	2,193(1.4)	1,103	1,090
구미시	403,883	208,724	195,159	7,618(1.9)	4,370	3,248
영주시	97,162	48,298	48,864	1,532(1.6)	889	643
영천시	95,185	48,692	46,493	4,335(4.6)	3,117	1,238
상주시	89,888	44,385	45,503	2,295(2,6)	1,245	1,050
문경시	65,348	32,156	33,192	1,216(1.7)	708	508
경산시	263,853	132,464	131,389	22,346(8.5)	13,768	8,578
의성군	47,902	24,028	23,874	893(1.7)	574	319
청송군	23,363	11,799	11,564	310(1.3)	142	168
영양군	15,941	7,962	7,979	250(1.6)	119	131
영덕군	32,698	15,710	16,988	1,365(4.2)	1,067	298
청도군	40,117	20,027	20,090	1,394(3.5)	716	678
고령군	29,667	15,333	14,334	2,630(8.8)	1,982	648
성주군	40,720	21,319	19,401	2,897(7.1)	2,268	629
칠곡군	104,842	55,208	49,634	5,996(5.7)	4,174	1,822
예천군	53,887	26,661	27,226	569(1.1)	287	282
봉화군	28,315	14,464	13,851	412(1.5)	204	208
울진군	45,896	23,430	22,466	1,763(3.8)	1,539	224
울릉군	8,696	4,860	3,806	156(1.8)	126	30

자료 : 통계청, 내외국인인구

❍ 경상북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27.5%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군 단위 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생활권 분산 구조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복지·보건·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와 지원 공백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군 지역의 장애인 비율(9.22%)이 시 지역(6.49%)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화와 장애 문제가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더불어 경상북도는 산업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이 혼재된 도·농 복합 구조를 지니고 있어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와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역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보편적 정책 적용에 한계가 존재함

❍ 지리적 측면에서도 경상북도는 광범위한 면적과 산간·오지 중심의 공간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시·군 간 이동 거리와 생활권 분산이 큰 지역임. 특히 대중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의 경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전문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 아울러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공동체 문화와 폐쇄적인 지역사회 특성은 외부 개입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는 여성폭력 피해 사실이 가구 내부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은폐·축소되는 경향을 강화시키며, 피해자의 신고 및 지원 요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장애여성이나 고령여성과 같이 돌봄 의존도가 높은 대상의 경우,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피해 상황이 장기화·고착화될 위험이 큼

❍ 이처럼 경상북도는 초고령화, 인구 감소, 도·농 복합 구조라는 인구학적 특성과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 산간·오지 중심의 공간 구조가 결합된 지역으로, 여성폭력의 비가시성과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동시에 심화시키는 구조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2. 경상북도 여성폭력 발생 현황

❍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발생 현황은 전국적 추세와 유사하게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전체 여성폭력 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폐쇄적인 가정 환경과 지역사회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클 가능성이 있음

❍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 범죄와 오프라인 폭력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예방 및 대응 체계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여성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Ⅲ-4〉 경상북도의 성폭력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검거인원 또한 유사한 흐름을 나타냄. 가정폭력 역시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폭력보다 발생 규모가 큰 구조적 특징을 보임. 이는 여성폭력이 단기적 범죄가 아닌 지속적·관계적 폭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표 Ⅲ-5> 경북경찰청 성·가정폭력 검거현황

단위 : 건

년도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발생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24	1,298	1,186	80	1,206	1,433	1,740	16	1,724
2023	1,382	1,310	70	1,375	1,744	2,158	35	2,123
2022	1,509	1,358	73	1,405	1,833	2,094	22	871

❍ 〈표 Ⅲ-6〉 경상북도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수도권에 비해 절대 규모는 작으나,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가 나타남. 이는 단순 범죄 증가뿐 아니라 신고 활성화, 단속 강화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표 Ⅲ-6> 시·도 경찰청별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경북	851	853	1,298
서울	5,816	5,764	8,812
부산	1,509	1,505	2,328
대구	915	1,027	1,550
인천	1,450	1,370	2,359
광주	583	669	944
대전	742	672	1,096
울산	445	459	633
세종	106	111	210
경기	5,000	4,983	8,380
강원	722	655	920
충북	675	618	910
충남	879	876	1,362
전북	625	653	1070
전남	625	666	955
경남	1,091	1,071	1,668
제주	400	419	564

자료 : 경찰청 범죄통계

❍ 〈표 Ⅲ-7〉 경상북도의 가정폭력 신고는 2023년까지 증가 후 2024년 감소함. 그러나 여전히 연간 8천 건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위험요인으로 존재함을 보여줌

<표 Ⅲ-7> 시·도청별 가정폭력 신고건수

단위 :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경북	9,185	9,237	8,542
서울	40,853	40,488	41,675
부산	12,602	12,662	15,501
대구	11,560	12,076	12,094
인천	16,098	16,663	15,822
광주	5,672	6,224	6,306
대전	6,035	6.289	6,121
울산	5.128	5,654	5,541
세종	1,504	1,768	1,622
경기	70,063	71,382	73,194
강원	6,477	6,658	6,486
충북	6,040	6,339	7,597
충남	8,186	8,744	8,598
전북	3,816	3,508	3,708
전남	7,717	7,009	7,023
경남	11,120	12,502	13,376
제주	3,553	3,627	3,459

자료 : 경찰청 범죄통계

❍ 성풍속범죄는 포항, 구미, 경산 등 인구 규모 및 산업 밀집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나, 이는 실제 발생 감소보다는 신고·접근성 차이의 영향 가능성도 존재함

<표 Ⅲ-8> 성 풍속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발생건수	137	63	31	54	134
구분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발생건수	18	17	12	13	105
구분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발생건수	7	4	1	5	9
구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발생건수	7	13	29	9	2
구분	울진군	울릉군			
발생건수	6	1			

자료 : 경찰청 범죄통계

❍ 카메라 이용촬영범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이는 여성폭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기술 기반 범죄 대응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Ⅲ-9>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지역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경북	125	196	223
서울	784	1,811	1,859
부산	188	455	503
대구	174	294	299
인천	193	405	417
광주	103	178	214
대전	81	178	253
울산	58	105	129
세종	12	32	53
경기	836	1,805	1,889
강원	246	560	574
충북	97	155	162
충남	108	222	210
전북	95	148	194
전남	78	141	147
경남	163	264	362
제주	54	98	121

자료 : 경찰청 범죄통계

2.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 및 지원체계 현황

1)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

○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폭력 유형별 개별 법률을 통해 마련되어 있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괄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로부터의 구제·보호·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성별·연령·장애·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여성폭력 유형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스토킹 등 변화하는 여성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법률구조, 주거·자립 지원, 상담·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에 따라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2026년 8월에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함께 이주여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피해유형과 대상을 위한 별도의 조례도 마련되어 있어 광역 차원에서는 여성폭력 유형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시·군 조례를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남. 경주시·영주시·상주시·청도군 등은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조례를 두고 있는 반면, 김천시·영천시·문경시·경산시·의성군·청송군·영덕군·고령군·예천군·울진군 등은 기존의 ‘아동·여성폭력’을 함께 다루는 형태가 상당수 남아 있음. 실제로 경산시의 경우 현재도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행 자치법규로 확인됨. 또한 영양군과 봉화군처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한 조례를 두고 있음

○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최근 여성폭력 정책이 강조하는 피해자의 권리, 2차 피해 방지, 스토킹·디지털성범죄·친밀한 관계 폭력 등 새로운 폭력 유형,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피해자에게 연령·장애·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및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군 조례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Ⅲ-10> 경상북도 지자체 여성폭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황

구분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경주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동시	안동시 아동학대·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구미시	구미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	영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조례
경산시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청송군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영양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영덕군	영덕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청도군	청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고령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
칠곡군	3)
예천군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봉화군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울진군	울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울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2)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주요 사업 현황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국비·도비 지원사업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 경상북도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의료, 수사·법률, 심리·정서, 자립지원 등을 포괄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도내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비롯하여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기관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초기 상담과 긴급대응에서부터 전문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시설 입소, 심리적 회복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상황과 지원 욕구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3) 칠곡군도 여성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의 조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칠곡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칠곡군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현행 자치법규가 있음

○ 먼저, 경상북도 여성긴급전화 1366은 김천시에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운영예산은 896,470천원, 종사자는 17명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중 긴급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보호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표 Ⅲ-13〉 여성긴급전화 1366의 상담 및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상담의 대부분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 여성폭력 중 가정폭력 비중이 매우 높음. 연계 실적이 높은 수준을 보여 1366이 지역 내 허브 역할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Ⅲ-11>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상담 및 지원실적

구분	상담(건)	상담 내용(건)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일반상담 및 기타
합계	14,776	10,699	868	77	599	228	160	2,145

구분	실적(건)	연계 실적(건)								
		보호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의료 기관	법률 수사	수사	행정 기관	디성 센터 연계	긴급 피난처	기타
합계	15,243	1,739	8,208	410	76	2,546	516	237	237	1,455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피해자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경상북도에는 동부(포항), 서부(김천), 북부(안동) 등 총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총 운영예산은 1,962,100천원, 전문인력은 동부(통합형) 22명, 서부·북부(위기지원형) 16명으로, 권역별 피해자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표 Ⅲ-10〉 전체 지원 중 상담지원 비중이 가장 높아 초기 대응 및 접근 창구 역

할이 중요함을 보여줌. 의료·수사 지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Ⅲ-12> 경북 해바라기 지원 실적(2025년)

단위 : 건

구분	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 지원	심리지원	사회적 지원	동행 (동부)	정보제공 등 기타
합계	15,450	5,829	3,522	2,941	1,277	492	216	1,173
북부	2,747	1,022	421	952	0	152	-	200
서부	3,442	1,210	953	859	0	176	-	244
동부	9,261	3,597	2,148	1,130	1,277	164	216	729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경상북도에는 성폭력상담소 5개소(포항 1·구미 1·문경 1·경산 2)와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2개소(안동·구미)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2025년 기준 총 운영예산은 1,582,208천원이며, 전문인력 30명이 배치되어 있음.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 심리·정서 지원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여 피해자 회복 중심 서비스 구조가 확인됨. 기관 연계 및 의료·법률 지원도 병행되어 다기관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반영됨

<표 Ⅲ-13> 경상북도 성폭력 상담소 지원 실적(2025년)

단위 : 건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기관 연계	정보제공	기타
합계	4,541	2,759	394	746	396	147	99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 또한, 경상북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총 운영예산은 956,962천원이며, 종사자 15명이 배치되어 있음.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을 비롯하여 학업, 의료, 법률, 취업 지원 등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보호·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5년 경상북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인원은 총 8,800건이며, 지원 실적은 심리·정서 지원 5,126건, 수사·법적 지원 41건, 의료지원 535건, 학교문제 지원 606건, 자립지원 2,492건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심리·정서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립지원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Ⅲ-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2025년)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학교 문제 지원	자립지원
합계	8.800	5,126	41	535	606	2,492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경상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포항)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2025년 기준 139,370천원으로, 상담사 3명이 배치되어 있음. 주요 지원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비롯하여 수사 동행, 의료지원 등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특화 프로그램 등임

❍ 〈표 Ⅲ-12〉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실적을 살펴보면, 피해자 상담지원이 1,18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치유회복 지원으로 상담지원 및 치유회복에 초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Ⅲ-15>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실적(2025년)

구분	지원인원(명)	계	지원 실적(건)				
			상담지원	삭제지원	치유 회복	수사 법률	의료
합계	82	1,530	1,181	10	106	71	62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경상북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음. 도내 상담소는 총 9개소로, 가정폭력상담소 6개소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2025년 기준 총 운영예산은 2,557,563천원이며, 종사자 45명이 배치되어 있음.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 법률·수사 등 관련 기관 및 서비스와 연계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 2025년 경상북도 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 실적은 총 15,112건으로 나타남. 지원 유형별로는 심리·정서 지원이 11,178건으로 전체의 7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기타 지원 2,936건(19.4%), 수사·법적 지원 843건(5.6%), 의료지원 130건(0.9%), 기관 연계 25건(0.2%) 순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16> 경상북도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실적(2025년)

단위 : 건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기관 연계	기타
합계	15,112	11,178	843	130	25	2,936

○ 또한, 경상북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1개소(포항)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총 운영예산은 317,299천

원임.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을 비롯하여 수사·재판과정 등 법률 지원 등 직업 및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2025년 지원 실적은 총 2,478건으로 나타남. 지원 유형별로는 심리·정서 지원이 2,023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자립지원 248건(10.0%), 의료지원 117건(4.7%), 기타 53건(2.1%), 수사·법적 지원 37건(1.5%) 순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지원서비스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립 및 의료지원 등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1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2025년)

단위 : 건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	기타
합계	2,478	2,023	37	117	248	53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 상북도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임시숙소 2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긴급주거를 제공하고 퇴소 후 2개월간 정기적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총 사업비는 229,882천원이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17명으로 나타남

2) 경상북도 자체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

□ **경상북도 민·관·경 협력지원사업**

○ 경상북도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경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경 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역사회 내 여성폭력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여성폭력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상북도는 2025년까지 민·관·경 협력에 기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반딧불 프로젝트」(도비 20백만원)와 「네잎클로버」(도비 24백만원) 등의 사업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6년부터 사업명을 「민·관·경 협력지원사업」(35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2025년	
사업명	예산
반딧불프로젝트	20,000천원
네잎클로버	24,000천원

→

2026년	
사업명	예산
민·관·경 협력 지원	35,000천원

[그림 Ⅲ-1] 도비 지원 민·관·경 협력 지원사업

○ 반딧불 프로젝트는 지적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폭력 피해 고위험군의 발굴과 보호, 피해자 안전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내 피해자 보호·지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둔 사업임. 반면, 네잎클로버 사업은 경찰·지자체·여성폭력 상담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동상담소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현장상담, 신고 및 지원절차 안내 등을 실시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조기발굴 및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음

○ 반딧불 프로젝트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이동상담 780건, 불법촬영 점검 442건 등 총 1,222건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이동상담 699건, 불법촬영 점검 377건 등 총 1,076건의 실적을 보임.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전체 실적이 146건(11.9%) 減少하였음

<표 Ⅲ-18> 반딧불프로젝트 지원실적

단위 : 건

연도	이동상담	불법촬영	총계
2024	780	442	1,222
2025	699	377	1,076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경산),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구미),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안동), 한마음상담소(포항) 총 6개 상담소 참여

❍ 네잎클로버 사업은 이동상담과 전화·내방상담 등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사업임. 추진실적은 2024년 총 4,287건에서 2025년 4,90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화 및 내방상담이 3,616건에서 4,4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9> 네잎클로버 지원실적

단위 : 건

연도	이동상담	전화 및 내방상담	총계
2024	671	3,616	4,287
2025	495	4,412	4,907

❍ 동 사업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개별 전문기관의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지방자치단체–경찰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발굴–상담–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지원체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상북도 지역 기반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자체사업으로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2026년 기존 「반딧불 프로젝트」와 「네잎클로버」가 「민·관·경 협력지원사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은 총 44백만원에서 35백만원으로 9백만원(20.5%) 감소하였으며, 불법촬영 점검사업도 일몰됨. 지역 기반 여성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피해 발생 이후의 전문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관·경 협력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발굴·상담·연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특성 및 한계

❍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지원체계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등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수사·심리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상담과 기관 연계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간 지원기관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여성폭력 대응이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예방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Ⅲ-20> 경상북도 여성폭력지원기관 현황

구분		여성폭력지원기관
동해안권	포항	•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포항YWCA 가정폭력상담소, 사단법인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포항다문화의 집. 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한마음상담소, 로뎀나무 부설 지음가정상담소,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북여성지원시설 누리봄
	【여성폭력지원기관 미설치 지역】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북부권	안동	• 안동가정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다솜마루, 북부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영주	•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문경	• 문경열린종합상담소
	의성	• 의성가정폭력상담소
	【여성폭력지원기관 미설치 지역】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서남부권	구미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쿰나래, 경북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
	김천	• 여성긴급전화1366, 서부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상주	• 상주상담소부설상주가정문제상담소

구분		여성폭력지원기관
	경산	•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영천	•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칠곡	• 사)칠곡종합상담센터
	【여성폭력지원기관 미설치 지역】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그림 Ⅲ-2] 여성폭력 방지시설 미설치 지역

❍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시설은 총 26개소로, 시설 1개소당 인구는 95,872명, 시설 1개소당 평균 면적은 약 708.8㎢로 나타났음(행정안전부, 주민등록현황, 2026.8.,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 현황, 2024). 그러나 시·군별 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다수의 시·군에서는 관련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시설 접근 여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시설 수를 살펴보면 포항시가 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안동시와 경산시가 각각 3개소, 김천시·구미시·상주시·칠곡군이 각각 2개소, 경주시·영주시·문경시가 각각 1개소로 나타났음. 반면 영천시를 비롯하여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12개 시·군에는 여성

폭력방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체 22개 시·군의 54.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여성폭력 피해지원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이 상당함을 보여줌

- ❍ 인구 규모를 고려한 시설입지 수준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었음. 경북 전체의 입지계수[4]를 1.00으로 할 때 상주시가 2.16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동시 1.90, 칠곡군 1.85, 포항시 1.77, 문경시 1.48, 김천시 1.45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이들 지역이 도내 인구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구미시는 0.48로 나타나 인구 규모에 비해 시설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시설 1개소당 인구는 구미시 201,298명으로 경북 평균인 95,872명을 크게 상회하여, 시설이 설치된 지역 내에서도 잠재적 이용인구 대비 서비스 공급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면적을 기준으로 한 시설입지 수준[5]에서도 불균형이 두드러짐. 포항시와 경산시의 면적기반 시설입지계수는 각각 5.64와 5.1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칠곡군 3.14, 구미시 2.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반면 문경시는 0.78로 경북 평균보다 낮았음. 특히 경주시, 의성군, 봉화군, 울진군 등과 같이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도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주시는 경북 전체 면적의 약 7.2%, 의성군은 6.4%, 봉화군은 6.5%, 울진군은 5.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내 관련 시설이 없어,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 이러한 결과는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인구 규모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적

4)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특정 지역에 어떤 시설·산업·서비스가 전체 지역의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보통 1.0을 기준으로 해석함

$$\text{입지계수(LQ)} = \frac{\text{해당 시·군 여성폭력방지시설 수 / 경북 전체 시설 수}}{\text{해당 시·군 / 경북 전체 인구}}$$

LQ = 1.00: 경북 평균 수준
LQ > 1.00: 인구 비중에 비해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
LQ < 1.00: 인구 비중에 비해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게 입지
LQ = 0: 해당 지역에 시설이 없음

5) 면적을 기준으로 한 시설입지 수준은 해당 시·군이 경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중에 비해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따라서 1.00은 경북 평균 수준, 1보다 크면 해당 지역의 면적 비중에 비해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고, 1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되어 있음을 의미함

$$\text{면적기반 시설입지 계수} = \frac{\text{해당 시·군 여성폭력방지시설 수 / 경북 전체 시설 수}}{\text{해당 시·군 / 경북 전체 면적}}$$

특성과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특히 농산어촌과 군 지역의 경우 시설 미설치와 넓은 이동권역이 동시에 나타나 여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여성폭력 피해지원체계는 단순히 시설 수를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거점기관 기능 강화,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서비스 운영, 이동지원, 비대면 상담체계 보완, 지역 내 복지·보건·의료·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적 접근성의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Ⅲ-21> 경상북도 시군별 여성폭력방지시설 분포 및 인구·면적 대비 시설 입지 수준

시군	여성 폭력방지 시설수	인구			면적			입지 계수	면적기반 시설입지 계수
		인구	비율	인구 /시설	면적	비율	면적 /시설		
경북	26	2,492,677	100.0	95,872	18,428,070,885	100.0	708,771,957	1.00	1.00
포항시	9	486,930	19.5	54,103	1,130,727,254	6.1	125,636,362	1.77	5.64
경주시	0	242,512	9.7	-	1,324,932,858	7.2	-	.00	.00
김천시	2	132,433	5.3	66,217	1,010,074,482	5.5	505,037,241	1.45	1.40
안동시	3	151,343	6.1	50,448	1,522,288,788	8.3	507,429,596	1.90	1.40
구미시	2	402,596	16.2	201,298	615,620,046	3.3	307,810,023	0.48	2.30
영주시	1	96,237	3.9	96,237	670,173,279	3.6	670,173,279	1.00	1.06
영천시	0	93,605	3.8	-	919,204,901	5.0	-	.00	.00
상주시	2	88,920	3.6	44,460	1,254,696,780	6.8	627,348,390	2.16	1.13
문경시	1	64,657	2.6	64,657	912,069,623	4.9	912,069,623	1.48	0.78
경산시	3	263,020	10.6	87,673	411,875,917	2.2	137,291,972	1.09	5.16
의성군	0	47,879	1.9	-	1,174,576,531	6.4	-	.00	.00
청송군	0	24,560	1.0	-	846,147,099	4.6	-	.00	.00
영양군	0	15,956	0.6	-	815,862,683	4.4	-	.00	.00
영덕군	0	32,511	1.3	-	741,323,963	4.0	-	.00	.00

시군	여성 폭력방지 시설수	인구			면적			입지 계수	면적기반 시설입지 계수
		인구	비율	인구 /시설	면적	비율	면적 /시설		
청도군	0	39,988	1.6	-	698,450,677	3.8	-	.00	.00
고령군	0	29,429	1.2	-	384,245,226	2.1	-	.00	.00
성주군	0	40,293	1.6	-	616,878,310	3.3	-	.00	.00
칠곡군	2	103,426	4.1	51,713	451,038,020	2.4	225,519,010	1.85	3.14
예천군	0	53,275	2.1	-	661,519,270	3.6	-	.00	.00
봉화군	0	28,041	1.1	-	1,202,666,080	6.5	-	.00	.00
울진군	0	46,319	1.9	-	990,656,576	5.4	-	.00	.00
울릉군	0	8,747	0.4	-	73,042,522	0.4	-	.00	.00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6.08)/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 현황(2024)
주 : 입지계수=(해당 시·군 시설비중/해당 시군 인구 비중), 면적기반 시설입지계수=(해당 시·군 시설 비중/해당 시·군 면적 비중)

- ❍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관련 지역사회 자원 현황을 종합하면, 여성폭력 전문 지원시설은 일부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복지자원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 ❍ 이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전문기관만의 역할로 한정하기보다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과 조기발견, 전문기관 연계가 이루어지는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 특히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서도 가족센터를 비롯하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자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들 기관은 여성폭력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족갈등, 돌봄, 경제적 어려움, 고립, 건강 및 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폭력의 위험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
- ❍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상담·판단하는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기보다, 위험징후를 인지하고 적절한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게이트웨이'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은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에서 기능에 따라 다층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 우선 가족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점기관을 중심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다음으로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복지인력, 가족센터 및 복지기관 종사자 등이 일상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과정에서 여성폭력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발견·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마지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은 고위험 사례에 대한 상담·보호, 의료·법률·수사 지원 및 회복지원 등을 담당하는 권역별 전문지원체계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경북은 넓은 행정구역과 낮은 인구밀도, 고령화, 교통 및 전문서비스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로 인해 모든 시·군에 동일한 수준의 여성폭력 전문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따라서 전문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서는 기존 생활권 복지자원의 발견·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 전문기관이 찾아가는 상담, 순회지원, 이동지원, 비대면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결국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는 '전문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가 예방과 조기발견에 참여하고 전문기관이 고위험 사례와 전문적 지원을 담당하는 다층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즉,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활동을 확대하는 '지역포화형 예방', 주민과 접촉하는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생활권 조기발견·연계',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담당하는 '권역 전문지원'이 상호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폭력의 예방부터 발견, 연계, 보호 및 회복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표 Ⅲ-22> 경상북도 시군별 지역사회 복지 지원 인프라 현황

시군	여성폭력 방지 시설수	가족 센터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희망복지 지원단	계
경북	26	22	15	20	22	1	106
포항시	9	1	3	1	4	1	19
경주시	0	1	1	1	1	1	5
김천시	2	1	1	1	1	1	7
안동시	3	1	1	1	2	1	9
구미시	2	1	2	1	1	1	8
영주시	1	1	1	1	1	1	6
영천시	0	1	1	1	1	1	5
상주시	2	1	1	1	1	1	7
문경시	1	1	2	1	1	1	7
경산시	3	1	1	2	1	1	9
의성군	0	1	0	3	1	1	6
청송군	0	1	0	0	0	1	2
영양군	0	1	0	0	1	1	3
영덕군	0	1	0	0	1	1	3
청도군	0	1	0	1	1	1	4
고령군	0	1	0	0	1	1	3
성주군	0	1	1	0	0	1	3
칠곡군	2	1	0	1	1	1	6
예천군	0	1	0	1	0	1	3
봉화군	0	1	0	1	1	1	4
울진군	0	1	0	1	1	1	4
울릉군	0	1	0	1	0	1	3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시설

4. 소결

- ❍ 본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는 초고령화와 도·농 복합적 지역구조, 취약계층의 높은 비중, 여성폭력 유형의 변화, 피해지원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폭력 전문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이 확인되는 한편, 가족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 기존 지역사회 자원이 시·군에 분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기반 예방·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 ❍ 경상북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27.5%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이며,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 단독가구 비율도 높아 여성폭력 피해의 비가시성이 우려됨. 또한 장애인 비율은 7.03%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과 장애가 중첩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넓은 행정구역과 산간·농어촌 지역의 분포, 대중교통과 전문서비스 인프라 부족, 밀접한 지역사회 관계망 역시 피해자의 신고와 전문기관 이용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 여성폭력 발생 양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남. 성폭력과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가정폭력 신고는 연간 8천 건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증가하고 있음. 이는 기존 가정폭력·성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여성폭력 등 변화하는 폭력 유형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 도내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피해자 지원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방지시설 26개소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지역에는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인구 대비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상주시(2.16), 안동시(1.90), 칠곡군(1.85), 포항시(1.77)는 인구 비중에 비해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한 반면, 구미시(0.48)는 낮게 났는데, 구미시 인구는 201,298명으로 경북 평균 95,872명을 크게 상회함. 면적기반 시설입지계수 역시 포항시(5.64), 경산시(5.16), 칠곡군(3.14), 구미시

(2.30)는 높은 반면, 문경시(0.78)는 낮게 나타남. 특히 경주시, 의성군, 봉화군, 울진군과 같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없는 지역이 존재하여, 인구뿐 아니라 면적과 이동거리 등 공간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여성폭력 전문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운영되고 있음. 이들 기관은 여성폭력 전문기관을 대체하기보다는 주민과의 일상적 접촉 과정에서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생활권 게이트웨이'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정책은 모든 시·군에 동일한 전문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보다 지역의 인구, 면적, 이동거리, 교통여건, 취약계층 분포와 기존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기반 대응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개선과 예방역량을 높이는 '지역포화형 예방체계', 둘째, 가족센터·복지기관·희망복지지원단·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점기관을 활용한 '생활권 조기발견·연계체계', 셋째, 1366·해바라기센터·여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는 '권역 전문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 궁극적으로 경상북도는 전문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가 예방에 참여하고, 생활권에서 피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연계하며, 권역 전문기관이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방–조기발견–연계–보호–회복이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Ⅳ.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Ⅳ.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 본 연구는 양적 수량화 자료를 통해 실태와 경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주요 통계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와 맥락을 질적 심층면담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설명적 순차 혼합연구로 수행됨

1) 양적 조사

가. 연구 대상 및 표본 배정

○ 연구대상 : 경상북도 거주 주민 총 867명

○ 표본 배정 기준 : 경상북도 3개 권역(동해안권, 남부권, 북부권) 및 행정구역(시/군)과 연령대(20대~60대)를 고려한 할당 표집

<표 Ⅳ-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단위: 명)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동해안권_시	23	25	28	32	33
남부권_시	27	30	33	35	33
북부권_시	17	17	19	23	25
동해안권_군	16	16	19	25	27
남부권_군	23	25	33	39	43
북부권_군	18	21	25	31	39

※ 동해안권_시 : 포항시, 경주시
※ 남부권_시 :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 북부권_시 :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 동해안권_군 :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남부권_군 :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북부권_군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나. 주요 조사 내용 및 문항 구성

- ❍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의 주요 조사내용은 크게 응답자 특성, 지역사회 안전 및 폭력 인식, 폭력 허용도 및 폭력 피해 두려움,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 정책 및 인프라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음
-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 상황, 현재 거주 지역, 거주 행정구역의 특성, 가족 수, 거주 기간임
- ❍ 지역사회 안전 및 폭력 인식으로는 거주 동네(마을)의 전반적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 충분성, 안전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 여성폭력 인지도, 여성폭력 소식을 접하는 정도, 여성폭력은 지역의 심각한 문제 인식,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보호받는 정도, 여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임
- ❍ 폭력 허용도는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상사는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 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때릴 수 있다(구타, 체벌 등),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는 때릴 수도 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 있다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폭력 피해 두려움은 친밀한 누군가(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가족/친척, 친구)가 나를 구타(폭력)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력 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불법 촬영할까 봐 두렵다(공중화장실, 공공장소, 유흥시설 등),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 선 사람(택배, 수리기사 방문 등)의 방문이 두렵다, 나는 밤늦게 동네(골목길)를 지나거나(걷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으로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을 본 경험 여부,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을 보게된 경로, 현재 거주 지역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 서비스 인지 여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 가정

폭력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경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직장내 고충상담창구, 위(WEE)클래스 및 대학인권센터 등 학교내 상담실,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아동청소년 상담소) 인지도, 폭력 경험 여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 이웃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응답자의 행동,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 여부, 여성폭력지원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이용과정에서 불만족 스럽거나 아쉬운 점, 여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척도(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 및 인프라 만족도로 거주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전문기관 충분성, 경북에서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조사대상자 일반적인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대, 직업, 권역, 시/군, 거주 행정구역 특성, 거주 기간, 살고 있는 가족 수이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총 867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53.4%, 남성이 46.6%로 나타남.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24.6%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50대(23.0%), 40대(20.4%), 30대(16.8%), 20대(15.2%)의 순으로 나타남

○ 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50.1%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무직(21.9%), 자영업(11.2%), 학생(6.1%), 농어업 종사자(3.5%) 등의 순이었음

○ 대상자가 거주하는 권역은 남부권이 39.9%, 동해안권이 31.4%, 북부권이 28.7%로 나타남.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시 단위가 53.1%, 군 단위가 46.9%로 나타남. 대상자가 거주하는 행정구역의 특성으로 읍지역이 44.6%, 동지역이 38.4%, 면지역이 17.0%였음

○ 대상자가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15년 이상이 52.9%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5-10년 미만(14.6%), 1-5년 미만(14.5%), 10-15년 미만(13.8%), 1년 미만(4.0%)순으로 나타남. 대상자의 가족수는 3인 이상이 51.2%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2인(32.6%), 혼자 산다(16.1%) 순으로 나타남

<표 IV-2> 조사대상자 일반적인 특성

구 분		조사대상자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 수	비율
전 체		867	100.0%
성별	남성	404	46.6%
	여성	463	53.4%
연령대	20대	132	15.2%
	30대	146	16.8%
	40대	177	20.4%
	50대	199	23.0%
	60대	213	24.6%
직업	학생	53	6.1%
	임금근로자	434	50.1%
	자영업	97	11.2%
	농어업	30	3.5%
	무직	190	21.9%
	기타	63	7.3%
권역	동해안권	272	31.4%
	남부권	346	39.9%
	북부권	249	28.7%
시/군	시	460	53.1%
	군	407	46.9%
거주 행정구역 특성	동 지역	333	38.4%
	읍 지역	387	44.6%
	면 지역	147	17.0%
거주 기간	1년 미만	35	4.0%
	1-5년 미만	126	14.5%
	5-10년 미만	127	14.6%
	10-15년 미만	120	13.8%
	15년 이상	459	52.9%
살고 있는 가족수	혼자 산다	140	16.1%
	2인	283	32.6%
	3인 이상	444	51.2%

2) 질적 조사

가. 조사목적

○ 1단계 양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통계 수치의 구체적인 원인(인지수준, 두려움의 수준 차이, 지원기관 인지도 등)과 실체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규명

나.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 표집방법 : 본 질적 조사는 의도적 표집 표출법의 한 형태인 최대 변이 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을 적용함. 여성폭력 안전망 및 예방 생태계에 대한 다각적인 경험과 요구를 입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문화적·신체적 특성이 상이한 취약계층 및 연령대별 표적 집단을 의도적으로 구성함

○ 조사대상자 구성

구 분	성별	나이	지역	비고	표집기준 및 주요 탐색 내용
청소년 A	여	18	시	학교 밖 청소년	•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학교 및 주별 거주지 안전 체감도 탐색 • 예방교육 접촉 경험 및 신고 등
청소년 B	여	17	시	고3	
청소년 C	여	18	시	고3	
청년 A	여	31	군	미혼, 직장인	• 야간 이동 안전, 스토킹, 불법 촬영 등 여성폭력 두려움 탐색 등
청년 B	남	34	시	미혼, 직장인	
중고령 A	여	57	군	기혼 직장인	• 가정폭력, 중고령층 대상 폭력 허용도 및 가부장적 관심/인식 탐색 등
중고령 B	남	50	군	기혼 직장인	
이주민 A	여	43	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요청 장벽 탐색 등
이주민 B	여	34	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장애인 A	여	31	군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에 따른 폭력 노출 위험 및 피해 두려움 등
장애인 B	여	37	군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C	여	31	군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다.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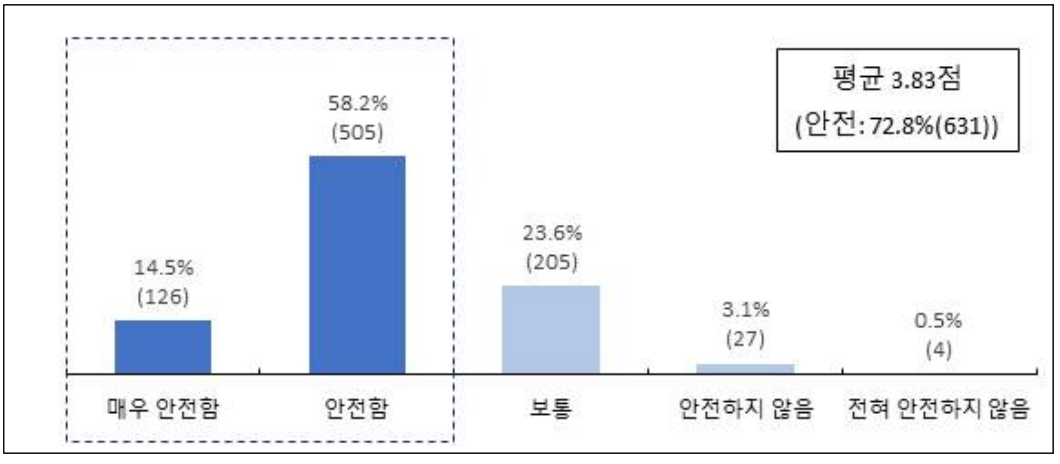
○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일반 참여자는 1: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으로, 청소년·장애인·이주민은 집단 토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실시함

○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전사(Transcription) 텍스트 데이터 구축함.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를 통해 개방 코딩(Open Coding)을 거쳐 핵심 법주 및 주제 도출함.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증을 실시함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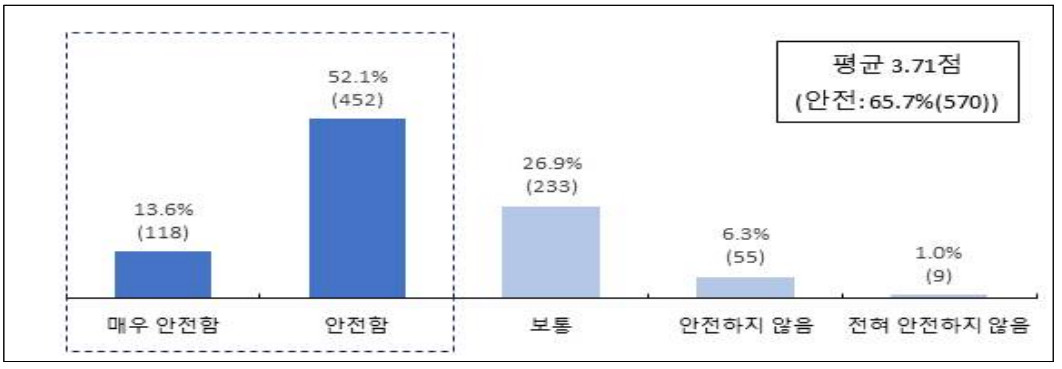
1) 지역사회 안전 및 폭력 인식 정도

○ 본 설문조사에서 대상자가 거주하는 동네(마을)는 전반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안전하다는 비율이 72.8%(매우 안전함 14.5% + 안전함 58.2%)로 나타남. 한편, 불안전하다는 비율은 3.6%(안전하지 않음 3.1% + 전혀 안전하지 않음 0.5%)에 불과함. 본 문항은 5.00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나타남



[그림 Ⅳ-1] 거주 동네의 전반적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야간에 혼자 동네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도를 살펴본 결과, 안전하다는 비율이 65.7%(매우 안전함 13.6% + 안전함 52.1%)로 나타남. 한편, 불안전하다는 비율은 7.3%(안전하지 않음 6.3% + 전혀 안전하지 않음 1.0%)에 불과함. 본 문항은 5.00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나타남



[그림 Ⅳ-2] 야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

❍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에 관해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평균 2.11점(SD=.74), 여성은 평균 2.44점(SD=.85)이었으며, t값이 -6.0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p<.001$). 이는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인식과 별개로, 야간에 혼자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에 따른 안전감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함을 보여줌

❍ 특히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나타난 거주지역 전반에 대한 안전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과 대비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즉,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감이 높더라도, '야간·혼자 보행'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여성의 안전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적 안전감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여성폭력 예방정책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치안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야간에 혼자 이동하는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표 IV-3> 성별에 따른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N=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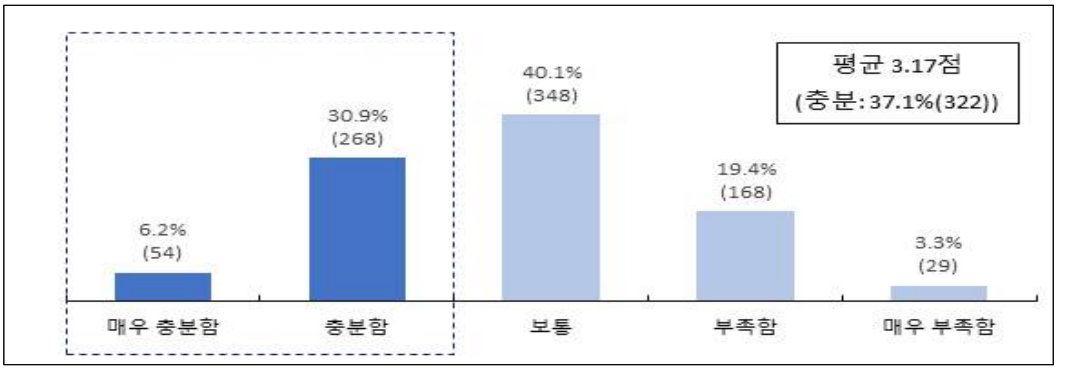
지역	N	M	SD	t	*p*
남	460	2.11	.74	-6.07	.000
여	407	2.44	.85		

❍ 시군에 따른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 지역(M=2.23, SD=.82)이 군 지역(M=2.35, SD=.82)보다 안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t=-2.144, p=.032). 즉, 점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 지역보다 시 지역에서 야간에 혼자 보행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 시군에 따른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N=867)

지역	N	M	SD	t	*p*
시	460	2.23	.82	-2.14	.03
군	407	2.35	.82		

❍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가로등, CCTV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충분하다는 비율이 37.1%(매우 충분함 6.2% + 충분함 30.9%)로 나타남. 한편, 부족하다는 비율은 22.7%(부족함 19.4% + 매우 부족함 3.3%)에 불과함. 본 문항은 5.00점 만점에 평균 3.17점으로 나타남



[그림 Ⅳ-3]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 충분성

❍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한 정도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성은 평균 2.65점(SD=.91), 여성은 평균 2.98점(SD=.91)으로 나타났음. 점수가 낮을수록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척도이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t=-5.3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의 안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감을 보인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는 것임. 즉, 여성은 지역사회의 안전환경을 평가할 때 전반적인 치안 및 안전시설의 수준뿐만 아니라 야간 이동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과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V-5> 성별에 따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의 충분성(N=867)

지역	N	M	SD	t	*p*
남	460	2.65	.91	−5.39	.000
여	407	2.98	.91		

❍ 시군에 따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시 지역(M=2.71, SD=.89)이 군 지역(M=2.96, SD=.65)보다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t=-4.04, p<.001). 점수가 낮을수록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 지역 주민이 시 지역 주민보다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6> 시군에 따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의 충분성(N=867)

지역	N	M	SD	t	*p*
시	460	2.71	.89	−4.04	.000
군	407	2.96	.65		

❍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 충분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동 지역은 평균 2.63점(SD=.87), 읍 지역은 2.92점(SD=.90), 면 지역은 3.03점(SD=1.02)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F=13.8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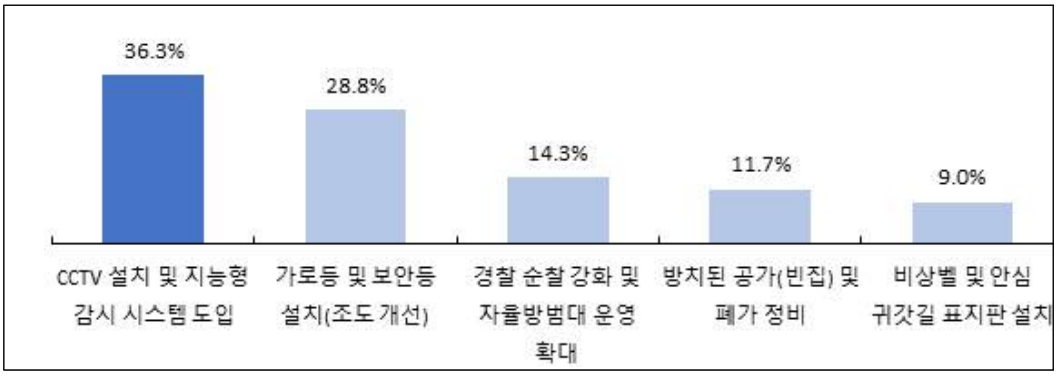
❍ 본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이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면 지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치안 및 안전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이는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있어 읍·면 지역의 치안·안전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Ⅳ-7>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의 충분성(N=867)

권역	N	M	SD	F	*p*	*scheffe*
동[a]	333	2.63	.87			
읍[b]	387	2.92	.90	13.83	.000	a < b,c
면[c]	147	3,03	1.02			

*p<.05, **p<.01, ***p<.001

○ 동네 안전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별로 살펴본 결과, CCTV 설치 및 지능형 감시 시스템 도입이 36.3%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조도를 개선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28.8%), 경찰 순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확대(14.3%), 방치된 공가나 빈집 및 폐가를 정비(11.7%), 비상벨 및 안심 귀갓길 표지판 설치(9.0%)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Ⅳ-4] 안전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

○ 〈표 Ⅳ-8〉 거주 행정구역별 안전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살펴본 결과, 시와 군 모두 CCTV 설치 및 지능형 감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시 36.7%, 군 35.8%). 다음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조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시 28.2%, 군 29.4%), 시 지역에서는 경찰 순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확대(16.4%), 군 지역에서는 방치된 공가·빈집 및 폐가 정비(14.7%)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동 지역과 읍 지역에서 CCTV 및 지능형 감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각각 37.9%, 38.2%로 가장 높았던 반면, 면 지역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조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28.8%로 가장 높았음. 반면 방치된 공가·빈집 및 폐가 정비에 대한 요구는 면 지역이 20.9%로 동 지역(7.5%)과 읍 지역(11.8%)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이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간적 특성에 따라 주민이 인식하는 안전 취약요인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함

○ 즉,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이 낮고,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도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안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로 CCTV 및 지능형 감시 시스템과 가로등·보안등 설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군 지역에서는 빈집·폐가 정비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 안전정책이 획일적인 시설 확충에 그치기보다 도시와 농촌, 특히 읍·면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IV-8> 거주 행정구역별 안전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순위별 가중치)

(단위: %)

구 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조도 개선)	CCTV 설치 및 지능형 감시 시스템 도입	비상벨 및 안심 귀갓길 표지판 설치	방치된 공가(빈집) 및 폐가 정비	경찰 순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확대
시/군	시	460	28.2%	36.7%	9.7%	9.1%	16.4%
	군	407	29.4%	35.8%	8.2%	14.7%	12.0%
거주 행정구역 특성	동 지역	333	28.7%	37.9%	9.6%	7.5%	16.2%
	읍 지역	387	28.8%	38.2%	8.5%	11.8%	12.7%
	면 지역	147	28.8%	27.2%	8.8%	20.9%	14.3%

□ 일상적 안전 인식과 상황별 불안 간의 간극

○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대부분 참여대상자가 일상생활 전반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소 여성폭력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회적, 주거적 취약성이 높거나 야간에 홀로 보행하는 등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과 경계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거주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확인됨

❍ 이는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이 일상적인 위험 인식보다는 개인의 사회·주거환경, 시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개인의 안전 인식 제고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취약한 주거환경과 야간 보행 등 위험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안전환경 개선과 예방적 대응체계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서 밤에는 다니기 무서워요. 지금 사는 곳이 월세가 싼 곳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청소년 B)
> "결혼해서 한국 산 지 15년이 지났지만, 밤에는 혼자 다니기 무서워요. 이상하게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이주민 A)
> “평소 다니면서 크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도 유흥가 주변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 어두운 주차장의 경우에는 경계가 되죠”(청년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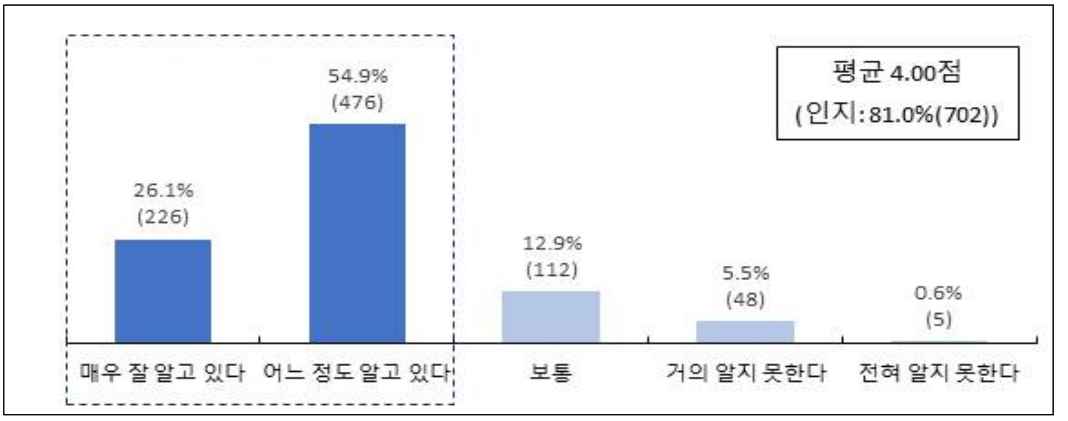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특히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의 CCTV 확충과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함. CCTV의 경우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확대와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특히 이러한 의견은 여성폭력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지역의 물리적 안전환경 개선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아무래도 골목길에 CCTV가 많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B), "저도 CCTV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이주민 A)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있긴 한 것 같은데,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청년 A)

○ 본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여성폭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는 비율이 81.0%(매우 잘 알고 있다 26.1%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4.9%)로 나타남. 한편, 알지 못한다는 비율은 6.1%(거의 알지 못한다 5.5% + 전혀 알지 못한다 0.6%)에 불과함. 본 문항은 5.00점 만점에 평균 4.00점으로 나타남



[그림 IV-5] 여성폭력 인지도

○ 권역별 여성폭력 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해안권 군지역(M=3.64)의 여성폭력 인지도가 다른 모든 시지역 및 군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F=6.02$, $p<.001$). 이는 지역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방교육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함

○ 반면 동해안권·남부권·북부권의 시지역은 모두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남부권 및 북부권 군지역 또한 동해안권 군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이는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간 여성폭력 인식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

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교육과 홍보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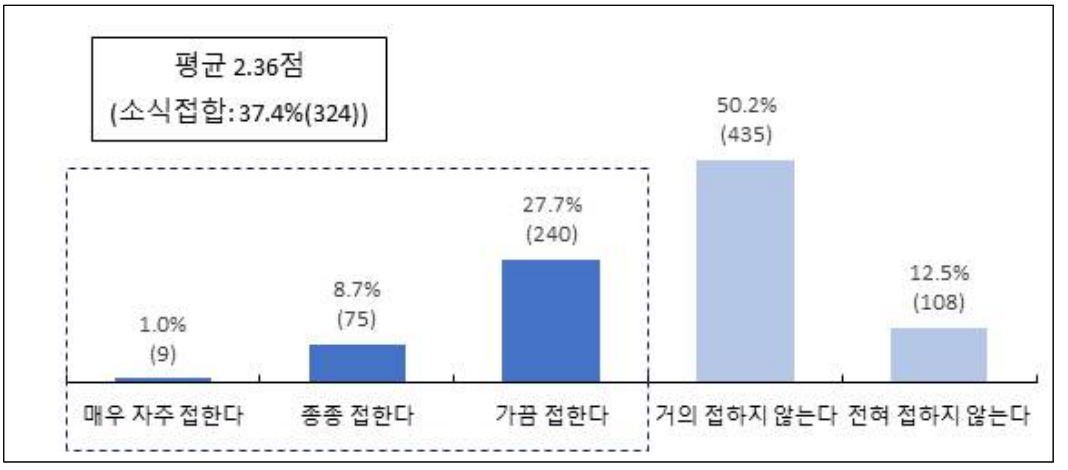
❍ 따라서 여성폭력 예방정책은 획일적인 교육과 홍보에서 벗어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예방교육, 마을단위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역 리더 및 생활밀착형 기관을 활용한 홍보 등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문화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Ⅳ-9> 권역간 여성폭력 인지도 차이 검증(N=867)

권역	N	M	SD	F	*p*	*scheffe*
동해안권 시지역[a]	167	4.10	.73			
남부권 시지역[b]	179	4.08	.67			
북부권 시지역[c]	114	4.15	.82	6.02	.000	a,b,c,e,f>d
동해안권 군지역[d]	105	3.64	1.04			
남부권 군지역[e]	167	4.00	.79			
북부권 군지역[f]	135	3.95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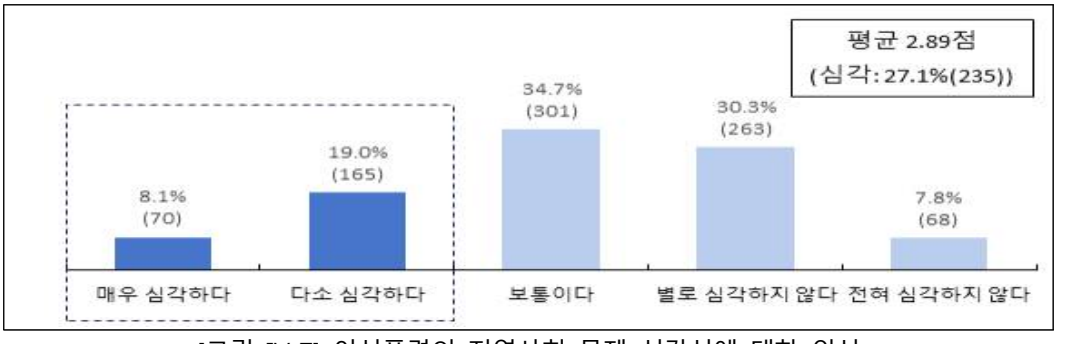
*p<.05, **p<.01, ***p<.001

❍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지역에서 여성폭력 관련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소식을 접한다는 비율이 37.4%(매우 자주 접한다 1.0% + 종종 접한다 8.7% + 가끔 접한다 27.7%)로 나타남. 한편, 접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2.6%(거의 접하지 않는다 50.2% + 전혀 접하지 않는다 12.5%)로 높게 나타남. 본 문항은 5.00점 만점에 평균 2.36점으로 나타남



[그림 Ⅳ-6] 여성폭력 소식 접하는 정도

○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가 여성폭력은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심각하다는 비율이 27.1%(매우 심각하다 8.1% + 다소 심각하다 19.0%)로 나타남. 한편,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은 38.2%(별로 심각하지 않다 30.3% + 전혀 심각하지 않다 7.8%)로 나타남. 본 문항은 5.00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로 나타남



[그림 Ⅳ-7] 여성폭력의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성별에 따른 지역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평균 3.24점(SD=1.10), 여성은 2.99점(SD=.81)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폭력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t=3.51$, $p<.001$). 이는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에 있어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이 여성폭력의 위험과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Ⅳ-10> 성별에 따른 지역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N=867)

지역	N	M	SD	t	*p*
남	460	3.24	1.10	3.51	.000
여	407	2.99	.81		

○ 시군에 따른 지역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 시 지역(M=2.95, SD=1.04)이 군 지역(M=3.29, SD=1.06)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4.68, p<.001). 즉, 점수가 낮을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 지역보다 시 지역 주민이 여성폭력을 지역사회의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Ⅳ-11> 시군에 따른 지역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N=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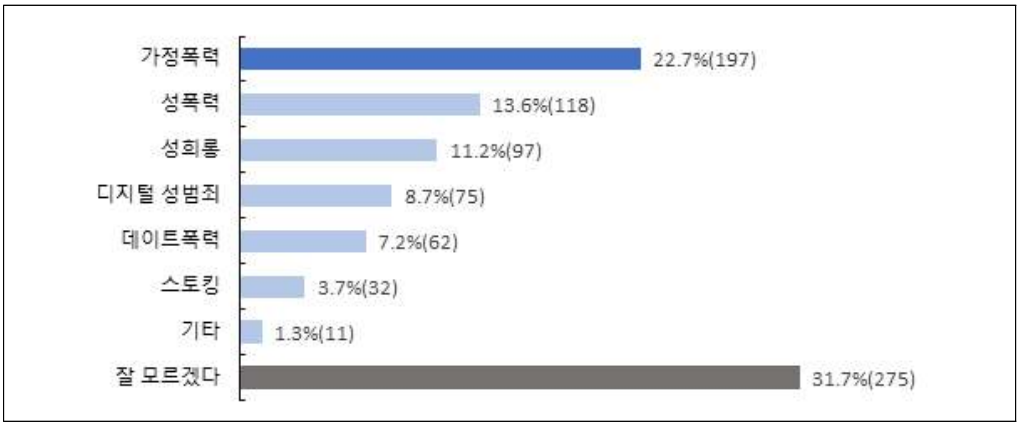
지역	N	M	SD	t	*p*
시	460	2.95	1.04	-4.68	.00
군	407	3.29	1.06		

○ 행정구역 유형에 따라서도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F=8.72, p<.001). 동 지역은 평균 2.93점(SD=1.02), 읍 지역은 3.17점(SD=1.05), 면 지역은 3.33점(SD=1.12)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Scheffé) 결과 동 지역이 읍 및 면 지역보다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음(a<b, c). 즉,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여성폭력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2> 행정구역에 따른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N=867)

권역	N	M	SD	F	*p*	*scheffe*
동[a]	333	2.93	1.02			
읍[b]	387	3.17	1.05	8.72	.000	a < b,c
면[c]	147	3.33	1.12			

-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도시적 특성이 강한 시·동 지역에서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군·읍·면 지역에서는 심각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 이는 여성폭력의 실제 발생 정도와 별개로 지역에 따라 여성폭력을 문제로 인식하고 체감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특히 읍·면 등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관계적 특성이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정보 접근성 등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성폭력 13.6%, 성희롱 11.2%, 디지털 성범죄 8.7%, 데이트폭력 7.2%, 스토킹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1.7%로 특정 여성폭력 유형에 대한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이는 지역주민 상당수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떠한 여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지역사회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 유형과 위험신호, 피해자 지원체계 등에 대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Ⅳ-8]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폭력을 가장 빈번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여성은 성폭력에 대한 응답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응답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특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여성 34.8%, 남성 28.2%로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 여성폭력의 직접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가정폭력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에서도 26.0%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6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여성폭력 관련 교육 및 캠페인 경험에서도 60대의 경험률이 44.6%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두 결과 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므로, 고령층의 여성폭력 관련 정보 및 예방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시·군별로는 시 지역에서 성폭력(15.4%)과 디지털 성범죄(12.4%)에 대한 인식이 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군 지역에서는 가정폭력(24.3%)에 대한 응답이 시 지역(21.3%)보다 높았음.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시 지역 12.4%, 군 지역 4.4%로 8.0%p의 차이를 보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군 지역이 38.8%로 시 지역(25.4%)보다 13.4%p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시·군 간 여성폭력의 실제 발

생 차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접하는 여성폭력 관련 정보와 예방교육, 사회적 관심 등의 차이가 여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줌

○ 따라서 본 결과는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정책이 단순히 예방교육과 캠페인의 양적 확대에 머무르기보다, 지역과 연령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특히 군·읍·면 지역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생활권 기반의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여성폭력의 유형과 위험신호를 인식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기관 및 신고·상담체계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연령과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IV-13>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

(단위: 점, %)

구 분			가정 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희롱	기타	잘 모름
성별	남성	404	24.3%	12.9%	8.9%	4.5%	8.2%	11.6%	1.5%	28.2%
	여성	463	21.4%	14.3%	8.4%	3.0%	6.3%	10.8%	1.1%	34.8%
연령대	20대	132	17.4%	14.4%	9.8%	4.5%	3.0%	14.4%	1.5%	34.8%
	30대	146	24.0%	14.4%	8.2%	6.8%	8.9%	13.0%		24.7%
	40대	177	26.0%	15.8%	12.4%	1.7%	11.3%	8.5%	1.7%	22.6%
	50대	199	29.1%	17.1%	7.0%	3.0%	7.5%	9.5%	1.5%	25.1%
	60대	213	16.4%	7.5%	6.6%	3.3%	4.7%	11.7%	1.4%	48.4%
시/군	시	460	21.3%	15.4%	12.4%	4.6%	8.3%	11.5%	1.1%	25.4%
	군	407	24.3%	11.5%	4.4%	2.7%	5.9%	10.8%	1.5%	38.8%
거주 행정구역 특성	동 지역	333	21.9%	15.9%	12.9%	3.9%	9.0%	10.5%	1.2%	24.6%
	읍 지역	387	23.8%	13.2%	5.7%	2.6%	7.2%	10.3%	1.0%	36.2%
	면 지역	147	21.8%	9.5%	6.8%	6.1%	2.7%	15.0%	2.0%	36.1%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양극화**

❍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참여자별로 인식 차이가 나타났음. 청소년과 청년 참여자들은 뉴스와 학교 등을 통해 접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와 온라인 기반 여성폭력의 확산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여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음.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삭제나 해결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심각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부 참여자는 여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자신의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는 체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중장년 참여자는 뉴스를 통해 관련 사건을 접하지만 개인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이주민 참여자는 과거 다문화가정 통역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자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해당 경험이 감소하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이전보다 낮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사회 전체의 발생 수준보다는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노출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장애인 참여자는 지인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장한 접근과 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피해를 언급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성대상 범죄가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폭력 유형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직접적인 경험이나 주변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을 개인적·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즉,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여성폭력을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저는 여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그 이유는) 학교에서도 그렇고..뉴스를 통해서도 딥페이크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청소년 A),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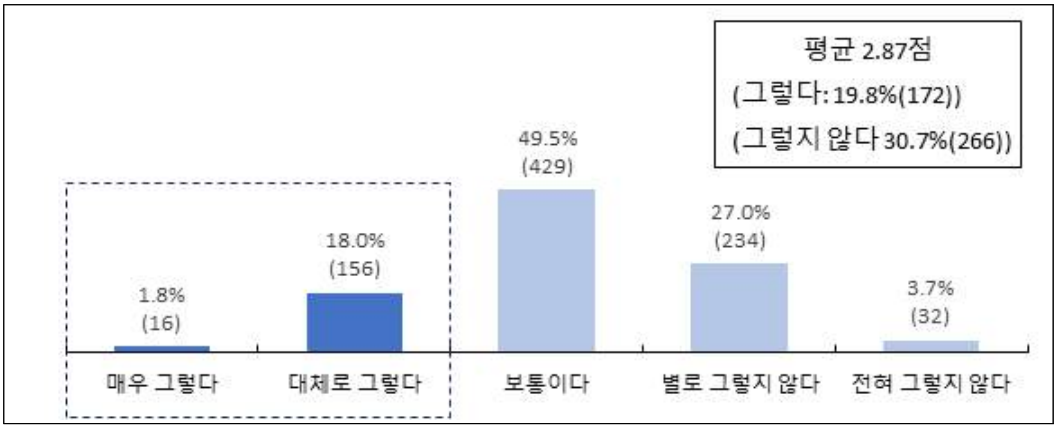
“여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여성폭력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건 빨리 해결될 수도 없잖아요.”(청년 A)

“글쎄요.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았고, 한국말도 곧 잘해서 예전에는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갈등이 있을 때 통역을 많이 했거든요. 가정폭력을 종종 보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플로 있어서 통역하는 일을 많이 안 하긴 해요. 많이 안 보다보니.. 요즘은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해요.”(이주민 A)

“가끔 뉴스에서 여성폭력 문제를 접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건 아니어서 여성폭력이 지역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중장년 B)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는 스마트폰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친구처럼 지내다가 사랑한다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언니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그 언니 이혼당하고 쫓겨났어요.”(장애인 A)

○ [그림 Ⅳ-9]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보호받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비율이 19.8%(매우 그렇다 1.8% + 대체로 그렇다 18.0%)로 나타남. 한편,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30.7%(별로 그렇지 않다 27.0% + 전혀 그렇지 않다 3.7%)로 나타남. 본 문항은 5.00점 만점에 평균 2.87점으로 나타남



[그림 Ⅳ-9]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성별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평균 2.65점(SD=.91), 여성은 2.98점(SD=.91)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t=-5.39, p<.001). 점수가 낮을수록 지원 및 보호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원 및 보호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Ⅳ-14> 성별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N=867)

지역	N	M	SD	t	*p*
남	460	2.65	.91	-5.39	.00
여	407	2.98	.91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충분성에 대한 연령별로는 60대의 평균이 3.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30.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30대는 평균 2.75점으로 가장 낮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6.3%로 가장 높았음. 20대(2.83점), 40대(2.84점), 50대(2.80점) 역시 평균이 3점에 미치지 못했음. 이러한 결과는 청·중년층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히 30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의 접근성과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함

❍ 거주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평균이 2.92점으로 시 지역(2.8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도 군 지역이 22.6%로 시 지역(17.4%)보다 높았음, 반면, 지원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군 지역 28.5%, 시 지역 32.6%로 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앞서 살펴본 물리적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과 달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체계의 체감 수준은 군 지역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이러한 결과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직접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군 지역의 경우 60대 이상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구성의 차이가 지

역별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시·군 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석할 때에는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연령구성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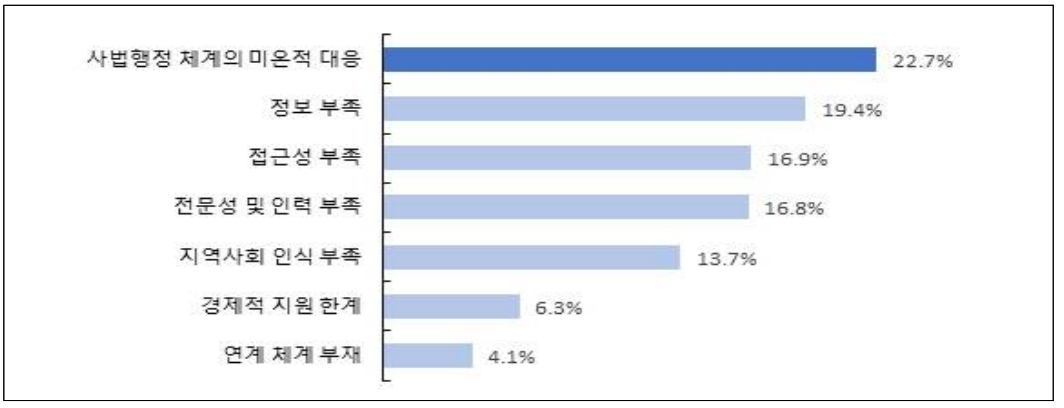
○ 거주 행정구역 특성별로는 읍 지역의 평균이 2.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 지역 2.85점, 면 지역 2.84점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읍 지역은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가 20.7%로 동 지역(17.7%)과 면 지역(22.5%) 사이의 수준을 보였음. 한편 면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로 동 지역(3.0%)이나 읍 지역(3.6%)보다 높아, 농촌지역 내에서도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원체계에 대한 체감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줌

<표 Ⅳ-15>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보호받는 정도

(단위: 점, %)

구 분			평균(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연령대	20대	132	2.83	1.5%	13.6%	55.3%	25.0%	4.5%
	30대	146	2.75	3.4%	11.0%	49.3%	29.5%	6.8%
	40대	177	2.84	2.3%	16.4%	47.5%	30.5%	3.4%
	50대	199	2.80	1.5%	14.6%	48.2%	33.7%	2.0%
	60대	213	3.09	0.9%	30.0%	48.8%	17.4%	2.8%
시/군	시	460	2.83	2.0%	15.4%	50.0%	28.7%	3.9%
	군	407	2.92	1.7%	20.9%	48.9%	25.1%	3.4%
거주 행정구역 특성	동 지역	333	2.85	1.8%	15.9%	50.5%	28.8%	3.0%
	읍 지역	387	2.91	2.1%	18.6%	50.9%	24.8%	3.6%
	면 지역	147	2.84	1.4%	21.1%	43.5%	28.6%	5.4%

○ 여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순위별로 살펴본 결과, 사법행정 체계의 미온적 대응이 22.7%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정보 부족(19.4%), 접근성 부족(16.9%), 전문성 및 인력 부족(16.8%), 지역사회 인식 부족(13.7%), 경제적 지원 한계(6.3%), 연계 체계 부재(4.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Ⅳ-10] 여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낮은 인지도와 사회적 장벽**

❍ 심층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담기관의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지원체계를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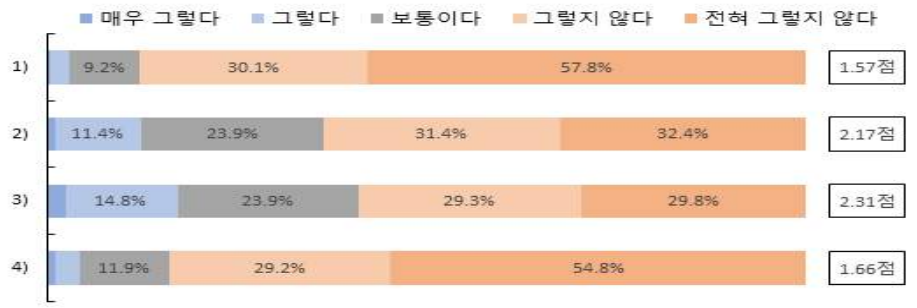
❍ 특히 스토킹 피해 경험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사건이 충분히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찰 신고 외에는 이용 가능한 지원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함

❍ 아울러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는 데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제도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호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어요."(청소년 A)
"저는 전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집에 찾아오고 해서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거든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경찰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하니깐 전 남친이 잠잠하긴 한데.. 혼자 원룸에 사니깐 가끔씩은 나타날까봐 무섭죠.. 상담소를 연결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청소년 B)
"상담소가 가까이 있나요? 가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청소년 C)
"여성폭력 사건만 이슈가 되고 지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잘 모르겠네요"(중장년 B)
"사회적 인식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집안일인데 왜 신고하느냐, 괜히 일을 크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관계 이 정도 일로 신고해도 되는가라는 고민할 수 있고 신고한 뒤에 관계가 나빠질까 봐 걱정할 수도 있어요."(청년 B)

2) 폭력 허용도 및 폭력 피해 두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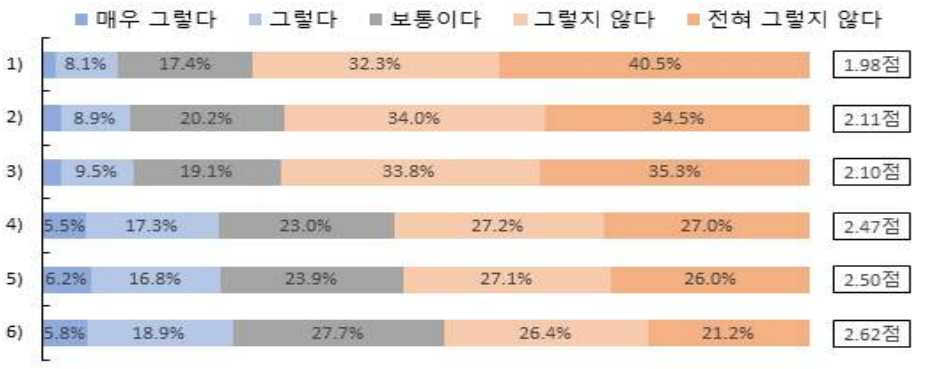
○ 응답자가 생각하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 보통(3점) 미만의 점수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점수가 높은 경우는 3)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는 때릴 수도 있다(2.31점)로 나타남. 이어서, 2)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때릴 수 있다(2.17점), 4)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 있다(1.66점), 1)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상사는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 있다(1.57) 순으로 나타남



1)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상사는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 있다.
2)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때릴 수 있다(구타, 체벌 등).
3)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는 때릴 수도 있다.
4)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 있다.

[그림 Ⅳ-11] 폭력 허용도

○ 응답자가 생각하는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본 결과, 모두 보통(3점) 미만의 점수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6) 나는 밤늦게 동네(골목길)를 지나거나(걷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가 2.62점으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5)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택배, 수리기사 방문 등)의 방문이 두렵다(2.50점), 4) 누군가 나를 불법 촬영할까 봐 두렵다(2.47점), 2)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력할까봐 두렵다(2.11점), 3)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집요하게 괴롭힐까봐 두렵다(2.10점), 1) 친밀한 누군가가 나를 구타(폭력)할까봐 두렵다(1.98점) 순으로 나타남



1) 친밀한 누군가(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가족/친척, 친구)가 나를 구타(폭력)할까 봐 두렵다.
2)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력 할까 봐 두렵다
3)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4) 누군가 나를 불법 촬영할까 봐 두렵다(공중화장실, 공공장소, 유흥시설 등).
5)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택배, 수리기사 방문 등)의 방문이 두렵다.
6) 나는 밤늦게 동네(골목길)를 지나거나(걷거나)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

[그림 IV-12] 폭력 피해 두려움

□ **폭력에 대한 허용적 인식과 낮은 민감성**

❍ 대부분의 참여자는 가정, 직장, 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행동에 비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한 훈육으로 인식하거나, 연인 간 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고함, 폭언,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임

❍ 이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을 보여줌. 따라서 여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와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확산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들 키우면서 말 안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식이니깐 그런거2지.."(이주민 A)
"연인끼리 다투다보면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지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알바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고함은 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나한테 피해만 안되면..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청소년 B)
"부부끼리 몸을 치면서 싸우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싸우다 보면 몸도 칠수 있고, 물건도 던질 수 있고.... 글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중장년 A)
"부부가 싸우다보면, 의견이 안 맞아서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소리도 지를 수도 있죠.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면.."(이주민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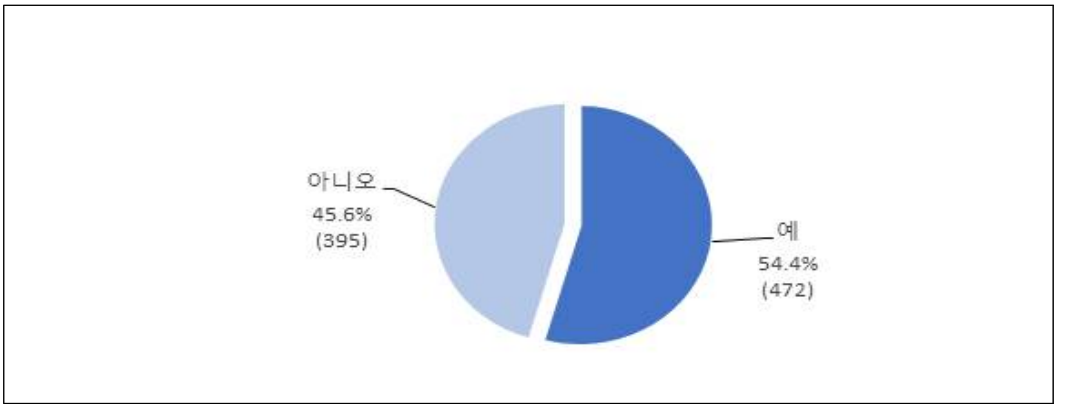
□ **과거 피해 경험으로 인한 불안과 안전감 저하**

○ 한 참여자는 과거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경험 이후 혼자 있는 시간, 야간 귀가, 배달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낌. 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리적 불안과 경계심이 지속되며, 피해자의 일상적인 안전감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무섭죠. 배달시킬때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밤에 집에 들어갈때도 그렇구요. 예전에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자꾸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B)

3)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 정도

○ 최근 3년 사이에, 여성 폭력 관련 교육(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이나 캠페인을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가 54.4%, '아니오'가 45.6%로 나타남



[그림 IV-13]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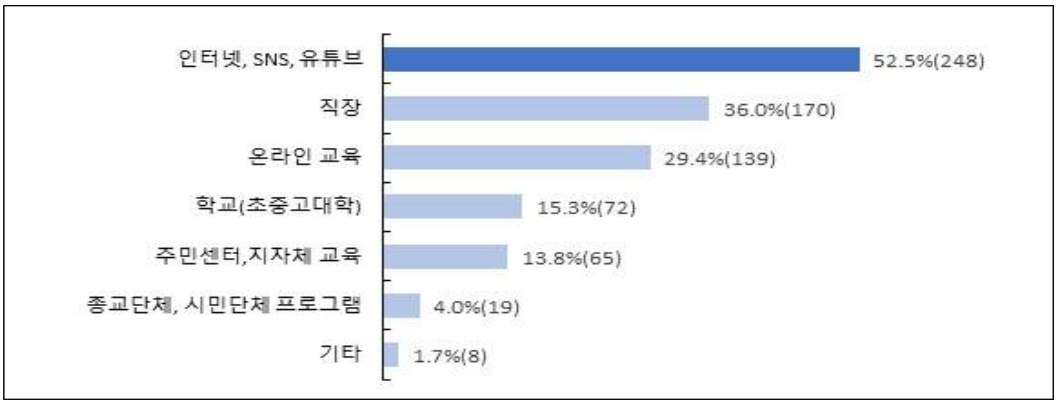
- ❍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 경험 여부에 관해 성별로는 남성의 경험률이 56.9%로 여성(52.3%)보다 4.6%p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이 여성에게만 집중되기보다는 남성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59.3%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56.8%, 30대 54.1%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60대는 44.6%로 가장 낮았고, '아니오'가 55.4%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음. 이는 고령층일수록 여성폭력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 및 생활권 중심의 홍보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시·군별로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시 지역은 여성폭력 관련 교육·캠페인을 본 경험이 62.0%인 반면, 군 지역은 45.9%에 그쳐 16.1%p의 차이를 보였음. 특히 군 지역에서는 '아니오'가 54.1%로 절반을 넘었다. 거주 행정구역별로도 동 지역의 경험률은 62.2%로 가장 높았으나, 읍 지역은 49.6%, 면 지역은 49.7%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 등 농촌지역 주민들이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에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Ⅳ-16>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을 본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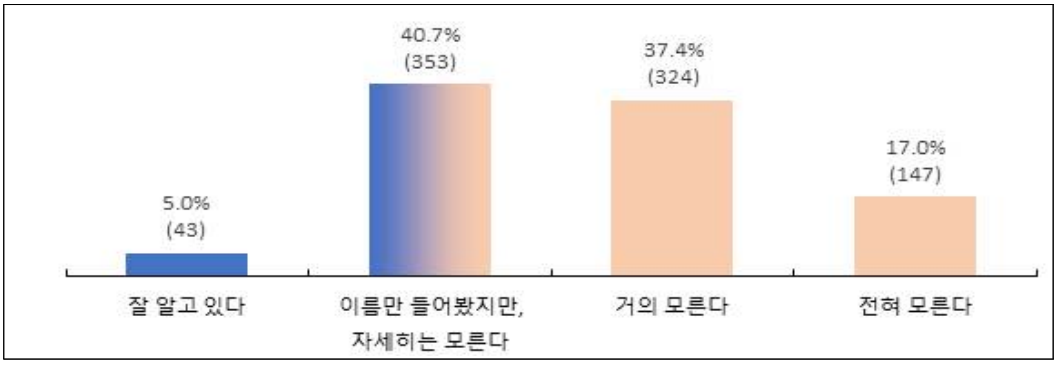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867	54.4%	45.6%
성별	남성	404	56.9%	43.1%
	여성	463	52.3%	47.7%
연령대	20대	132	56.8%	43.2%
	30대	146	54.1%	45.9%
	40대	177	59.3%	40.7%
	50대	199	59.3%	40.7%
	60대	213	44.6%	55.4%
시/군	시	460	62.0%	38.0%
	군	407	45.9%	54.1%
거주 행정구역 특성	동 지역	333	62.2%	37.8%
	읍 지역	387	49.6%	50.4%
	면 지역	147	49.7%	50.3%

○ 여성 폭력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을 본 472명에 한해 그 경로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인터넷, SNS, 유튜브가 52.5%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직장(36.0%), 온라인 교육(29.4%), 학교(초중고대학)(15.3%), 주민센터, 지자체 교육(13.8%), 종교단체, 시민단체 프로그램(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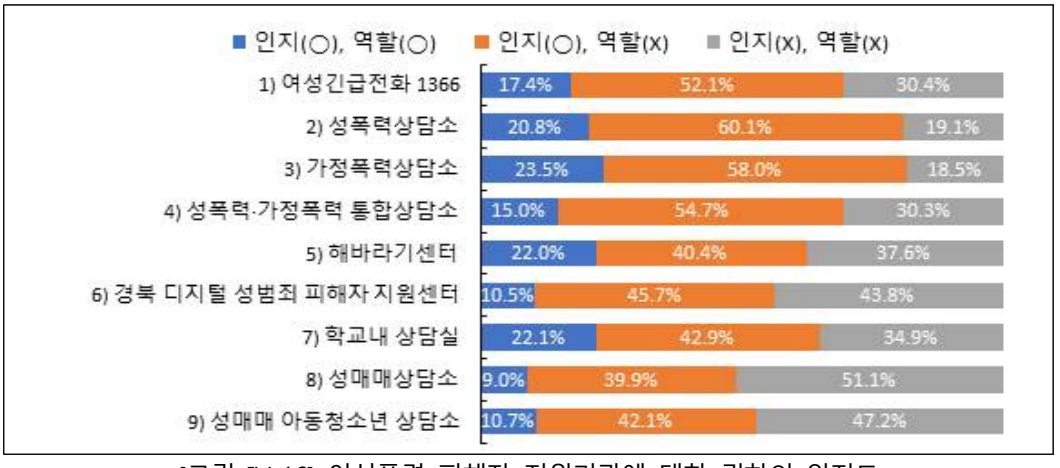
[그림 Ⅳ-14] 최근 3년 사이 여성폭력 관련 교육, 캠페인을 보게 된 경로

○ 현재 거주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름만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가 40.7%로 높았음. 이어서, 모른다가 54.3%(거의 모른다 37.4% + 전혀 모른다 17.0%)로 모른다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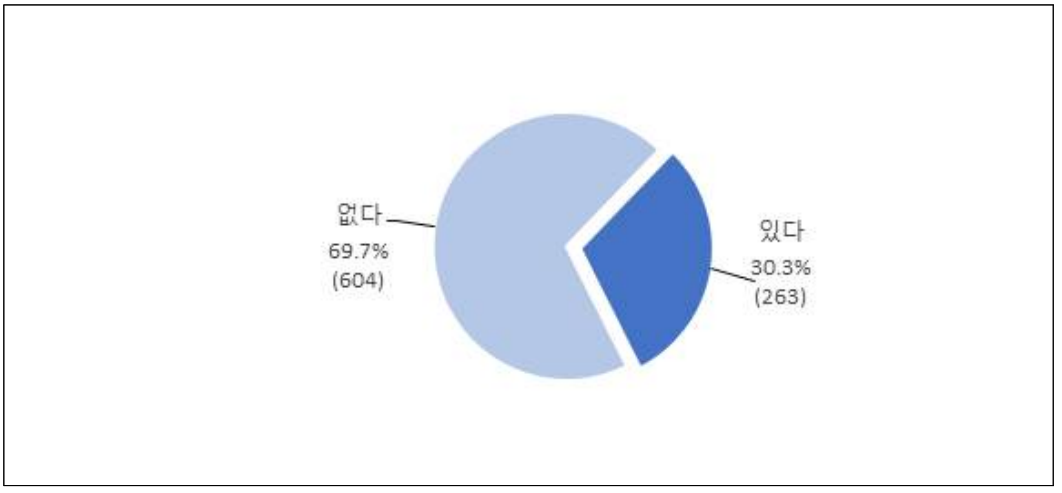
[그림 IV-15] 현재 거주 지역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 서비스 인지 여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3) 가정폭력상담소가 81.5%, 2) 성폭력상담소(80.9%), 4)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69.7%), 1) 여성긴급전화 1366(6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원기관의 역할을 인지하는 경우는 3) 가정폭력상담소가 23.5%, 7) 학교내 상담실(22.1%), 5) 해바라기센터(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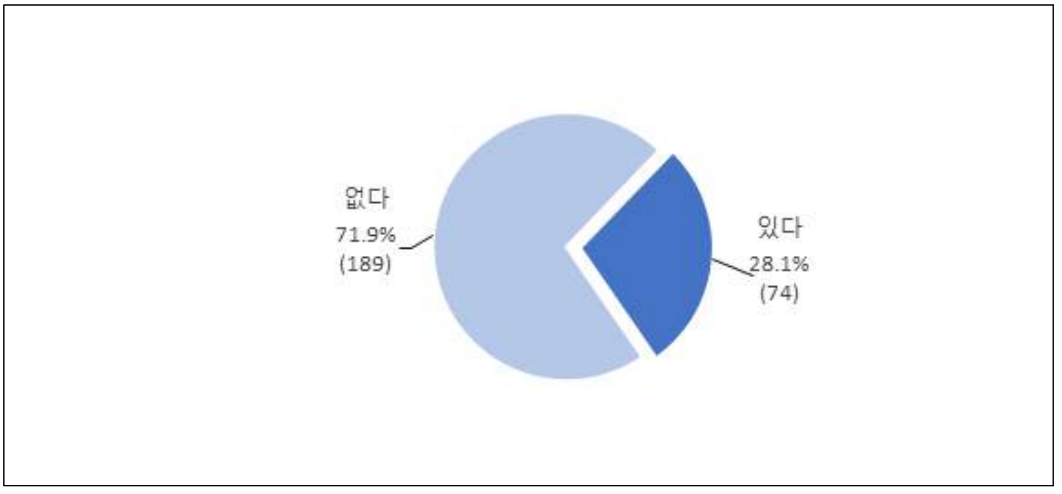
[그림 IV-1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 설문조사를 통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30.3%, 없다가 69.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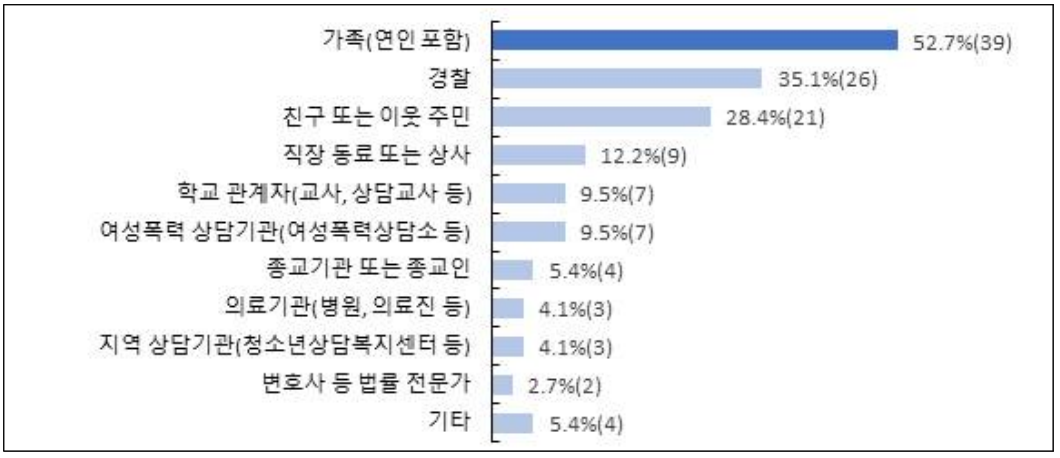
[그림 Ⅳ-17] 폭력 경험 여부

❍ 폭력 경험자 263명을 대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28.1%, 없다는 71.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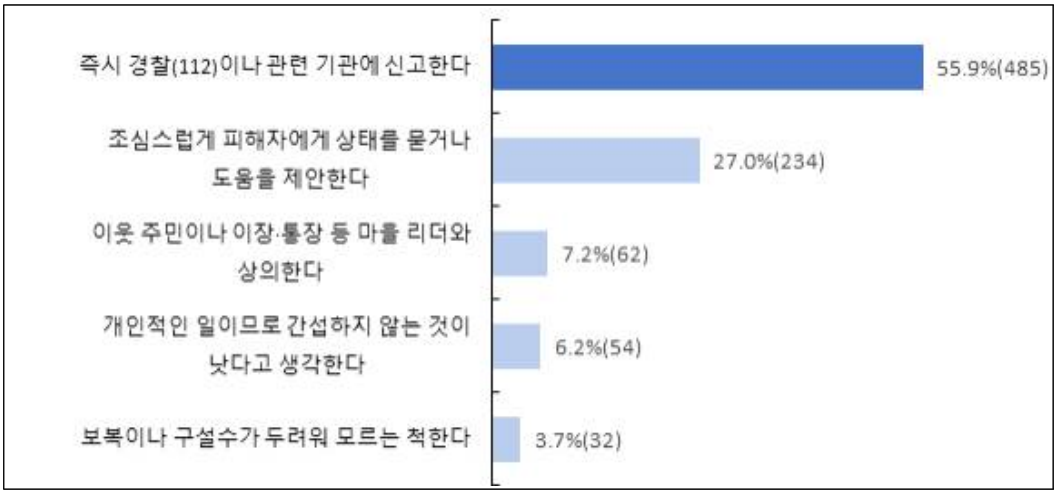
[그림 Ⅳ-18]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연인을 포함한 가족이 52.7%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경찰(35.1%), 친구 또는 이웃 주민(28.4%), 직장 동료 또는 상사(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9]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

❍ 이웃에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과 같은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응답자는 어떻게 행동하겠는지 살펴본 결과, 즉시 경찰(112)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상태를 묻거나 도움을 제안한다가 27.0%, 이웃 주민이나 이장, 통장 등 마을 리더와 상의한다(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0] 이웃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응답자의 행동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제한적인 접근 경로**

❍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의 명칭은 일부 들어본 적이 있으나, 기관의 역할이나 지원 내용, 이용 방법 및 위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 중장년,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에서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확인되었음

❍ 또한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성폭력 전문기관보다 평소 이용하거나 신뢰하고 있는 기관 및 주변 지원체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음. 이주민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은 복지기관 종사자나 활동지원사, 청소년은 학교나 주변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보다 익숙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참여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의 접근성이 단순히 기관의 설치 여부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권 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시사함. 따라서 여성폭력 피해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복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기관 등 생활밀착형 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전문 지원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긴급전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스토킹 피해 있을 때도 경찰에 연락했어요."(청소년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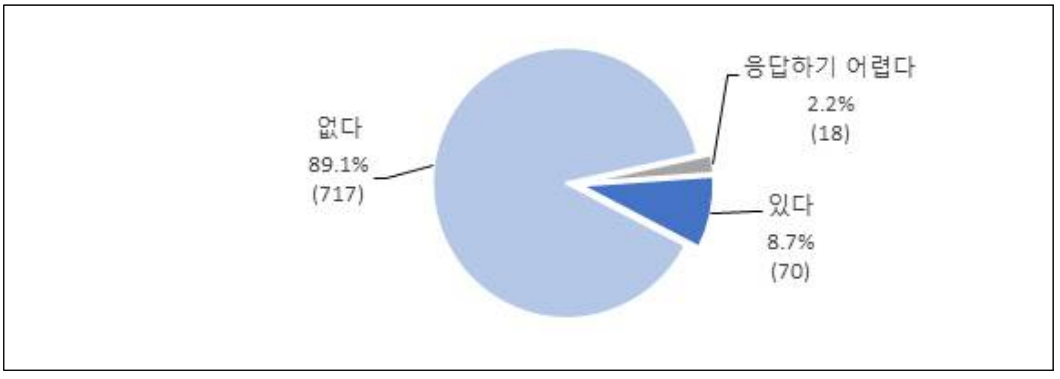
"저는 상담소는 들어본 것 같은데, 뭘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처음 들었어요."(청소년 B)

"상담센터에서 부부상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잘 모르겠네요."(중장년 A)

"여성폭력피해 지원센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문화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무슨일 있으면//거기에 얘기하니깐..."(이주민 A)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고 도움 받았어요."(이주민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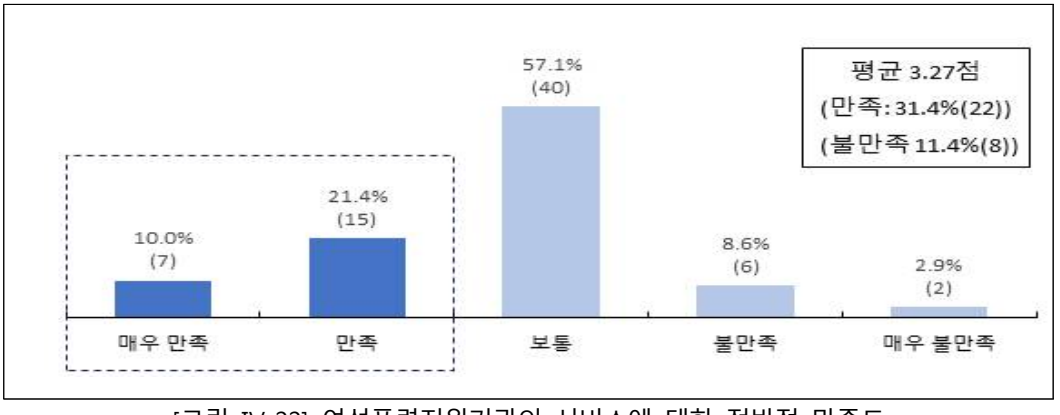
"여성폭력상담소는 잘 몰라요. 저희는 복지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으니깐요."(장애인 A) "선생님에게 얘기하면 돼요."(장애인 B)

❍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경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직장내 고충상담창구, 위(wee)클래스 및 대학인권센터 등 학교내 상담실, 성매매 상담소, 성매매 아동청소년 상담소와 같은 기관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비율이 8.7%, 응답하기 어렵다 2.2%, 없다는 비율이 89.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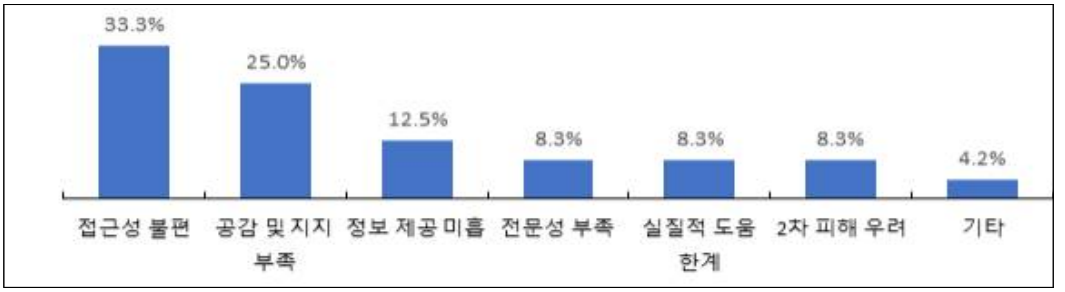
[그림 IV-21]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 여부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경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직장내 고충상담창구, 위(wee)클래스 및 대학인권센터 등 학교내 상담실, 성매매 상담소, 성매매 아동청소년 상담소와 같은 기관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비율이 8.7%, 응답하기 어렵다 2.2%, 없다는 비율이 89.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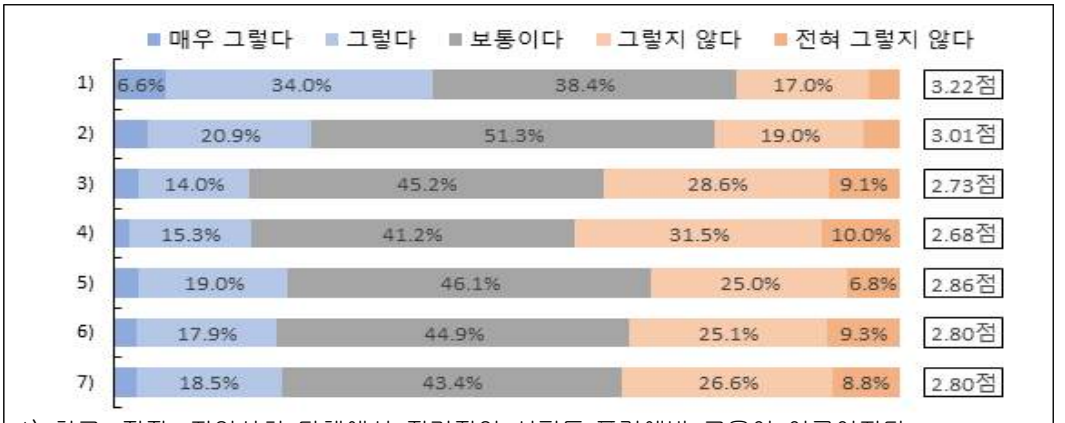
[그림 IV-22] 여성폭력지원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불만족 경험자 8명에 한해 이용 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거나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순위별로 살펴본 결과, 접근성이 불편하다가 33.3%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공감 및 지지 부족(25.0%), 정보 제공 미흡(12.5%), 전문성 부족, 실질적 도움 한계, 2차 피해 우려(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Ⅳ-23] 이용과정에서 불만족 스럽거나 아쉬운 점

❍ 여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1) 학교, 직장, 지역사회 단체에서 정기적인 성평등·폭력예방 교육이 이루어진다가 3.2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남. 이어서 2) 주민센터, 복지기관, 경찰, 상담소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3.0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1) 학교, 직장, 지역사회 단체에서 정기적인 성평등·폭력예방 교육이 이루어진다
2) 주민센터, 복지기관, 경찰, 상담소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여성폭력 피해자가 오기 전이라도, 위험이 높은 지역·가구를 찾아가는 선제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4) 농촌·어촌·외곽지역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사업이 있다
5) 청소년, 장애여성, 이주여성, 노년 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6) 지역 언론·미디어, 종교·시민단체 등이 여성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7) 주민들이 여성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림 Ⅳ-24] 여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운영 만족도

□ **형식적 예방교육 운영 및 대상자 맞춤형 교육체계 미비**

❍ 심층면접 결과, 청소년과 장애인은 학교, 청소년상담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이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교육의 지속성과 체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장애인 참여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수칙과 피해 발생 시 교사나 종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받았다고 응답하여, 예방교육이 생활 속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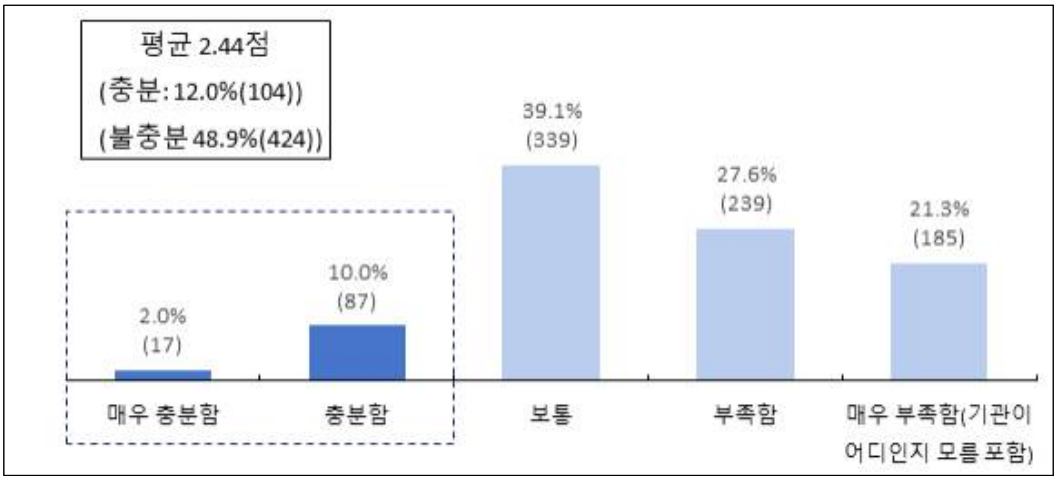
❍ 반면, 이주민과 중장년 참여자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관련 홍보를 접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특정 대상이나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교육 실시 여부에 머무르기보다 참여자의 이해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생애주기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또한 학교 중심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기관, 주민조직 등 생활권 기반의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은 학교에서 매번 받아요. 영상 시청하는 걸로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청소년 C)
>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뭐.. 그냥 아는 내용 정도..”(청소년 A)
> “경찰이 일하는 곳(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와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했었어요. 안 좋은 유튜브 보지 말라고 했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했어요.”(장애인 A) “그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말하라고 했어요.”(장애인 B)
> “여성폭력 예방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이주민 B)
>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역 중심의 홍보활동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중장년 B)

4) 정책 및 인프라 만족도

❍ 거주지역 내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나 전문기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충분하다가 12.0%(매우 충분함 2.0% + 충분함 10.0%), 부족함이 48.9%(부족함 27.6% + 매우 불만족(기관이 어디인지 모름 포함) 21.3%)으로 나타남. 본 문항은 5.00점 만점에 평균 2.44점으로 나타남



[그림 Ⅳ-25] 거주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전문기관 충분성

❍ 성별에 따른 거주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전문기관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평균 2.67점(SD=1.00), 여성은 2.24점(SD=.95)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t=6.54$, $p<.001$)

❍ 점수가 낮을수록 상담소 및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거주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V-17> 성별에 따른 거주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전문기관 충분성에 대한 인식(N=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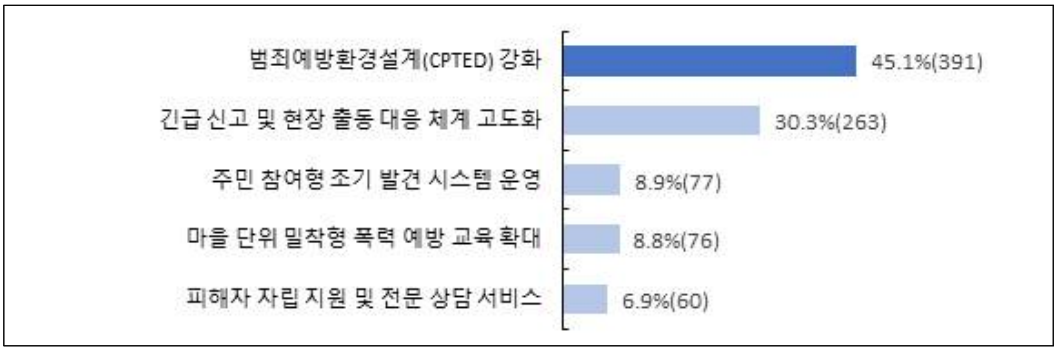
지역	N	M	SD	t	*p*
남	460	2.67	1.00	6.54	.00
여	407	2.24	.95		

❍ 경상북도에서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순위별로 살펴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처벌 체계 구축이 37.8%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지역 밀착형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확대(16.5%),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산간벽지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강화(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6] 경북에서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 지역에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안심 귀갓길 조성 및 가로등, CCTV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강화가 45.1%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위기 상황 대비 24시간 긴급 신고 및 현장 출동 대응 체계 고도화(3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Ⅳ-27]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층적 대응체계 마련 요구**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제도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관리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음

❍ 또한 여성폭력 피해 발생 시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지원기관의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참여자들은 지원기관이 존재하더라도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의 역할과 이용방법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함. 특히 농촌이나 소규모 지역에서는 피해 사실이 쉽게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로 피해를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소문을 확산시키는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편, 여성폭력 예방은 사후 대응뿐 아니라 갈등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상담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특히 군 지역 등에서는 부부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사전에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 상담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인됨

❍ 마지막으로 예방교육은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학생 대상 의무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동호회 등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참여자들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① 가해자 처벌 및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② 접근성 높은 상담·지원체계 구축과 홍보 강화, ③ 피해자 중심의 지역사회 인식 개선, ④ 예방 중심의 상담서비스 확대, ⑤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 예방교육 확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여성폭력 예방이 법·제도적 대응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생태계와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함

"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려면 가해자 처벌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A) "저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감시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딥페이크에 대한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청소년 C)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있다면, 홍보가 필요해요. 알고 갈 수 있어야지 도움을 요청하고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청년 A)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피해자를 탓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동네에 살다 보니 소문 때문이라도 쉬쉬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청년 B)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지만, 우리 지역(군지역)에는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중고령 A)

"학생이 아니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동네에서 자치회나 동호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전파되지 않을까요?"(중고령 B)

3. 소결

1) 조사 결과

○ 본 조사는 경상북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 및 여성폭력 인식, 폭력 허용도와 피해 두려움,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및 자원에 대한 인식, 피해자 지원체계, 예방교육과 정책수요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였음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경상북도 지역주민은 거주지역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여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생활상황에서의 안전감, 지역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체감,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실질적 정보와 접근성, 예방교육의 실효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이 확인되었음. 특히 성별·연령·지역에 따라 안전 인식과 여성폭력에 대한 체감 및 정보 접근성에서 차이가 나타나,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접근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감은 높지만, 야간·독거·취약공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안전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적 안전감의 간극'이 확인되었음

- 거주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72.8%(3.83점),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는 응답도 65.7%(3.71점)로 비교적 높았음. 그러나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7.1%(3.17점)에 그쳤음. 특히 군 지역 주민은 시 지역보다 야간 보행 안전감과 치안 및 안전시설 충분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여성도 남성보다 야간 보행과 안전 인프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과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안전환경 개선 요구에서는 CCTV 및 지능형 감시 시스템 도입이 36.3%로 가장 높았고,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조도 개선이 28.8%로 뒤를 이었다. 특히 면 지역에서는 공가·빈집·폐가 정비 요구가 20.9%로 동 지역 7.5%, 읍 지역 11.8%보다 높아, 안전 취약요인이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질적 조사에서도 평소에는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야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 어두운 주차장, 원룸 거주 등 특정 상황에서 불안이 높아지는 경험이 확인되었음

○ 둘째,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적 인지도는 높지만 이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로

체감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여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81.0%(4.00점)로 높았으나, 지역에서 여성폭력 관련 소식을 접한다는 비율은 37.4%(2.36점), 여성폭력을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27.1%(2.89점)에 그쳤음. 특히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여성폭력을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으며, 동해안권 군 지역의 여성폭력 인지도도 다른 권역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 또한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60대는 48.4%, 군 지역은 38.8%, 읍 지역은 36.2%, 면 지역은 36.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시 지역에서는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군 지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역별로 우려하는 폭력 유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음
- 질적 조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세대와 경험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음. 청소년과 청년층은 딥페이크와 온라인 기반 성범죄 등을 통해 여성폭력을 현실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 반면, 직접적인 피해나 주변 사례를 경험하지 않은 일부 중장년층은 여성폭력을 자신과 거리가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즉, 여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지역사회 체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

❍ 셋째, 전반적인 폭력 허용도와 여성폭력 피해 두려움은 높지 않았으나, 친밀한 관계나 야간생활 등 특정 상황에서의 위험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폭력 허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자녀 체벌 등 일부 폭력행위에는 다른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성이 나타났음. 여성폭력 피해 두려움 역시 모든 문항이 보통 수준 미만이었으나, 밤늦게 골목길을 지나거나 택시를 탈 때의 두려움이 2.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 2.50점,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 2.4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질적 조사에서는 과거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야간 귀가, 혼자 있는 시간, 배달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경계심이 나타났음. 이는 여성폭력 피해가 사건 발생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적인 안전감과 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넷째, 피해자 지원체계는 기관의 '존재 인지'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인지 및 접근성' 사이에 큰 간극이 나타났음

-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는 응답은 54.3%, 이름만 들어봤지만, 자세히 모른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명칭 인지도는 각각 81.5%, 80.9%로 높았지만, 기관의 역할까지 알고 있는 비율은 가정폭력상담소 23.5%, 학교 내 상담실 22.1%, 해바라기센터 22.0% 수준에 머물렀음. 즉, 기관명 인지도에 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수준은 현저히 낮았음
- 실제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였고, 이 가운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8.1%에 불과하였음. 도움을 요청한 대상도 가족 52.7%, 경찰 35.1%, 친구·이웃 28.4% 등 비공식 관계망이나 경찰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는 피해자가 전문상담기관보다 일상적인 관계망이나 일차 대응기관을 먼저 찾는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나 전문기관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48.9%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지역 내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음. 질적 조사에서도 기관의 위치·역할·이용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 다섯째, 예방교육과 캠페인은 일정 수준 확산되어 있으나 교육 경험이 실질적인 기억과 행동역량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 동안 여성폭력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을 접한 경험은 54.4%였지만, 질적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영상을 시청했음에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교육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확인되었음. 반면 이주민과 일부 중장년층은 예방교육 자체를 접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예방교육이 '이수 여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상자의 특성과 실제 생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여섯째, 주민들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물리적 안전환경, 긴급대응, 가해자 관리, 피해자 지원을 함께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

-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처벌체계 구축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는 안심귀갓길, 가로등·CCTV 설치 등 CPTED 강화가 45.1%, 24시간 긴급신고 및 현장 출동체계 고도화가 30.3%로 나타났음. 질적 조사에서도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지역 내 접근 가능한 상담·지원기관 확충, 지원기관 홍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소문을 확산시키지 않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종합하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반적 안전감과 상황적 불안', '여성폭력에 대한 높은 개념 인지도와 낮은 지역사회 체감', '지원기관 명칭 인지도와 실제 기능·이용 인지도', '예방교육 경험과 실질적 대응역량' 사이의 간극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간극은 성별, 세대, 시·군 및 읍·면 등 지역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 따라서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단일 사업의 부족으로만 보기보다, 안전환경에서 예방교육, 정보 접근, 조기 발견. 상담·연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가 생활권 안에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적 시사점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정책은 기존의 '개별 사업 및 전문기관 중심 대응'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조기발견·연계·보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북의 넓은 지역적 범위와 도시·농산어촌 간 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생활권과 대상 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판단됨

❍ 첫째,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공간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이 필요함. 전반적인 지역 안전감은 높았으나 야간 보행, 어두운 골목길, 원룸, 인적이 드문 공간 등에서는 불안이 증가하였고, 특히 군 지역의 안전 인프라 평가가 낮았음. 따라서 단순한 CCTV 설치 확대보다 주민의 이동경로와 실제 불안 경험을 분석하

여 위험공간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도시·읍 지역에서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하고, 면 지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 개선, 빈집·폐가 정비, 이동 안전지원 등을 강화하는 등 차등화된 CPTED 정책이 필요함

○ 둘째,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넘어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적 인지도는 높지만, 지역에서 어떠한 여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높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인식개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함. 특히 60대와 군·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폭력의 유형, 위험신호, 주변인의 대응방법, 신고·상담기관 정보를 생활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방정책의 목표도 '여성폭력을 아는 주민'에서 '여성폭력을 발견하고 적절히 연결할 수 있는 주민'으로 확장해야 함

○ 셋째, 지역과 세대·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실천형 예방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시 지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 군 지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령층에서는 여성폭력 유형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따라서 청소년·청년층에는 딥페이크,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교제폭력 등에 대한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중장년·고령층에는 가정폭력과 정서적·경제적 폭력, 위험신호 및 주변인 개입을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이주민과 장애인에게는 언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육자료와 접근 가능한 교육방식이 필요함. 또한 영상 시청이나 법정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사례학습, 역할극, 신고·도움 요청 훈련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천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

○ 넷째, 전문기관 중심 지원체계를 '생활권 게이트웨이-전문기관' 연계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은 전문기관의 명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기능과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했고, 실제 피해 발생 시 가족·경찰·이웃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복지관, 보건소, 학교, 경로당, 경찰, 마을조직 등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생활권 기관을 여성폭력 피해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연계를 위한 1차 게이트웨이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관별 발견, 상담. 의뢰. 연계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담당자의

기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함

- ❍ 다섯째, 농산어촌과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지원과 이동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전문기관의 물리적 확충만으로 경북의 넓은 지역적 범위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상담소 미설치 또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 권역별 순회상담, 생활거점 연계 상담·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문기관이나 보호시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 안심택시, 긴급 교통지원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여섯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 지역사회 2차 피해 예방을 동시에 강화해야 함. 주민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처벌을 우선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사법기관과 협력한 고위험·반복 가해자 관리와 재발방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농촌이나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도움 요청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비난과 소문 확산을 막고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지지·연계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예방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함
- ❍ 일곱째, 광역–권역–시·군–읍·면·동을 연결하는 다층적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여성폭력 예방은 전문상담기관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 경찰·사법기관, 여성폭력 전문기관, 보건·복지·교육기관, 지역사회 조직 및 주민의 참여가 요구된다. 광역에서는 정책기획과 조정, 전문성 지원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권역 및 시·군에서는 지역자원의 연계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읍·면·동 생활권에서는 위험의 조기 발견과 상담·전문기관 연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궁극적으로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정책은 ‘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전문기관을 찾아가는 체계’에서 ‘지역사회가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생활공간의 안전환경 개선에서 주민의 인식 및 대응역량 강화, 위험 조기 발견, 생활권 게이트웨이, 전문기관 상담·보호., 가해자 관리 및 재발방지 그리고 지역사회 모니터링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접근이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핵심 방향이라 할 수 있음

Ⅴ.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Ⅴ.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적이 있음. 이를 위해 여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인권기관, 경찰서 APO, 지역복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및 심층면접을 실시함. 본 조사는 2026년 6월 1일~7월 10일까지 진행되었음

1) 조사내용

○ 본 FGI 및 심층면접 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질문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 질문은 ① 지역사회 여성폭력 실태 및 인프라 진단 ②예방 및 지원시스템 연계체계 ③지역 밀착형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④정책 제언 및 제도적 보완임

<표 V-1> FGI 및 심층면접 질문

주제	질문
지역사회 여성폭력 실태 및 인프라 진단	• 최근 경북 지역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폭력 양상과 그 특징을 무엇입니까? • 현재 경북 내 시군별 지원기관의 배치와 자원이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어촌 산간지역 또는 여성폭력 미설치 지역 등에 발생하는 지원체계 공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방 및 지원시스템 연계 체계	• 경찰, 지자체, 상담소, 의료기관 간의 협업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작동하고 있나요? • 피해자 발견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정보 공유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고 생각하신다면 구조적 걸임돌은 무엇인가요? • 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주민이 참여하는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지역 밀착형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하게 도입하거나 강화해야 할 여성폭력 예방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주민 참여형 안전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 이주여성, 장애인, 고령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 생태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니까?
정책 제언 및 제도적 보완	• 경상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예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 폭력 예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FGI 및 심층면접 참여자

구분	성별	나이	경력	소속/직위
전문가 A	여	55	26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기관장
전문가 B	여	47	25년	
전문가 C	여	50	8년	
전문가 D	여	57	25년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장
전문가 E	여	40	12년	
전문가 F	남	48	15년	가족센터 센터장
전문가 G	여	40	19년	
전문가 H	여	44	17년	경찰(APO)
전문가 I	여	37	9년	
전문가 J	여	48	15년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전문가 K	여	41	15년	

2. 조사결과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필요성 확대**

○ 전문가들은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문제가 농촌 중심의 생활환경, 높은 고령화율, 넓은 생활권, 낮은 인구밀도, 부족한 지원기관 및 교통 접근성 등 지역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적 문제라고 평가함. 특히 읍·면 단위 농산어촌과 산간지역은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이 부족하고, 전문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는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여성폭력 관련 인프라가 포항, 구미, 안동 등 일부 거점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 단위 지역은 상담·보호 및 의료 지원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자원 배분이 주로 정주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기관 설치와 인력 배치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여성폭력 발생 위험과 피해지원 수요는 단순히 인구 규모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인구수뿐 아니라 지역의 고령화율, 지리적 접근성, 교통 여건, 폭력 발생 및 상담 수요 등을 반영한 자원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농어촌·산간지역은 인근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수 시간 이동해야 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폭력 발생 시 경찰과 응급구조 인력의 현장 도착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해자 긴급분리와 구조를 위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 또한 농어촌 지역은 지역공동체 내 관계가 밀접하여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 과정과 이동 동선이 쉽게 노출될 수 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거나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해자가 지역사회의 유력자이거나 가족·친족 내 영향력이 큰 경우 폭력을 '집안일'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만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따라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단순한 양적 확대뿐 아니라 권역별 상담·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이동지원 및 생활권 내 상담·안전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폭력 지원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족센터,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기존 생활권 기관이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농촌지역은 상담기관이 부족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C)
"경북은 생활권이 넓어 상담소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며 결국 도움을 요청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A)
"농어촌 산간지역은 상담기관이 없어 상담을 요청하는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 B)
"지역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지역일수록 주변 시선 때문에 기관 차량도 집 앞에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E)
“경북지역은 지원시설이 일부 거점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산간지역의 피해자가 상담이나 긴급보호를 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는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분리, 사후지원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전문가 H)

□ **변화하는 이주여성 폭력 양상과 신종·복합폭력 대응 강화**

❍ 전문가들은 최근 경상북도 내 이주여성을 둘러싼 폭력의 유형과 주요 피해계층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과거에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주요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지역 인력난과 지역특화형 비자 등 이주민 유입 정책의 확대로 외국인 여성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폭력 발생 공간도 가정에서 직장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언어·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의존 등이 피해 신고와 지원기관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일부 사례에서는 배우자나 가족이 외부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거나 체류자격과 경제권을 통제하여 피해자를 지역사회 지원체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양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 여성노동자는 기존 결혼이주여성보다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기회가 적고,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및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피해 신고와 상담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업주나 직장 동료에 의한 폭력,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임금 문제와 결합된 피해 등 새로운 폭력 양상에 대한 대응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외국인 여성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경우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거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거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 쉼터 입소와 긴급지원 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을 경험할 가능성도 제기됨

○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역시 이주여성의 지원체계 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가족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통·번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서적 지지와 전문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이주여성 지원은 단순한 통·번역 제공을 넘어 체류자격, 노동, 임금, 주거 및 경제적 자립 문제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족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 고용·노동 관련 기관과 여성폭력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와 가해자로부터 독립된 상담경로와 다국어 상담·신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주여성은 경제적 종속과 언어장벽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B)
"이주여성은 피해 신고하면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거나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노동, 임금, 주거 문제를 함께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F)
"언어장벽과 정보 차단으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자체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 G)

□ 장애여성·고령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전문가들은 장애여성, 이주여성, 고령여성, 한부모 및 1인 가구 여성 등은 장애, 연령, 언어, 경제적 의존 및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취약성이 중첩되어 폭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획일적인 지원체계만으로는 피해 예방과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

○ 장애여성의 경우 신체적·인지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관계 형성 기회의 부족이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특히 발달장애 여성은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관계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온라인 채팅과 SNS 등을 통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성착취와 경제적 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여성은 피해 발생 이후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조사·상담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 일회성 상담보다 대상자의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요구됨

○ 고령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장기간 지속된 폭력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지리적 고립과 부족한 지원 인프라로 피해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피해자는 오랜 폭력 경험으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으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거나, 가족관계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고령여성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가스라이팅, 정서적 통제, 경제적 통제 및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보건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생활지원사 등 생활권 기관과 인력을 활용하여 고령여성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상담·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령층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서적 폭력과 통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치매와 간병 부담이 결합되면서 폭력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됨.

○ 특히 고령여성은 폭력을 오랜 부부관계의 문제나 집안일로 인식하여 전문기관 이용을 주저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보건소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예방·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령여성과 장애여성 등을 위해 복잡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간편하게 긴급신고와 도움 요청이 가능한 원터치 비상벨 등 이용자 친화적인 안전장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여성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이주여성은 모국어·체류·노동·주거·자립지원, 고령여성은 생활권 내 상담과 돌봄·보건서비스 연계 등 대상별 취약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치매와 간병 부담이 결합된 고령층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피해자는 피해를 집안일로 여겨 상담소 접근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C)
"발달장애 여성들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성착취나 경제적 착취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전문가 D)
"장애인에게는 사회 자체가 폭력일 정도로 차별과 배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D)
"장애인 친구들의 욕구는 높아졌지만 가족 문제까지 개입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E)
"장애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E)
"고령자일 경우 오랜 폭력으로 학습된 무기력감을 경험하거나 자녀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침묵하면서 폭력이 장기화되고 은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G)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가스라이팅, 정서적 통제, 경제적 통제 및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H)

□ 기관 간 협력 및 통합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요구

○ 전문가들은 경찰·지방자치단체·상담소·의료기관·해바라기센터 등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원스톱 지원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그러나 기관별로 수사·보호·회복이라는 업무 목적과 관점에 차이가 있고 역할분담과 정보공유가 충분하지 않아 복합사례 대응 과정에서 연계 지연, 업무 책임 전가 및 피해자의 반복 진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기관별 정보관리 기준의 차이로 상담·의료 및 사례정

보 공유에 한계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과 경찰의 순환보직, 상담기관 종사자의 이직 등은 협력관계의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상담소 미설치지역에서는 인근 지역 상담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피해자의 이동부담뿐만 아니라 해당 상담기관의 업무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정보공유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와 공동사례관리를 제도화하여 발견–긴급보호–전문지원–회복·자립–사후관리까지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경상북도는 2014년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중심으로 경찰과 지역 상담소를 연계하는 여성폭력 원스톱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상담소의 현장 출동비와 응급처치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찰–상담기관 간 동행 및 공동대응을 강화해 왔음. 그러나 2026년 현재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장 공동대응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임
- ❍ 이는 기관 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 출동과 동행, 긴급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협력체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새로운 협력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기존 경찰–1366–지역 상담소 간 공동대응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출동비, 긴급의료비, 야간·휴일 대응수당, 동행지원비 등 현장 공동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여성폭력 상담소 미설치 지역은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의뢰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경찰 간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설치 시·군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관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B)

"예전에는 신고 후 현장에서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안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M)

"지자체, 경찰, 상담기관, 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원체계입니다." (전문가 D)

"지금은 각 기관이 자기 사례만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서로 전문성을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성폭력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전문가 E)

"기관마다 수사와 보호, 회복이라는 관점에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는 협력이 제도만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 G)

“해바라기센터의 응급지원 이후 지역 상담소나 쉼터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기존 상담·의료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새로운 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진술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H)

□ 긴급보호체계의 실효성 및 피해자 주거·회복지원 강화

❍ 전문가들은 피해 발생 직후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연계하는 긴급보호체계가 중요하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보호자원이 현장에서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 모텔·호텔 등 지정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 상담소가 운영하는 전문 긴급피난처[6]가 있음에도 해당 시설로 우선 연계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경찰–1366–상담소 간 긴급보호 자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연계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담소의 긴급피난처는 상주인력이 없는 경우 야간·주말에 상담원이 직접 긴급 출동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외수당과 대체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사자의 업무부담과 기존 상담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7]. 이러한 인력·예산상의 어려움은 상담소의 긴급피난처 운영을 기피하

6) 경상북도 내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는 칠곡군, 경산시,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김천시 등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7) 2014년 경상북도는 1366경북센터를 통해 경찰과 지역상담소를 연계하여 여성폭력 합동대응하는 여성폭력 원스톱 대응시스템 구축함. 지역 상담소에 출동비, 응급처지 의료비 등 지원으로 동행협조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2026년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야간·휴일 대응인력과 시간외수당, 대체인력 등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긴급피난처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이혼소송이나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주거지원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긴급피난처 중심의 일시보호에서 나아가 임대주택 연계, 주거비 지원 등 중·장기 주거지원과 법률·심리·복지·경제적 자립지원을 연계하여 '긴급분리-긴급보호-안정적 주거-회복·자립-사후관리'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심층면접에서 제기된 피해자의 발견부터 보호·회복·자립·사후관리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도 연결됨

> "경찰에서 임시숙소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에 긴급피난처가 있어도 상담소로 바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A)
> "야간이나 주말에는 상담원이 직접 나가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이나 대체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시간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C)
> "긴급피난처에서 나온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재판이나 이혼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가가 필요합니다."(전문가 B)

□ 생활권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 전문가들은 여성폭력 예방은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중심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가족센터,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생활권 기관과 이장·통장, 부녀회, 생활지원사 등 주민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이장·통장, 부녀회 및 생활지원사 등 주민조직은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가정의 변화와 위기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 인적자원으로 평가됨

현재 여성폭력 원스톱 대응시스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임

○ 다만 농어촌지역에서는 가정폭력을 개인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주민조직이 개입을 주저할 수 있으며, 신고 이후 가해자나 주변 주민의 원망과 보복에 대한 우려도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또한 주민조직은 여성폭력 상담이나 수사 전문가가 아니므로 폭력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성 없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중재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주민조직의 역할은 피해사실 조사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위험신호의 조기발견과 신고·전문기관 연계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실제 사건 발생 이후에는 여성폭력 전문기관이 개입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유형, 위험신호, 신고·연계 절차, 비밀보장, 피해자 중심 접근 및 2차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참여형 안전망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의 봉사와 선의에만 의존하기보다 공식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교육비, 회의비, 활동수당, 이동비, 긴급지원비 및 통·번역비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함

>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C)
> "마을에서 위험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생활지원사와 주민입니다. 마을 단위 예방체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 "마을 단위 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용한 예방교육은 실제 신고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D)
> "주민조직은 공공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전문성이 없는 직접 개입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G)

□ 찾아가는 이동형 원스톱서비스와 생활권 전달체계 강화

○ 전문가들은 경상북도의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 도농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폭력 지원기관을 모든 시·군에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보다 기존 전문지원체계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형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특히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지원 인프라가 일부 거점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영양, 청송, 봉화 등 군 단위 지역의 피해자는 장시간 이동해야 함

○ 이에 따라 전문상담사, 사례관리사, 통·번역 인력 등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초기

상담, 위험도 평가, 긴급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를 제공하는 이동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함. 필요한 경우 의료·법률·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상담–보호–의료–법률–사례관리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 또한 이동형 지원체계는 단순한 방문상담을 넘어 피해자의 긴급 이동지원, 상담기관 동행, 보호시설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거점도시 외 농어촌·산간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동성과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모빌리티 기반 전달체계가 요구됨. 특히 긴급상화에서 피해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택시, 긴급후송 및 동행 바우처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요구됨
- ❍ 장애여성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피해자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이동형 상담·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와 피해 증거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관을 계속 설치하기보다 기존 지원체계가 소외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동 기반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문가 G)
> “피해지원기관이 거점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읍·면 단위 주민은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상담 인력 등이 참여하는 이동형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농어촌과 산간지역의 폭력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H)

□ 예방 중심 여성폭력 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 전문가들은 현재 여성폭력 정책이 피해 발생 이후의 신고, 보호 및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예방 중심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함.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도 일회성·형식적 정보 전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 특히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온라인 성착취 등 변화하는 폭력 유형을 반영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건강한 관계 형성, 관계의 경계 설정, 디지털 시민성 및 온라인 위험 대응을 포함하는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예방교육은 일회성 특강이나 획일적인 온라인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와 장애·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변화하는 여성폭력 유형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 지역 주민을 여성폭력 예방활동가로 양성하고, 폭력의 위험신호와 신고·연계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과 지역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을 특정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상적 실천과 지역문화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여성폭력 예방은 교육과 상담 중심의 접근뿐 아니라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적 예방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어두운 골목길의 조명 개선, CCTV와 비상벨 확충, 안심귀갓길 조성 및 안전마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안전 메시지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의 안전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 이러한 예방활동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과 전담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및 주민조직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여성폭력 예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 교육은 형식적인 이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대면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B)

"발달장애인은 역할극과 반복학습을 통해 관계의 경계와 위험신호를 익히는 교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문가 D)

"예전에는 신고 후 현장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안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M)

"예방교육은 보편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 E)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변화하는 폭력 유형을 반영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E)

3. 소결

- ❍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여성폭력을 개인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구조,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서비스 접근성 및 지역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사회적 문제로 인식함. 특히 경상북도는 농촌 중심의 생활환경, 높은 고령화율,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 지역 간 지원 인프라 격차, 외국인 주민 증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첫째, 인구 규모 중심의 자원 배분에서 지역의 위험도와 접근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산간지역은 상담소와 보호시설 접근성이 낮고 긴 이동시간으로 피해자 긴급구조와 분리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구수뿐 아니라 고령화율, 교통 접근성, 여성폭력 발생 및 상담 수요, 지원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원을 배분하고 권역별 상담·보호·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둘째, 권역별 전문지원체계와 생활권 기반 예방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 전문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족센터,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생활권 기관이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고, 권역별 전문기관은 상담·보호·의료·법률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다층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셋째, 찾아가는 이동형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물리적 접근성 한계를 보완해야 함. 전문상담사, 사례관리사 및 통·번역 인력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위험도 평가–긴급지원–보호시설 연계–사후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반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넷째,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복합폭력에 대한 전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함. 변화하는 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디지털 피해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 심리상담 및 장기 사례관리를 연계해야 함. 또한 지역 상담기관과 생활권 기관 종사자의 신종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변화하는 이주여성 폭력 양상을 반영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주여성의 체류 목적이 가족 형성에서 노동으로 확대되면서 폭력 발생 공간도 가정에서 직장과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통·번역, 체류자격, 노동, 임금,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장애여성·고령여성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장애여성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고령여성은 생활권 내 상담과 돌봄·보건서비스 연계, 이주여성은 모국어 지원과 독립적인 상담경로를 제공하는 등 대상별 취약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일곱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관 수의 확대보다 질적 연계와 장기 사례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경찰, 지자체, 상담기관, 의료기관, 가족센터, 장애인 지원기관 및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사례회의와 공동사례관리 체계를 정례화하여 피해자의 발견부터 보호, 회복, 자립 및 사후관리까지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순환보직과 전문인력 이직으로 인한 협력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협업체계의 제도화가 요구됨

❍ 여덟째, 주민조직의 역할을 조기발견과 신고·연계로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장·통장, 부녀회 및 생활지원사는 지역의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전문성 없는 직접 개입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비밀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활동수당, 교육비 및 이동비 등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사후 대응 중심에서 지역사회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생애주기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예방교육, 디지털 안전교육, 주민 예방활동가 양성 및 지속적인 지역 캠페인을 추진해야 함. 또한 CCTV와 비상벨 확충, 안심귀갓길 조성 등 환경적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여성폭력 예방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상적 실천과 지역문화로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경상북도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와 안정적인 예산, 전담인력 및 책임행정이 뒷받침되어

야 함. 경찰, 상담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가족센터, 복지기관, 장애인·외국인 지원기관 및 주민조직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예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방 및 위험신호 조기발견, 신고·전문기관 연계, 긴급보호 및 회복·자립, 장기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로 이어지는 통합적·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Ⅵ.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1.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의 기본 방향
2.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3.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추진체계
4.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5.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Ⅵ.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1.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의 기본 방향

❍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정책은 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가 상담소나 경찰 등 전문기관을 찾아가는 사후 대응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여성폭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전문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생태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는 넓은 행정면적과 산간·농산어촌 지역의 광범위한 분포, 높은 고령화와 낮은 인구밀도, 시·군 간 여성폭력 지원자원의 편차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문시설 중심의 보편적 전달체계만으로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농산어촌과 산간지역은 상담·보호 등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의 밀접한 관계망으로 인해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거나 도움 요청을 주저할 가능성도 존재함

❍ 본 연구에서도 도서·산간지역의 물리적 접근성 부족,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여성폭력 비가시성, 취약계층의 생활권 안전망 부족, 전문기관과 지역서비스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를 제시하였음. 또한 조사결과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감과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 여성폭력에 대한 높은 개념적 인지도와 낮은 지역사회 체감도, 지원기관의 명칭 인지도와 실제 기능·이용 인지도, 예방교육 경험과 실질적인 대응역량 간의 간극이 확인되었음. 이는 여성폭력 예방정책이 개별 시설이나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안전환경 조성, 인식 개선, 조기발견, 상담·연계, 피해자 보호, 가해자 관리 및 재발방지가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줌

❍ 이에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는 사후대응에서 예방 중심, 전문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공동책임, 시설 중심에서 생활권·연계 중심으로의 세 가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함

❍ 첫 번째 전환은 사후대응에서 예방중심으로 ‘폭력이 발생한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할 것인가’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임

- ❍ 기존 여성폭력 정책은 신고 이후 상담, 수사,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 사후 대응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왔으나,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에서는 폭력 발생 이전의 위험요인 감소와 안전환경 조성부터 위험 징후의 조기발견, 신속한 대응, 피해자 보호와 회복, 가해자 관리 및 재발방지까지를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며,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함. 동시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개입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이후 회복과 재발방지까지 이어지는 '예방-조기발견-대응-보호·회복-재발방지'의 전주기적 예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예방교육도 일회성 정보 제공이나 교육 이수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이 여성폭력의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인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형 예방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조사에서도 예방교육 경험이 실제 기억과 행동역량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었음
- ❍ 두 번째, 전문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공동책임으로 전환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일부 전문기관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계로 확장하는 것임
- ❍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고령여성, 장애인, 이주민 및 농산어촌 주민 등은 정보와 이동, 의사소통 등의 제약으로 전문기관 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보건소, 복지관, 학교, 경로당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권 기관과 지역주민이 여성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개입을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관심갖기-위험신호 발견하기-안전하게 도움 요청하기-전문기관으로 연결하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함
- ❍ 또한 여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개인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안전의 문제’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여성폭력 전문기관, 보건·복지·교육기관, 지역사회 조직 및 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지역사회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해야 함

- ❍ 세 번째는 시설 중심에서 생활권·연계 중심으로 전환으로 여성폭력 지원기관이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기존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필요한 전문서비스가 주민에게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임
- ❍ 경상북도는 넓은 행정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모든 시·군에 동일한 수준의 전문기관과 서비스를 배치하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광역 및 권역 단위의 전문성을 시·군과 읍·면·동 생활권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 이를 위해 상담소 등 여성폭력 전문기관과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보건·복지기관, 학교 등 생활권 기관을 연계하고, 생활권 기관이 피해자를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과 산간지역에는 찾아가는 상담·교육, 순회형 서비스, 이동지원 및 디지털 기반 상담 등을 병행하여 물리적 거리로 인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해야 함. 연구에서도 산간·오지지역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 특히 지역별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적용하기보다 도시·도농복합·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시지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및 야간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가정폭력과 고령여성의 피해 비가시성, 찾아가는 상담, 정보 접근 및 이동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 이러한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의 분절적인 대응을 넘어 다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공통적인 기반이 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경찰, 여성폭력 전문기관, 의료·법률기관, 보건·복지기관 등이 위험도 평가, 피해

자 안전계획, 상담·보호, 의료·법률지원 및 사후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연계절차를 명확히 하고, 광역–권역–시·군–읍·면·동을 연결하는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는 '피해자가 찾아가는 사후 지원체계'에서 '지역사회가 예방하고 발견하며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능동적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함. 이를 통해 생활공간의 안전환경 조성에서 주민의 예방역량 강화, 위험의 조기발견, 생활권 기관을 통한 연계, 전문기관의 상담·보호, 다기관 공동대응,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까지가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는 '사후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문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공동책임으로', '시설 중심에서 생활권·연계 중심으로'의 세 가지 정책 전환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모델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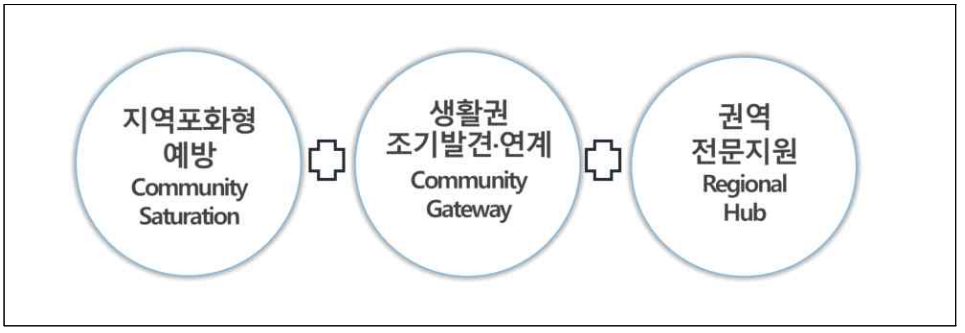
○ 특히 경상북도 넓은 행정면접과 농산어촌 지역의 높은 비중, 고령화, 전문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개별기관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여성폭력 에방과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Community Saturation Model[8]을 기반으로 지역포화형 예방모델에 접근성과 조기발견·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농산어촌의 장거리 이동, 전문기관 부족, 고령화, 피해 비가시성, 생활권 기관과 전문기관 간 연계 부족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함. 즉. 여성폭력 예방 메시지를 지역사회 전체에 포화시키는 방식과 생활권에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서비스로 연계하는 게이트웨이 기능, 그리고 권역 단위의 전문 지원체계를 결

8) 호주 빅토리아주의 ,Respect Victoria가 추천하는 장소기반 여성폭력 예방 접근으로 하나의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생활하고 일하고 배우고, 여가를 보내는 여러 생활영역에서 예방활동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해 지역사회 전체를 예방 메시지와 실천으로 포화(saturation)시키는 것임(Respect Victioia 홈페이지 www.respectvictoia.vic.gov.au)

합한 경북형 지역포화·연계 예방 생태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은 지역사회 전체의 예방 역량을 높이는 지역포화형 예방, 주민의 일상 생활권에서 위험을 조기 발견·연계,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보완하는 권역 전문 지원의 세 축으로 구성함



[그림 VI-1]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구성요소

❍ 첫째, 지역포화형 예방은 호주의 Community Saturation Model의 접근을 참고하여 주민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 및 주민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사회 규범과 예방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개별적·일회성 예방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이 서로 연결되고 반복·강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둠

❍ 둘째, 생활권 기반 조기발견·연계는 읍·면·동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생활권을 중심으로 여성폭력의 위험징후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기능임.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 학교, 경찰 및 지역주민 등 주민 접점의 다양한 주체가 위험징후를 인지하고 상담·신고 및 전문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셋째, 권역 기반 전문지원은 개별 시·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상담, 법률, 의료, 심리·정서,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권역 단위에서 제공하고, 여성폭력 지원기관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임. 특히 지리적 범위가 넓고 시·군간 서비스 인프라의 편차가 큰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전문자원을 공

동 활용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여성폭력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모델은 지역5사회 전반의 예방규범을 형성하는 '지역포화형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접점에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생활권 조기발견·연계', 지역 간 전문서비스 격차를 보완하는 '권역 전문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는 다층적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표 VI-1>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의 구성축별 기능과 범위

구성 축	핵심 기능	공간적 범위
지역포화형 예방	주민 참여형 인식개선·대상별 예방교육, 캠페인, 학교·직장·마을 등 생활별 예방 활동, 주민 예방역량 강화	시·군 지역사회 전반
생활권 조기발견·연계	주민 접점에서 위험징후 발견, 도움요청 경로 안내, 상담·신고·전문서비스 연결	읍·면·동 생활권
권역 전문지원	전문상담·법률·의료·심리지원, 긴급지원, 복합·고위험 사례 지원, 상담기관 미설치·취약지역 순회·방문지원	권역 단위

3.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추진체계

○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3대 핵심 축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누가 예방·발견·연계·지원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광역–권역–시·군–읍·면·동 생활권의 4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의 역할을 차별화하면서 상호 연계하도록 함

○ 광역 차원에서는 경상북도가 여성폭력 예방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가 전담 추진체계로서 정책기획 및 사업개발, 시·군 및 권역 지원·조정, 전문인력 교육·컨설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자원연계,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광역센터는 직접적인 상담이나 긴급지원 기능을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여성폭력 지원기관과 시·군 및 권역 거점기관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에 중점을 둠. 이를 통해 개별 기관과 지역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여성폭력 예방·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

❍ 권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기존 여성폭력 전문기관 가운데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기관을 「권역별 여성폭력 예방·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개별 시·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함

❍ 권역 거점기관은 권역 내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고위험·복합사례 공동사례회의,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교육, 의료·법률·심리 등 전문서비스 연계 및 지역 특화 예방사업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함. 이를 통해 시·군 단위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산어촌 및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함

❍ 시·군 차원에서는 지역의 인구·지리적 특성, 여성폭력 발생 및 위험요인, 지원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민·관·경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내 예방·지원자원을 발굴·연계함

❍ 또한 읍·면·동 생활권에서 발견된 여성폭력 위험징후 및 사례가 적절한 전문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활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고위험·복합사례와 전문서비스는 권역 거점기관과 연계함.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예방·지원체계를 차등적·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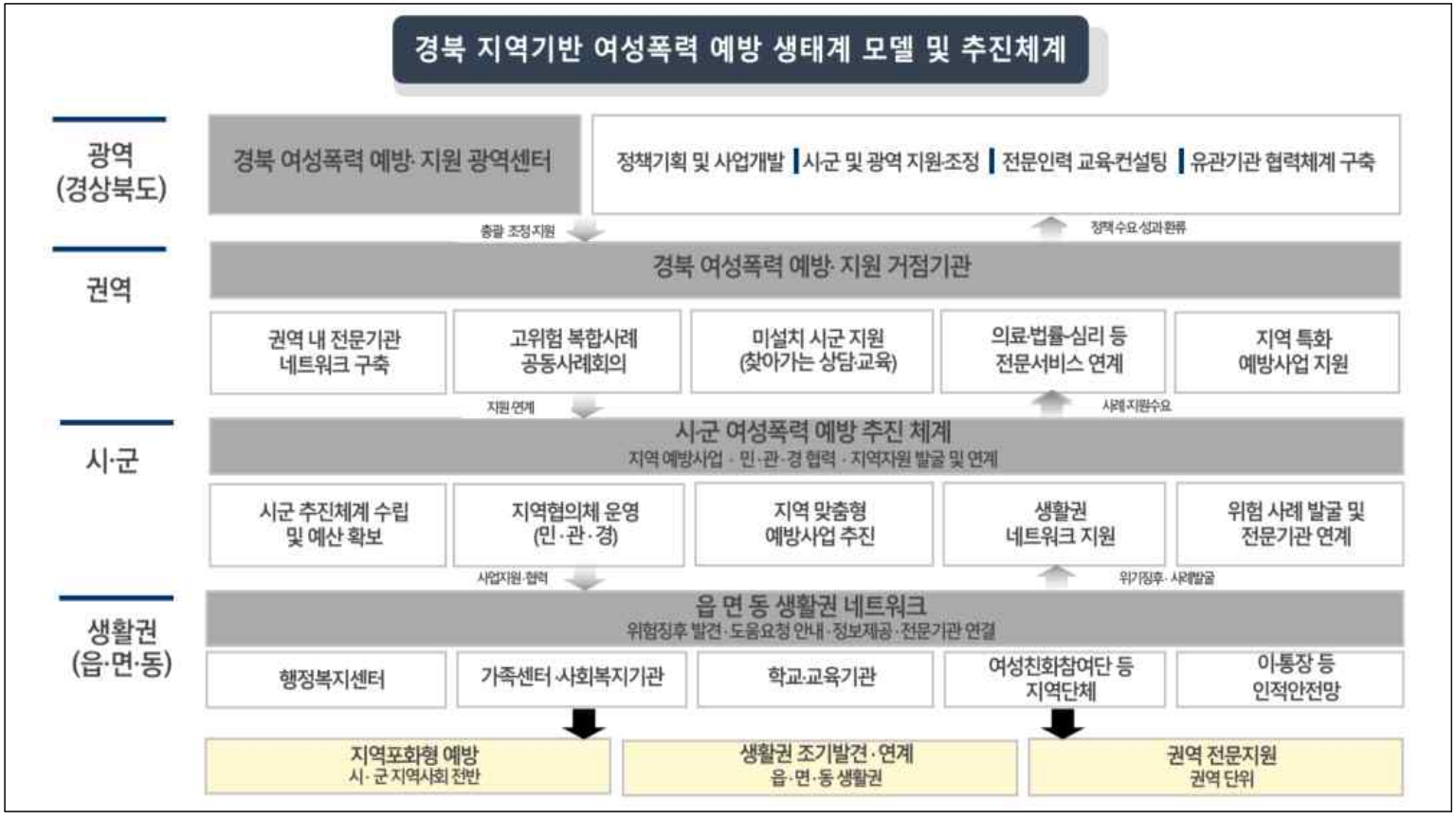
❍ 읍·면·동 생활권 차원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사회복지기관, 보건소 및 의료기관, 학교·교육기관, 여성친화참여단 등 지역단체, 이·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중심으로 생활권 여성폭력 예방·조기발견 네트워크를 구축함

❍ 생활권 네트워크는 전문적인 피해자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직접 담당하기보다 주민과의 일상적 접촉과 관계망을 활용하여 여성폭력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요청 방법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신고 및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함

❍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는 광역에서 생활권으로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직적 전달체계가 아니라, 각 단계 간 상호지원과 정보·정책수요의 환류가 이루어지는 순환적 체계로 운영함

- ❍ 따라서, 광역센터는 권역과 시·군의 예방·지원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정책 및 사업 개발, 전문인력 교육, 컨설팅 및 자원연계를 지원하며, 권역 거점기관은 시·군과 생활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서비스와 고위험·복합사례를 지원함. 시·군은 지역 예방사업과 생활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읍·면·동 생활권에서는 주민 접점에서 위험징후를 발견하여 시·군 및 전문지원체계로 연결함
- ❍ 동시에 생활권과 시·군에서 확인된 여성폭력 위험요인, 사례 특성, 서비스 공백 및 정책수요를 권역과 광역 차원으로 환류하고, 광역 차원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예방사업과 지원체계를 개선한 후 다시 권역·시·군·생활권에 반영함. 이를 통해 '예방–조기발견·연계–전문지원–정책환류–예방 강화'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구축함



[그림 Ⅵ-2]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 및 추진체계

4.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는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지역포화형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접점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권 조기발견·연계,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보완하는 권역 전문지원을 핵심 축으로 하며, 이를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는 다층적 체계로 구축함

○ 이를 위해 첫째, 학교·직장·마을·공공기관 등 주민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예방교육과 캠페인, 주민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사회 예방문화를 확산함. 둘째,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복지기관, 의료기관, 학교, 경찰 등 주민과 가까운 생활권 기관을 활용하여 여성폭력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신고 및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권 기반 안전망을 구축함. 셋째, 개별 시·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담·의료·법률·심리·긴급지원 등의 전문자원을 권역 단위로 연계·활용하고, 농산어촌 및 지원기관 미설치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완화함. 넷째, 경상북도 차원에서 시·군과 권역의 예방·지원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전문인력 역량강화, 자원연계, 성과관리 등을 지원하는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다섯째, 22개 시·군의 인구·지리적 특성, 여성폭력 유형, 지원기관 및 전문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적·유연한 예방·지원체계를 운영함. 마지막으로 지역포화형 예방–생활권 조기발견·연계–권역 전문지원이 상호 연결되고, 지원과정에서 확인된 지역의 위험요인과 정책수요가 다시 예방활동에 반영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표 Ⅵ-2> 경북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Ⅰ.지속가능한 지역기반 예방 거버넌스 구축	1-1. 경북 여성폭력 예방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2. 시·군 여성폭력 예방 추진기반 강화
	1-3.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Ⅱ. 지역사회 전반의 여성폭력 예방기반 강화	2-1. 지역 맞춤형 여성 안전 생활환경 조성
	2-2. 생애주기·대상별 실천형 예방교육 강화
	2-3. 생활밀착형 여성폭력 예방·정보 접근체계 구축
Ⅲ. 생활권 기반 조기발견 및 예방역량 강화	3-1.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웨이 구축
	3-2. 지역주민 참여형 여성안전 인적 안전망 구축
	3-3. 여성폭력 위험인지 및 주변인 조기대응 역량 강화
Ⅳ. 지역격차 없는 피해자 지원 ·전문연계 강화	4-1. 농산어촌 찾아가는 여성폭력 지원서비스 강화
	4-2. 권역별 여성폭력 전문지원 연계체계 구축
	4-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보호·주거 및 회복지원 강화

추진전략 1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예방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1-1.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설치·운영

1) 제안 배경

○ 여성폭력 예방정책은 예방교육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피해자 지원, 전문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안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영역이 상호 연계되어야 하므로, 개별 기관이나 사업 단위의 접근을 넘어 지역의 예방·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광역 차원의 추진체계가 필요함

○ 경상북도는 넓은 행정면적과 농산어촌 지역의 높은 비중, 시·군별 여성폭력 지원기관 및 전문자원의 편차 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문기관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지역에서는 개별 시·군의 자원만으로 상담·의료·법률·심리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광역 차원에서 지역 간 자원을 조정하고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이 요구됨

○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비롯하여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 상담기관 등 전문기관이 피해상담, 긴급보호, 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과 위기대응 및 전문지원이 주요 기능임. 따라서 지역사회 예방정책 기획, 시·군 예방사업 지원, 권역 간 자원 조정, 예방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등 예방 생태계 전반을 총괄·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포화형 예방–생활권 조기발견·연계–권역 전문지원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하나의 지역기반 예방 생태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와 주체를 연결하는 조정체계가 필요함. 생활권과 시·군에서 확인된 여성폭력 위험요인과 정책수요를 권역 및 광역 차원으로 환류하고, 이를 다시 예방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지원 및 환류체계가 요구됨

○ 이에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정책의 기획·조정 및 지역 지원 기능을 전담하는 「경

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광역–권역–시·군–생활권을 연결하는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의 광역 조정·지원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함

2) 추진 방안

- ❍ 여성폭력 예방정책의 기획·연구, 사업 개발, 시·군 정책지원, 교육·컨설팅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설치·운영
- ❍ 경상북도를 여성폭력 예방정책의 정책·행정적 총괄 주체로 하고, 광역센터는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예방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추진체계로 운영
- ❍ 직접적인 피해상담·긴급보호 등의 기능보다는 정책기획·사업개발, 시·군 및 권역 지원·조정, 전문인력 역량강화, 자원연계, 성과관리·모니터링에 중점을 두어 기존 여성폭력 지원기관과 기능을 차별화
- ❍ 광역센터–권역 거점기관–시·군–읍·면·동 생활권을 연결하여 지역포화형 예방, 생활권 조기발견·연계, 권역 전문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예방·지원체계 구축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설치·운영**

【사업 대상】
-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여성폭력 예방·지원관련 기관

【사업 주요 내용】
- 경북 여성폭력 예방정책 기획·연구 및 사업 개발
- 시·군 여성폭력 예방정책 수립·사업 추진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도·시군 여성폭력 예방사업 및 지역자원 조사·관리·조정
- 지역별 여성폭력 예방환경 및 정책 사각지대 조사·분석
- 여성폭력 예방교육·캠페인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확산
-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운영 및 모니터링·성과관리
- 1366 경북센터, 여성폭력 전문기관 등과 정책·사업 연계체계 구축

【운영체계】
- 광역센터(예방정책 기획·조정·지원) ↔ 1366 경북센터(상담·긴급보호·위기대응) ↔ 시·군(지역 예방정책 실행)

정책과제 1-2. 시군 여성폭력 예방 추진기반 강화

1) 제안 배경

- ❍ 여성폭력은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고 지역의 인구·사회·문화적 특성과 안전환경에 따라 위험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광역 차원의 정책과 함께 시·군이 지역의 특성과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예방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 현재 경북 시·군의 여성폭력 관련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아동·여성폭력 방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변화된 여성폭력 정책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추진체계를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여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예방·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자원이 부족하여 광역 또는 타 지역의 전문기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에서도 주민이 필요한 예방·상담 및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자체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권역별 여성폭력 예방·지원 거점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책임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시·군은 광역 차원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포화형 예방사업을 실행하고 읍·면·동 생활권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핵심 실행주체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시·군별 여성폭력 예방 추진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예방사업과 조기발견·전문지원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제도·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 여성폭력 관련 조례와 추진체계를 점검·정비하고, 지역의 인구·지리적 특성, 여성폭력 위험요인 및 지원자원 등을 반영한 시·군별 여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및 특화사업 발굴·추진
- ❍ 지역 내 행정·복지·보건·교육·경찰·여성폭력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읍·면·동 생활권의 조기발견·연계 네트워크 지원

○ 상담소 등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을 중심으로 자체예산 확보 및 도비 지원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권역별 여성폭력 예방·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의료·법률·심리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농산어촌 및 고령자·장애인·이주여성 등 지역별 취약대상과 사각지대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지원사업 추진

○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를 통한 사업기획·컨설팅,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지역별 사업성과 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정책제안 **「경북 시군 여성폭력 예방 추진 기반」 강화**

【사업 대상】
- 경북 22개 시·군

【사업 주요 내용】
- 시·군 여성폭력 관련 조례 정비 및 예방계획 수립 지원
-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예방 특화사업 발굴·지원
- 여성폭력 예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군 자체예산 확보 및 도비 지원
- 시·군, 민·관·경 협력체계 및 읍면동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운영
- 상담소 등 전문기관 미설치 지역의 예방·상담·전문기관 연계 등 필수서비스 지원 강화
- 광역 컨트롤타워를 통한 사업 컨설팅·담당자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정책제안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 예방·지원 자체 예산」 확보**

【사업 목표】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 주민이 인근 지역의 전문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기관 소재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미설치 시·군의 여성폭력 예방·지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전문기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주민이 필요한 여성폭력 예방·상담 및 전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 대상】
- 여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 미설치 시·군

【사업 주요 내용】
- 시·군 여성폭력 관련 조례 정비 및 여성폭력 예방·지원 자체예산 편성

정책과제 1-3.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1) 제안 배경

- ❍ 여성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건수나 참여인원 등 단순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의 안전환경, 주민의 안전체감,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예방역량, 피해지원 접근성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 본 연구결과,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안전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치안·안전시설의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성별과 지역에 따라 야간보행 안전감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남. 이는 물리적 안전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체감하는 안전과 지역별 특성을 함께 파악할 필요성을 보여줌
- ❍ 특히 경북형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포화형 예방–생활권 조기 발견·연계–권역 전문지원의 각 영역에 대한 추진 성과와 지역 간 격차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생활권과 시·군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정책수요를 광역 차원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가 필요함
- ❍ 따라서 경북의 도농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시·군별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성과와 취약영역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 안전환경, 여성폭력 인식·예방역량, 예방활동, 피해지원 접근성, 지역사회 추진기반 등을 포함한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개발
- ❍ 행정통계 등 객관적 지표와 주민의 안전체감·여성폭력 인식 등 주관적 지표를 연계하여 시·군별 여성폭력 예방·안전수준 정기 모니터링
- ❍ 성별·연령·지역 및 동·읍·면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요인과 정책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개선과제 도출

○ 지역포화형 예방, 생활권 조기발견·연계, 권역 전문지원 등 경북형 예방 생태계의 핵심 영역별 성과 및 작동 수준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시·군 여성폭력 예방계획 및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정책수요 분석–사업 개선–성과 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정책 환류체계 구축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개발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사업 대상】
- 경북 22개 시·군

【사업 주요 내용】
- 경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 개발
- 안전환경, 여성폭력 인식·예방역량, 피해지원 접근성, 지역사회 추진기반 등 영역별 지표 구성
- 행정통계와 주민 체감안전·인식조사를 연계한 시·군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시·군별 여성폭력 예방·안전수준 및 취약영역 분석
- 모니터링 결과를 시·군 예방계획 및 사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체계 구축

【추진주체】
- 경북 여성폭력 예방 광역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지표 관리·분석 및 시·군 정책 환류

추진전략 2	지역사회 전반의 여성폭력 예방기반 강화

정책과제 2-1. 지역 맞춤형 여성안전 생활환경 조성

1) 제안 배경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과 인식·규범을 변화시키는 1차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북은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하고 지역별 생활환경과 안전 인프라에 차이가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 접근이 요구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72.8%, 야간보행 시 안전하다는 응답은 65.7%로 비교적 높았으나, 치안 및 안전시설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7.1%에 그쳐 전반적인 안전 인식과 구체적인 생활환경에서의 안전 체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야간보행 안전감과 치안·안전시설 충분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여성 역시 남성보다 야간 보행과 안전 인프라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심층면접에서도 이러한 '상황적 안전감의 간극'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전반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 어두운 주차장, 원룸 등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는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감과 실제 생활공간에서 경험하는 체감 안전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의 일상적인 이동경로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안전 취약 요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을 시사함

○ 안전 환경개선 요구에서도 CCTV 및 지능형 감시시스템 도입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조도 개선 28.8%이 높았음. 특히 면 지역에서는 공가·빈집·폐가 정비 요구가 20.9%로 동 지역 7.5%, 읍 지역 11.8%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안전 취약 요인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과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 취약 요인을 발

굴·개선하고, 물리적 환경개선과 예방활동 및 주민참여를 연계하는 사업을 제안함. 이를 통해 여성폭력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예방환경을 확산하는 '지역포화형 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추진 방안

□ **주민 참여형 여성 안전 취약 공간 진단 및 모니터링**

○ 행정안전부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치안 안전, 기반 시설 등 8대 분야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치안 안전 분야에는 범죄주의 구간과 여성 밤길 치안 안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CCTV, 보완 등 기반시설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기존 공간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범죄 발생 및 시설 현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의 체감안전 정보를 결합하여 지역의 여성 안전 취약 공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주민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골목길, 공원, 빈집·공가 주변, 농로 및 마을 길 등 지역별 취약 공간을 발굴하고 공간정보를 지도화하여 안전환경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함

○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9] 시민참여단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여성 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여성 안전 취약 공간 발굴 및 모니터링의 핵심 주체로 활용하여 생활공간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여성,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각 집단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이동 경로와 시간대, 불안 요인 및 안전 수요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행정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생활권 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

9) 경북은 6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의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성평등과 안전, 돌봄, 생활환경 등을 살펴보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주민 참여조직임. 이에 여성 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여성 안전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음

□ 여성안전 취약공간 기반 지역맞춤형 주민참여 CPTED 추진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제4239호, 2019. 9. 19.)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상북도,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군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CPTED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범죄예방 안전마을길, 도시재생 연계 CPTED,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주민참여형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표 VI-3> 경북 시·군 CPTED 관련 주요 사업 현황

시도	사업·정책	주요 내용
포항	청림동 스마트 안심마을	범부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 도시재생과 CPTED에 스마트 기술 결합
	여생안전 2026	여성 1인 소상공인·1인 가구 대상 안전시설, 감지센서, QR 안내시설, 순찰·사후관리 진행
경주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2014년부터 CPTED 환경 조성, 설치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지속
영주	안심귀갓길·CPTED	CCTV, 비상벨, 보안 설치 벽화, 로고젝터 등 설치
영천	CPTED 범죄예방 안전마을길	지능형 관제와 CPTED를 결합한 범죄예방 안전마을길 조성
경산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등	2014년 이후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안심통학로, 안전한 골목길 등 다수 환경개선사업
의성	주민참여형 CPTED	여중 도서관 주변 골목 등에 로고제터, 바닥표지병, LED 벽화 및 이동형 CCTV
칠곡	왜관읍 도시재생·CPTED	경북자지경찰위·군·경찰·대학 등 협업, CCTV, 거리조명, 안심벨 설치
	지켜드림(dream)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공원·원룸촌 등 범죄취약지 야간 합동점검, CPTED 기반 시설 보완
예천	범죄환경 안심거리	도시재생사업에 CPTED 적용, 골목길 환경개선 등

❍ 이처럼 경북지역에서 다양한 CPTED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의 범죄취약지역 및 시설 중심의 환경개선에서 나아가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불안과 지역별 공간·생활환경의 차이를 CPTED 대상지 선정과 개선방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 연구에서 동·읍·면 지역에 따라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와 불안을 느끼는 공간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만큼, 여성안전 취약공간 진단 및 지도화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공간구조, 생활환경 및 주민의 이동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CPTED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지역별로 요구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방식에 차이가 나타남. 동·읍 지역에서는 CCTV 및 지능형 감시시스템 도입 요구가 각각 37.9%, 38.2%로 가장 높았던 반면, 면 지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조도 개선 요구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빈집·공가·폐가 정비 요구는 동 7.5%, 읍 11.8%, 면 20.9%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공간구조와 생활환경, 주민 이동특성을 반영한 동·읍·면별 차별화된 CPTED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동 지역은 「스마트 안전기술 중심형 CPTED」를 적용함. 야간 골목길, 주차장, 원룸 밀집지역 등 여성의 불안이 집중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CCTV 및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우선 배치하고, 조명·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연계하여 보완함. 특히 질적 조사에서 확인된 야간 및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의 불안 경험을 반영하여 시설의 양적 확대보다는 실제 불안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집중적 개선을 추진함

❍ 읍 지역은 「생활거점·이동경로 중심형 CPTED」가 요구됨. 시장·상가·버스정류장·주거지역 등 주민의 주요 생활거점과 이를 연결하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CCTV 등 스마트 안전시설과 조명·보행환경을 보완하고, 빈집·공가 등 방치공간을 함께 정비하여 생활권 전반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함

❍ 면 지역은 「조명·방치공간 개선 중심의 농촌형 CPTED」를 적용함. 농로·마을길 등 야간 이동공간의 조도를 개선하고 가로등·보안등을 확충하는 한편, 빈집·공가·폐가와 수목·적치물 등 시야를 방해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낮은 인구밀도와 분산된 생활권에 적합한 안전환경을 조성함

❍ 아울러 CPTED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추진체계를 구축함.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여성안전 취약공간을 발굴하고, 시·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시설 설치 이후에도 개선 전·후 현장 모니터링과 체감안전 변화를 점검함

정책 제안 **주민 참여형 여성 안전 활동 사업 (가칭)「우리 동네 여성안전 프로젝트」**

【사업 대상】
- 시·군별 읍·면·동 단위 여성안전 취약 생활권 선정
- 여성, 청소년·청년, 장애인, 이주민, 중·고령층 등 다양한 주민 참여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주민자치회,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기존 주민조직과 연계

【사업 주요 내용】
-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고령층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권 안전지도 제작
- CCTV·조도·빈집·골목길 등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도움 요청 및 지원기관 접근성 등 사회적 안전환경 점검
- 주민이 발굴한 위험요인을 시·군, 경찰, 여성폭력 전문기관 등과 공유하여 개선과제로 연계하고, 개선 후 주민 재점검을 통해 정책 환류
-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여성안전 생활권 모델 구축

정책과제 ⑵-2. 생애주기 대상별 실천형 예방교육 구축

1) 제안 배경

❍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단순한 인지도 제고나 교육 이수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여성폭력의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인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실천역량 중심의 예방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질적 조사에서도 청소년과 장애인은 학교, 청소년상담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통해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일부 참여자는 교육이 영상시청 중심이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함. 반면 이주민과 중장년층은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경험의 질뿐만 아니라 대상별 교육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양적 조사에서도 최근 3년간 여성폭력 관련 교육·캠페인 경험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60대의 교육·캠페인 경험률은 44.6%로 가장 낮게 나타남. 또한 60대의 48.4%가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고령층의 여성폭력 관련 정보와 예방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도 지역과 세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시 지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군 지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여성폭력 유형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 역시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따라서 일률적인 예방교육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폭력 노출환경 및 인식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체계가 필요함. 청소년·청년층에는 딥페이크,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교제폭력 등 디지털 공간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인지와 대응을 강화하고, 중장년·고령층에는 가정폭력, 정서적·경제적 폭력의 위험신호, 도움 요청 및 지원기관 이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이주민 등은 장애유형, 의사소통 방식, 언어·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 교육방법 역시 폭력 유형과 지원제도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상황을 활용하여 '위험신호 인지 → 판단 → 도움 요청 → 주변인 대응 → 전문기관 연계'까지 직접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참여·실천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교육 참여자가 단순한 정보 습득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예방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이러한 접근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Respect Ballarat」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Respect Ballarat은 지역 전체에서 폭력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연결하는 Community Saturation Model(지역포화모델)을 적용하여, 주민이 생활(live)·학습(learn)·근무(work)·활동(play)하는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존중과 성평등의 규범이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강화되도록 하고 있음. 즉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받더라도 가정, 또래집단, 스포츠클럽, 직장 등 다른 생활공간에서 상반된 규범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교·가정·직장·스포츠·지역사회의 예방활동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개인의 인식 변화가 행동과 지역사회 규범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접근임

□ **추진 방안**

- ❍ 생애주기와 대상별 여성폭력 위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위험인지 역량을 강화함
- ❍ 단순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위험신호 인지–상황 판단–도움 요청–주변인 대응–전문기관 연계'를 실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역량 중심의 실천형 예방교육체계를 구축함
- ❍ 청소년·청년, 중장년·고령층, 장애인, 이주민 등 대상별 정보 접근성 및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생활권 기관 종사자, 지역 인적안전망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교육 이수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및 사업지침에 교육 실시·이수 근거를 반영

<표 VI-4> 생애주기별 대상별 여성폭력 예방 교육 추진 방안

구분	추진내용
생애주기별 교육내용 차별화	청소년·청년층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교제폭력, 스토킹, 동의와 관계의 경계 설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중장년·고령층은 가정폭력, 정서적·경제적 폭력, 학대와 통제행동, 위험신호 및 도움요청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
취약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장애인은 쉬운 글·그림·반복학습·발달단계별 콘텐츠를 활용하고, 이주여성·이주민은 다국어 자료와 가족센터·통번역 자원을 연계하는 등 언어·인지·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실시
생활공간별 찾아가는 예방교육	학교·대학·직장뿐 아니라 경로당, 복지관, 가족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대상자가 실제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사 례 **호주 Respect Ballarat**

- 방법 : 주민이 생활(live)·학습(learn)·근무(work)·활동(play)하는 일상생활 공간 전체에 폭력 예방과 성평등 메시지와 실천을 직접적으로 확산하는 지역포화(Community Saturation) 방식 적용
- 내용 : 아동·청소년의 존중하는 관계·동의·성평등 교육, 부모의 성평등한 양육·돌봄 교육, 청년·근로자의 성별 고정관념 및 건강한 남성성 교육, 스포츠 참여자의 주변인 실천 교육 등 생애주기와 생활공간에 따른 참여·실천형 예방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학교의 Expect Respect 등을 통해 존중하는 관계, 동의(consent), 성평등 교육 실시
  - 아동·가족: 8~12세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학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 부모: Baby Makes 3을 통해 첫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양육·돌봄과 존중하는 관계 교육
  - 청년·근로자: 직업교육·건설업 등 남성 집중 직종에서 남성성 규범, 성별 고정관념, 존중하는 관계에 대한 참여형 교육 실시
  - 스포츠 참여자: 청소년 선수, 지도자 및 스포츠클럽 리더를 대상으로 성별 고정관념, 존중, 주변인(upstander) 행동 및 도움 요청 교육
  - 지역주민·리더: 남성, 종교지도자,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폭력의 성별화된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교육·역량 강화

참고 respectivictoria.gov.au

정책 제안 **생활공간 연계형 예방교육 (가칭)「우리 동네 존중이음」**

【사업 대상】

- 읍·면·동 생활권
- 이·통장 등 지역 인적안전망 참여자는 기본교육 이수를 활동요건으로 설정
- 도·시군 여성폭력 예방 관련 보조·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예방교육 이수를 사업 선정·성과관리와 연계

【사업 주요 내용】

- 학교·가정·직장·복지기관·마을·체육시설 등 주민이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존중·성평등·폭력 불용·주변인 실천의 공통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
- 대상과 생활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토론·캠페인 등 참여·실천형 예방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아동·청소년은 존중·동의·디지털성범죄, 청년은 교제폭력·스토킹·건강한 관계, 부모는 성평등한 양육·돌봄, 중장년·고령층은 가정폭력·정서적·경제적 폭력과 위험신호 중심 교육
- (대상 특성별 맞춤교육) 이주여성은 다국어·문화적 접근성을 고려한 폭력 인지 및 도움요청 정보, 장애여성은 장애유형과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한 폭력 위험신호·자기보호·신고 및 지원기관 이용방법 중심 교육

정책과제 2-3. 생활밀착형 여성폭력 예방·정보 접근체계 구축

1) 제안 배경

- ❍ 여성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특히 여성폭력 관련 정보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찾아보는 정보가 아니라 주민이 평소 생활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접함으로써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보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확인되었으며, 질적 조사에서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등 전문지원기관을 잘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나타남. 특히 이주민, 장애인, 중·고령층 등은 교육·홍보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상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이 요구됨
- ❍ 또한 여성폭력은 가정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관계, 직장, 학교, 온라인 공간 등 주민의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이나 전문상담기관 중심의 정보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병원·약국, 편의점, 복지기관, 가족센터, 학교, 대학, 직장, 마을회관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을 여성폭력 예방 및 정보제공의 접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경상북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시·군별 생활환경과 정보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농산어촌의 경우 전문지원기관까지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기관을 찾아가는 정보체계'에서 '주민 가까이로 찾아가는 정보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정보와 피해지원 정보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이웃·동료 등 주변인도 적절한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보 접근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병원·약국,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정보접점을 확대하고, 학교·대학, 기업·산업단지, 경로당·마을회관 등 대상별 주요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폭력 유형과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

❍ 가칭 「우리 동네 여성 안전 안심 정보」를 구축하여 폭력 위험신호와 대처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역별 피해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피해자와 주변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지원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 정보 접근체계를 구축함

정책제안 **주민 생활공간을 활용한 여성안전 정보망 (가칭) 「우리 동네 안전 도움 정보망」**

【사업 대상】
- 정보 접근 취약 지역 생활권

【사업 주요 내용】
- (생활밀착형 여성안전 정보접점 확대) 행정정보센터,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공공·지원 정보 상시 비치
- (민간 생활공간 활용 정보망 구축) 병원·약국, 편의점, 미용실, 카페, 숙박시설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간 생활공간 정보 제공
- (대상·생활공간별 맞춤정보 제공) 학교·대학, 산업단지·기업 등 청소년·청년 및 근로자의 주요 생활공간에도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
- (찾아가는 여성안전 정보 제공) 지역축제·장터·문화행사 등 주민 밀집공간과 연계한 찾아가는 정보제공 실시
- (경북여성안전 도움정보 QR 구축) 폭력 위험신호, 대응 방법, 1366·해바라기센터·상담소 등 지역별 전문지원기관과 지원내용을 하나의 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추진전략 3	지역사회 기반 조기발견 및 예방역량 강화

정책과제 3-1.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웨이 구축

1) 제안 배경

○ 여성폭력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전문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폭력의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접근체계가 필요함

○ 본 연구의 질적 조사에서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전문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밀접한 관계망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따라서 피해자가 전문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만으로는 조기발견과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반면 주민은 여성폭력 전문기관보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복지관, 학교, 의료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러한 생활밀착 기관은 피해자 또는 가족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 폭력의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사회 접점이 될 수 있음

○ 이에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폭력 위험신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하여 상담·보호 등 필요한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전문기관 중심의 사후적 지원에서 생활권 조기발견–초기 안내–전문지원 연계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대응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학교·청소년기관 등 주민 접촉이 많은 기존 기관을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웨이로 지정함. 이는 새로운 상담기능을 부여하기보다 위험신호 발견-초기 안내-전문기관 연계를 핵심 역할로 설정

○ 생활권 게이트웨이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경찰·의료기관 등을 연계하여 지역별 연락·의뢰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고위험·긴급사례는 전문기관 및 경찰 등으로 즉시 연결하고, 일반사례는 피해자의 욕구에 따라 상담·법률·의료·심리 등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도록 함

정책제안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 (가칭)「우리 동네 안전 연결소」**

【사업 대상】
- 여성폭력 전문지원기관 접근성이 낮거나 조기발견·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한 읍·면·동 생활권

【사업 주요 내용】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생활권 여성폭력 안전 게이트웨이 지정·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경찰·의료기관 등 전문지원기관과의 신속 연계체계 구축

정책과제 3-2. 지역주민 참여형 여성안전 인적 안전망 구축

1) 제안 배경

○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잠재적 위험과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와 가까운 생활권에서 위험신호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이 필요함

- ❍ 본 연구의 질적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원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이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특히 농산어촌은 전문지원기관과의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밀접한 관계망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기반의 조기발견·연계체계가 요구됨
- ❍ 지역사회에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복지사, 자율방범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요양보호사 등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존재함. 이들이 여성폭력의 위험신호와 전문지원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출 경우,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여성안전 연결자로 기능할 수 있음
- ❍ 경상북도는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경찰, 지역 상담소 등이 참여하는 「반딧불 프로젝트」를 통해 지적장애 여성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의 고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안전귀가·밀착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안동·구미·경산·포항 등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도내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여성폭력 인식과 주변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안전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기존 주민조직과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여성폭력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와 주변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생활권 기반 여성안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 이·통장, 생활지원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기존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여성안전 지킴이」를 발굴·양성하여 생활권 단위의 여성안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함
- ❍ 여성안전 지킴이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의 주요 위험신호와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사례와 상황을 활용하여 ‘알아차리기–안전하게 다가가기–정보 제공하기–전문기관 연결하

기' 등 주변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강화함

❍ 여성안전 지킴이는 피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조사하는 역할이 아니라 위험신호를 알아차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과정에 피해자 중심의 대응, 2차 피해 예방,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원칙을 포함함

❍ 기존 장애인 특화 「반딧불 프로젝트」를 폭력피해 위험과 지원 접근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이주민을 위한 특화 안전망으로 강화함. 기존의 고위험군 발굴·안전귀가·밀착보호 등을 지속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가족센터 등 장애여성 및 이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폭력 위험신호의 조기발견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의 상담·보호·의료·법률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강화함

정책제안 **지역주민 참여형 여성안전 인적 안전망 구축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사업 대상】
- 여성폭력 전문지원기관 접근성이 낮거나 조기발견·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한 읍·면·동 생활권

【사업 주요 내용】
- 이·통장, 생활지원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성친화도시 위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발굴·양성
- 여성폭력 위험신호 발견 및 주변인 대응교육 실시
- 지역주민-생활권 게이트웨이-전문기관 연계체계 구축

정책제안 **기존 여성장애인 특화 사업에서 대상·지역 확대 「반딧불 프로젝트 +」**

【사업 대상 확대】
- 여성폭력 피해 위험이 크거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이주민으로 대상 확대

【사업 지역 확대】
- 포항·구미·경산·안동 등 권역 중심의 사업을 경북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의 거주지역에 따른 안전·지원 격차 완화

【사업 내용】
- 포항·구미·경산·안동 등 권역 중심의 사업을 경북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안전·지원 격차 완화

정책과제 3-3. 피해자 중심 지역사회 인식 및 주변인 대응 역량 강화

1) 제안 배경

○ 여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는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가족·친구·이웃·동료 등 주변인의 태도와 지역사회의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행동에서 찾는 인식,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고 피해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질적 조사에서도 지역사회 내 관계가 밀접한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였으며,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체벌이나 고함 등 폭력적 행동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인식도 확인됨. 이는 여성폭력을 개인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지지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상은 반드시 전문기관 종사자만이 아니라 가족·친구·이웃·동료 등 주변인일 수 있음. 이때 주변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이야기를 경청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며 적절한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단순한 폭력 인지교육에서 확장하여 주변인이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반응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역사회 전반에 '듣고-믿고-연결하기'의 피해자 중심 대응원칙을 확산하고, 주민이 여성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주변인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피해자 중심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경청하기', '피해자의 선택과 의사 존중하기', '필요한 도움 연결하기' 등 피해자 중심의 공통 메시지 개발·확산

❍ 지역축제, 전통시장, 학교·대학, 기업, 복지기관,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의 주요 생활공간과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캠페인 실시

정책제안 **피해자 중심 지역사회 인식 개선 교육·캠페인「듣고, 믿고, 연결하기」**

【사업 대상】
-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

【사업 주요 내용】
- ('듣고-믿고-연결하기' 피해자 중심 행동원칙 확산) 피해자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 경청하기, 피해자의 경험과 의사를 존중하기, 필요한 경우 전문지원기관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기 등 공통 실천메시지 개발·확산
- (생활공간 중심 캠페인 전개) 학교·대학, 직장·산업단지, 복지기관, 마을·경로당, 지역축제·문화행사 등 주민의 주요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포스터·카드뉴스·영상·참여형 캠페인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

추진전략 4	지역 격차 없는 피해자 지원·연계체계 강화

정책과제 4-1. 농산어촌 찾아가는 여성폭력 지원서비스 강화

1) 제안 배경

○ 경상북도는 넓은 행정면적과 농산어촌 지역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심리 등 전문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대중교통과 이동수단이 제한적인 읍·면 지역에서는 피해자가 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만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움

○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시설은 총 26개소이나 일부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54.5%)에는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의성군·봉화군·울진군 등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군 지역에도 관련 시설이 없어 시설 미설치와 넓은 이동권역이 중첩되는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가 존재함

○ 반면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지역사회 자원이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전문적인 여성폭력 상담·판단 기능을 부여하기보다는 위험징후 발견–초기 안내–전문기관 연계의 '지역사회 게이트웨이' 기능을 부여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이 생활권으로 찾아가 상담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질적 조사에서도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상담소 등 피해지원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함께 농산어촌의 밀접한 관계망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확인됨. 이에 '피해자가 전문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전문서비스가 피해자의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상담, 순회지원, 이동지원 및 비대면 상담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여성·장애여성·이주여성 등은 이동, 정보, 의사소통 등의 제약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기존 생활권 복지자원을 활용한 조기발견·연계와 권역 전문기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거주지역이나 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필요한 전문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농산어촌형 여성폭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네잎클로버 사업」을 기반으로 여성폭력 전문지원기관 접근성이 낮은 군 지역 및 읍·면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 확대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보건지소, 가족센터, 복지관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기관을 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피해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시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

○ 고령여성·장애여성·이주여성 등 서비스 접근 취약대상을 우선 발굴·지원하고, 고령여성은 방문상담 및 복지·건강서비스 연계, 장애여성은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이동지원, 이주여성은 다국어 상담·통역 및 체류·법률정보 제공 등 대상 특성별 맞춤지원 강화

○ 농산어촌의 밀접한 지역관계망을 고려하여 상담 장소·시간·예약방식을 다양화하고, 피해자의 익명성·비밀보장 및 안전을 확보하며 필요시 전문기관 동행·이동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군–권역별 전문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소 미설치 시·군은 찾아가는 상담·피해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으로 확보하여 시·군의 피해자 지원 책임성 강화

정책제안 **기존 찾아가는 상담사업을 농산어촌형 통합지원서비스로 고도화「네잎크클로버 +」**

【사업 대상】
- 여성폭력 전문지원기관 접근성이 낮은(특히 여성폭력상담소 미설치 지역) 군 지역 및 읍·면 지역

【사업 주요 내용】
- 상담소 미설치 군 및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확대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보건지소, 가족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한 생활권 상담거점 운영
- 초기상담-전문상담-의료·법률·심리-보호-사후관리 통합연계
- 고령여성·장애여성·이주여성 등 접근 취약계층 맞춤지원
- 익명성·비밀보장 및 안전을 고려한 상담방식 운영

【추진체계 및 재원분담】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군-권역별 여성폭력 상담·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찾아가는 상담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정책과제 4-2. 권역별 여성폭력 전문지원 연계체계 구축

1) 제안 배경

○ 여성폭력 피해자는 상담뿐만 아니라 수사, 의료, 법률, 심리·정서, 보호,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경찰, 의료·복지기관 등 다양한 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와 공동대응이 중요함

○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시설은 총 26개소로, 시설 1개소당 인구는 95,872명, 시설 1개소당 평균 면적은 약 708.8㎢로 나타남. 그러나 포항시 9개소, 안동시·경산시 각각 3개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영천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는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체 22개 시·군의 54.5%가 시설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남

○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할 경우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남. 경주시와 구미시는 시설 1개소당 인구가 각각 242,512명, 201,298명으로 경북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의성군·봉화군·울진군 등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군 지역에도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거리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시설의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와 지리적 거

리, 실제 생활권을 함께 고려한 전문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 또한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와 원스톱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기관별 수사·보호·회복이라는 업무 목적과 관점의 차이,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복합·고위험 사례에서 서비스 연계 지연, 반복 진술 및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문기관의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기관 간 역할조정과 공동사례관리를 통한 연계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모든 시·군에 동일한 수준의 전문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경북의 지리적 여건과 시설·전문자원의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전문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권역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에 대한 사례자문·찾아가는 지원·전문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복합·고위험 사례는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지역 간 전문서비스 접근성의 격차와 기관 간 연계의 공백을 동시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경북의 지리적 여건과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분포·접근성을 고려하여 동부권·서부권·남부권·북부권의 4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기존 여성폭력 전문기관 중 거점기관을 지정함.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1366 경북센터,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시·군, 경찰, 의료·법률·정신건강·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여성폭력 전문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

○ 권역별 참여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지원현황과 연계과정의 문제점, 지역별 서비스 공백 및 지원수요를 공유하고 권역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함

○ 청소년안전망의 통합사례회의 운영 방식[10]을 참고하여 지자체·경찰·1366·상담소·해바라기센터·의료기관·가족센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여성폭력 통합사례회의

10) 청소년안전망에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의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련기관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위기수준 판정, 맞춤형 개입계획 수립, 기관별 서비스 연계 및 긴급대응 등을 협의함. 특히 경북 청도군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통합사례회의의 구성·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를 정례화하고, 복합·고위험 사례에 대한 공동판단-기관별 역할분담-서비스 연계-사후관리를 강화함. 또한 통합사례회의가 담당자 개인의 협력관계에 의존하지 않도록 조례 또는 관련 지침에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

- ❍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기관 간 정보공유 기준과 역할·연계절차를 마련하여 기관 이동에 따른 반복 진술과 2차 피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함
- ❍ 전문지원기관이 부족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는 권역 거점기관이 사례자문, 찾아가는 상담, 실무자 교육, 공동사례관리 및 전문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여 지역 간 피해지원 격차를 완화함

정책제안 **「권역별 여성폭력 통합사례회의 정례화·제도화」**

- 고위험·복합사례 발생 시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사례 판단-기관별 역할분담-서비스 연계-사후관리를 수행하는 통합사례회의 운영
- 청소년안전망의 통합사례회의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조례 또는 운영지침에 회의 구성·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

정책제안 **「경북 권역형 여성폭력 전문지원 네트워크」 운영**

【사업 대상】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시·군,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정신건강·복지기관 등 권역별 여성폭력 관련 기관

【사업 주요 내용】
- 권역별 전문지원 네트워크 구성 :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분포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거점 전문기관 지정
- 권역별 실무협의회 정례 운영 : 분기별 등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지원현황 및 지역별 피해지원 수요 공유. 기관 간 의뢰·연계 과정의 문제점 및 지원 공백 점검, 개선방안 공동 논의
- 상담소 등 전문지원기관이 부족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 거점기관의 사례자문, 찾아가는 상담, 실무자 교육, 공동사례관리 및 전문서비스 연계 지원

【추진체계 및 재원분담】
- 여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찾아가는 상담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정책과제 4-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보호·주거 및 회복지원 강화

1) 제안 배경

○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분리와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긴급보호와 이후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경북은 긴급피난처 등 보호자원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산어촌·산간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 등 긴급보호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 상담소의 전문 긴급피난처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제기됨. 또한 긴급피난처는 상주인력 부족으로 야간·주말 상담원의 긴급출동 부담이 크고, 시간외수당·대체인력 등 운영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경찰–상담소–긴급피난처 간 연계 강화와 안정적인 인력·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긴급피난처는 일시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이후 직장생활과 법적 절차 등을 유지하며 회복·자립하기 위한 중·장기 주거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 연계, 주거비 지원 등과 상담·법률·복지·자립지원을 연계하여 ‘긴급분리–긴급보호–안정적 주거–회복·자립–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안

○ 피해자의 위험도와 지원욕구를 고려하여 전문 긴급피난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이용가능 시설정보를 공유하고, 야간·주말을 포함한 의뢰·연락·입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긴급보호 연계체계 강화해야 함

○ 야간·휴일 긴급출동에 따른 시간외수당, 당직·대체인력 등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상담소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긴급피난처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

○ 쉼터·긴급피난처가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서 긴급분리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1366 및 권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필요시 이동·동행지원 등을 병행함. 전문가 조사에서도 긴급 이동지원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포함하는 이

동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시됨

❍ 긴급피난처 퇴소 이후에도 독립적인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자원을 우선 연계하고, 주거비·이사비 등 주거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가해자와의 재결합이나 불안정한 주거로의 복귀를 예방함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긴급보호 연계체계」 강화**

【사업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 중 긴급분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및 긴급피난처 운영기관

【사업 주요 내용】
- 경찰-1366-상담소 간 긴급피난처 이용정보 공유 및 24시간 의뢰·입소 연계체계 강화 · 긴급피난처 미설치지역의 1366 및 권역별 전문기관 연계
- 이동·동행지원 · 야간·휴일 긴급출동에 따른 시간외수당, 당직·대체인력 등 운영비 지원 · 현장 출동비, 긴급의료비 등 공동대응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긴급안전주거 지원사업」 운영**

【사업 대상】
- 긴급피난처 퇴소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분리 및 독립적인 주거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

【사업 주요 내용】
-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및 기존 주거자원을 활용한 소규모·분산형 안심주거 확보
- 긴급보호 이후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 및 주거비·이사비 등 주거유지 지원
- 법률·심리·복지·취업 등 회복·자립서비스 연계 · 1366, 시·군, 여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한 입주-사례관리-자립-퇴거 후 사후관리 연계

5.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1)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는 넓은 행정구역과 농산어촌 중심의 생활환경, 높은 고령화 수준, 지역 간 여성폭력 지원 인프라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도내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여성폭력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예방활동과 피해자 조기발견 및 전문서비스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포화형 예방-생활권 조기발견·연계-권역 전문지원'을 핵심 축으로 하는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그러나 개별 정책과제가 지역사회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정책지원과 시·군의 실행기반, 생활권의 예방활동 및 권역 전문기관의 피해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예방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여성폭력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정책사업으로 「우리 동네 여성안전 함께 ON」을 제안함

○ 본 사업은 '우리 동네에서 예방하고, 함께 살피고, 안전하게 연결한다'는 방향 아래, 광역센터가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을 기획·지원하고 시·군과 생활권 기관, 주민조직 및 여성폭력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별도의 전문시설 설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폭력 예방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간 예방·지원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우리 동네 여성안전 함께 온(ON)

□ 사업목표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예방 공백 해소 및 지역 간 예방·지원 격차 완화

○ 광역센터 중심의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지원과 시·군의 예방 책임성 강화

○ 생활권 조기발견·연계와 권역 전문지원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사업 대상

○ 경북 22개 시·군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미설치 12개 시·군

○ 여성폭력 전문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읍·면 지역 및 여성안전 취약 생활권

○ 지역주민, 생활권 기관 종사자, 주민조직 및 여성폭력 예방·지원 관련 기관

□ 추진 주체

○ 총괄: 경상북도

○ 주관: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설치 제안)

○ 협력: 시·군,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여성폭력상담시설협의회, 경찰, 공공·민간 지역기관 및 주민조직

□ 주요 추진사업

○ 광역센터 중심의 미설치지역 예방사업 집중지원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예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예방환경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예방사업을 개발·지원함.
- 우선 미설치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환경, 주민의 안전인식, 지역별 위험요인, 여성폭력 관련 자원 및 전문서비스 접근성을 조사·분석하여 지역별 예방 취약요인을 파악함. 이를 토대로 시·군의 인구학적·지리적 특성과 지역사회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사업을 발굴하고, 예방교육·캠페인, 주민참여형 안전환경 개선 등 지역포화형 예방사업을 집중 지원함
- 아울러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를 활용하여 미설치지역의 예방활동, 주민 안전체감, 여성폭력 지원정보 인지도 및 전문서비스 접근성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역별 예방사업의 개선과 정책지원에 반영함

- 이를 통해 광역센터는 시·군의 예방사업을 기획·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예방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생활권 중심의 예방교육 및 여성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 학교, 직장, 복지기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지원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역량을 강화함
- 생활공간 연계형 예방교육인 「우리 동네 존중이음」을 운영하여 청소년·청년층에는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중장년·고령층에는 가정폭력과 정서적·경제적 폭력 등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함. 또한 장애여성·이주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폭력 위험신호 인지, 도움 요청, 주변인 대응 및 전문기관 연계방법을 포함한 실천형 교육을 강화함
- 이와 함께 병원·약국, 편의점, 가족센터, 복지기관 등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민간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안전 도움 정보망」을 구축함. 여성폭력의 주요 위험신호와 대응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피해지원기관의 이용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필요한 지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QR 기반 정보 제공과 함께 안내문, 홍보물 및 대면 안내를 병행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함

❍ 주민참여형 안전환경 개선 및 생활권 조기발견체계 구축

-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 여성폭력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생활권 기관과 주민조직을 통해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 먼저 「우리 동네 여성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주민자치회, 이·통장 등 기존 주민조직과 지역주민이 함께 여성안전 취약공간을 발굴하고 생활권 안전지도를 제작하도록 함. 이를 통해 CCTV, 조도, 빈집, 골목길 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움 요청 및 전문기관 접근성 등 사회적 안전환경을 함께 점검하고, 시·군 및 경찰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선사업을 추진함
- 또한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점의 생활권 기관을 「우리

동네 안전 연결소」로 지정·운영하여 여성폭력 위험징후 발견, 초기 안내 및 전문기관 연계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생활권 기관은 직접적인 피해조사나 전문상담을 담당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와 함께 이·통장, 생활지원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기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를 발굴·양성함. 여성폭력 위험신호 인지, 주변인 대응, 피해자 지원정보 안내 및 전문기관 연계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예방 참여역량을 강화함
- 특히 피해자 중심의 대응원칙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듣고-믿고-연결하기」 실천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피해자의 의사 존중, 비밀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을 병행함

○ 권역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피해지원 강화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피해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와 권역별 전문기관을 연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강화함
- 기존 민·관·경 협력지원사업의 이동상담 기능을 활용한 「네잎클로버+」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전문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피해지원 정보 제공을 확대함. 미설치지역의 가족센터, 복지관 등 기존 생활권 기관을 상담거점으로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및 권역별 여성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의료·법률·심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또한 장애여성, 고령여성, 이주여성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원 취약대상을 위해 기존 「반딧불 프로젝트」의 대상과 지원지역을 확대하는 「반딧불 프로젝트+」를 추진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복지기관,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폭력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에 따라 이동·동행·통역 지원 등을 연계하여 전문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완화함
- 이 과정에서 광역센터는 사업의 기획·조정 및 지역 간 자원연계를 담당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와 권역별 전문기관은 전문상담, 긴급보호 및 피해자 사례관리 등 직접적인 피해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구분함

❍ 미설치지역 예방협력체계 운영 및 성과관리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경찰, 생활권 기관, 여성폭력 전문기관 및 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함
- 시·군별 예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 내 여성폭력 위험요인과 예방사업 추진현황, 생활권 안전망 운영상황 및 기관 간 연계과제를 공유하도록 함. 특히 시·군은 지역사회 자원과 주민조직을 활용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센터는 지역별 사업 운영을 지원하면서 권역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기능을 수행함
- 아울러 예방교육 운영실적,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안전 연결소 및 안전 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이와 함께 주민의 안전체감도, 피해지원기관 인지도, 예방사업 참여 및 만족도 등 질적 성과를 함께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함
- 이를 통해 미설치지역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위험요인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예방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예방활동과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

□ 사업 추진체계

❍ 본 사업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광역센터, 권역별 여성폭력 전문기관, 시·군 및 읍·면·동 생활권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다층적 추진체계로 운영함

❍ 경상북도는 사업의 정책적 총괄 주체로서 사업 추진방향 설정, 행정·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담당함. 특히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기반을 지원함

❍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는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기획·개발, 지역별 예방환경 및 정책수요 분석, 시·군 맞춤형 사업지원, 지역사회 예방 네트워크 구축, 담당인력 교육·컨설팅 및 성과관리 기능을 수행함

❍ 시·군 및 생활권 기관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사업을 실행하고, 주민참여형 안전환경 개선과 생활권 안전 연결소 및 안전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여성폭력 위험징후의 조기발견과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함

❍ 여성폭력 지원 전문기관 및 여성폭력상담시설협의회는 찾아가는 상담, 피해자 전문서비스 연계, 긴급보호 및 사례관리 등 피해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사회 예방사업과 전문지원체계 간 협력을 강화함

❍ 이러한 추진체계는 광역에서 생활권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권과 시·군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정책수요를 권역 및 광역 차원으로 환류하고, 이를 다시 예방사업과 지원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순환적 협력체계로 운영함

□ 기대효과

❍ 첫째,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존 생활권 자원을 활용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여성폭력 예방·지원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둘째, 학교·직장·마을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예방교육과 안전정보 제공, 주민참여형 안전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의 예방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셋째, 생활권 안전 연결소와 안전 지킴이를 통해 여성폭력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함으로써 피해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예방 및 조기개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넷째, 광역센터의 예방사업 지원기능과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및 권역 전문기관의 피해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예방활동과 전문서비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시·군의 예방 책임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역별 예방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책제안

경북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사업「우리 동네 여성안전 함께 ON」

우리 동네에서 예방하고, 함께 살피고, 안전하게 연결한다.

【주관 기관】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협력 기관】 **경북 여성폭력지원 기관, 여성폭력상담시설협의회, 경찰, 공공·민간 지역기관 및 주민조직**

【사업 목표】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예방 공백 해소 및 지역 간 예방·지원 격차 완화
- 광역센터 중심의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지원과 시·군의 예방 책임성 강화
- 생활권 조기발견·연계와 권역 전문지원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대상】

- 경북 22개 시·군 중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 12개 지역
- 여성폭력 전문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읍·면 지역 및 안전 취약 생활권
- 지역주민, 생활권 기관 종사자, 주민조직 및 여성폭력 예방·지원 관련 기관

【사업 주요 내용】

① 광역센터 중심의 미설치지역 예방사업 집중지원

- 미설치지역의 여성폭력 예방환경, 위험요인, 주민 인식 및 지역자원 조사·분석
- 여성폭력 예방교육·캠페인, 주민참여형 안전환경 개선 등 지역포화형 예방사업 개발·보급
-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안전지표」**를 활용한 미설치지역 예방·안전수준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② 생활권 중심의 예방교육 및 여성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 학교·직장·복지기관·마을회관·경로당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우리 동네 존중 이음」** 예방교육 운영
- 청소년·청년, 중장년·고령층, 장애여성·이주여성 등 생애주기와 대상 특성을 반영한 실천형 예방교육 실시
- 병원·약국, 편의점, 복지기관 등 공공·민간 생활공간을 활용한 **「우리 동네 안전 도움 정보망」** 구축

- 여성폭력 위험신호, 대응방법, 1366·해바라기센터·상담소 등의 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QR 기반 정보 접근체계

③ 주민참여형 안전환경 개선 및 생활권 조기발견체계 구축

- **「우리 동네 여성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참여형 안전 취약공간 진단, 생활권 안전지도 제작 및 지역 맞춤형 CPTED 추진
- 가족센터, 복지관 등 기관을 **「우리 동네 안전 연결소」**로 지정하여 위험징후 발견-초기 안내-전문기관 연계 기능 수행
- 이·통장, 생활지원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성친화시민단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발굴·양성
- 피해자 중심 대응원칙과 비밀보장·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듣고-믿고-연결하기」** 실천지침 개발 및 교육

④ 권역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피해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네잎클로버+」**를 활용한 미설치지역 찾아가는 상담·지원 확대
- 미설치지역의 가족센터, 복지관 등을 생활권 기관을 상담거점으로 활용하고, 권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의료·법률·심리·보호서비스 연계
- 장애여성·고령여성·이주여성 등 지원 취약대상을 위한 **「반딧불 프로젝트+」** 확대 및 이동·통행·통변 지원

⑤ 미설치지역 예방협력체계 운영 및 성과관리

- 미설치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민·관·경 및 생활권 기관·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예방협력체계 구축
- 시·군별 예방협력회의 정례화를 통한 지역 위험요인,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기관 간 연계과제 공유
- 광역센터와 1366 경북센터, 권역 전문기관 간 예방·지원 연계체계 운영 및 역할 조정
- 예방교육,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생활권 안전망 운영 및 전문기관 연계 실적 등 성과관리
- 미설치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사업 개선·확산

【추진체계】

- 경상북도: 사업총괄, 행정·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경북 여성폭력 예방·지원 광역센터: 여성폭력 지원기관 미설치 지역 예방사업 기획·개발, 미설치지역 집중지원, 여성폭력 예방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관리
- 시·군 및 지역기관: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실행, 주민참여 활성화, 위험징후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 경북 여성폭력지원기관 및 여성폭력상담시설협의회: 찾아가는 상담, 전문서비스 연계, 긴급보호 및 피해자 사례관리

【기대효과】

- 여성폭력 전문기관 미설치지역의 예방 공백 해소와 지역 간 여성안전 격차 완화
-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정보제공·조기발견이 연계되는 생활밀착형 예방체계 구축
- 광역센터의 예방지원 기능과 권역 전문기관의 피해지원 기능을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 주민참여와 시·군의 실행역량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조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고은정(2025),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 개선방안: 미국 VAWA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24(1), 209-238.

관계부처합동(2025.7.),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2025년 시행계획.

김민아(2024),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애라(2025),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AI 감시 및 학습데이터 구축·관리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2021), 평등정책으로서 젠더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전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영희(2001),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강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 3-24.

심선희, 문수연(2025), 2025년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부(2024),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전예지(202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9(1), 51-75.

황정임, 정수연, 박선영, 홍미리, 고현승, 한민경(2024),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ustralian Government. (2022). 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2032.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 Family,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in Australia.

Campbell, J. C. (2002). Health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Lancet, 359(9314), 1331-1336.

Family Safety Victoria. (2021). MARAM Framework (Multi-Agency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ramework).

Heise, L. L. (1998), Violence against women: an integrated, ecological framework, Violence Against Women, 4(3), 262-290. DOI:

10.1177/1077801298004003002

Kawachi, I., & Berkman, L. F. (2000).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health.

Our Watch, Australian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 & VicHealth. (2021). Change the Story: A Shared Framework for the Primary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Australia (2nd ed.).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Robinson, A. L. (2006). Reducing Repeat Victimization among High-risk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Benefits of a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Violence Against Women.

Sabel, W., Coulton, C. J., Kornin, J. E.(2004). Building community capacity for violence preven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3), https://doi.org/10.1177/0886260503261155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t al. (2024). Interagency Statement on VAWA's Housing Provision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2026). Violence Against Women Act.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2026). Grants to Improve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Program Fact Sheet. www.justice.gov.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HO.

부록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여성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개인 자료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책 임 자 :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김민아
▶ 조사수행기관 : (사)한국혁신연구원 도문학 과장
(tel: 054-810-7044. fax: 070-7614-1646, E-mail: kilab2015@naver.com)

I 응답자 특성

A1. 귀하는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A2. 귀하는 **연령**은 어떠합니까?

① 19~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A3. 귀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임금근로자 ③ 자영업 ④ 농어업 ⑤ 무직
⑥ 기타 ( )

A4. 귀하의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한국인 ②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이민자/귀화자) ③ 외국인

A5. 귀하의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선택해 주세요. (※ 복수응답으로 하되 ① 해당없음일 경우 복수응답 불가)

① 해당없음 ② 한부모 가구 ③ 장애가 있음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A6.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경상북도 내 시·군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포항시 ② 경주시 ③ 김천시 ④ 안동시 ⑤ 구미시 ⑥ 영주시 ⑦ 영천시 ⑧ 상주시
⑨ 문경시 ⑩ 경산시 ⑪ 의성군 ⑫ 청송군 ⑬ 영양군 ⑭ 영덕군 ⑮ 청도군 ⑯ 고령군
⑰ 성주군 ⑱ 칠곡군 ⑲ 예천군 ⑳ 봉화군 ㉑ 울진군 ㉒ 울릉군

A7. 귀하가 **거주하는 행정구역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① 동 지역 (시내 중심가 등 도시 지역) ② 읍 지역 (읍 소재지 등 거점 지역)
③ 면 지역 (농어촌 및 산간 지역)

A8. 현재 **귀하를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혼자 산다 ② 2인 ③ 3인 이상

A9.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Ⅱ 지역사회 안전 및 폭력 인식

B1. 귀하가 **거주하는 동네(마을)은 전반적인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안전함 ② 안전함 ③ 보통
④ 안전하지 않음 ⑤ 매우 안전하지 않음

B2. **야간에 혼자 동네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안전함 ② 안전함 ③ 보통
④ 안전하지 않음 ⑤ 매우 안전하지 않음

B3.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치안 및 안전시설(가로등, CCTV 등)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충분함 ② 충분함 ③ 보통
④ 부족함 ⑤ 매우 부족함

B4. **우리 동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물리적 시설**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조도 개선) ② CCTV 설치 및 지능형 감시 시스템 도입
③ 비상벨 및 안심 귀갓길 표지판 설치 ④ 방치된 공가(빈집) 및 폐가 정비
⑤ 경찰 순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확대

B5. 귀하는 **여성폭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 **여성폭력이란?**
>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의미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보통
④ 거의 알지 못한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B6. 귀하는 **우리 지역에서 여성폭력 관련 사건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 접한다 ② 종종 접한다 ③ 가끔 접한다
④ 거의 접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접하지 않는다

B7. **여성폭력은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B8. 귀하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여성폭력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폭력 ② 성폭력 ③ 디지털 성범죄
④ 스토킹 ⑤ 데이트폭력 ⑥ 성희롱
⑦ 기타( ) ⑧ 잘 모르겠다

B9. 귀하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피해자는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B9번, ④, ⑤ 응답자에 한함.

B9-1. 귀하께서 우리 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접근성 부족: 지원 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거주지에서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함
② 정보 부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잘 모름
③ 전문성 및 인력 부족: 지원 기관의 상담 인력이 부족하거나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낮음
④ 경제적 지원 한계: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부족함
⑤ 사법·행정 체계의 미온적 대응: 경찰 수사나 법적 보호 조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처벌이 약함
⑥ 지역사회 인식 부족: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가해자 중심의 온정주의적 지역 문화
⑦ 연계 체계 부재: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지원 기관 간의 협력 및 통합 지원 시스템 부족
⑧ 기타: (_____)

Ⅲ 폭력 허용도 및 폭력 피해 두려움

C1.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상사는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때릴 수 있다 (구타, 체벌 등).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는 때릴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C2.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밀한 누군가(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가족/친척, 친구)가 나를 구타(폭력)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력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메시지 등을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 나를 불법 촬영할까 봐 두렵다 (공중화장실, 공공장소, 유흥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 (택배, 수리기사 방문 등)의 방문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밤늦게 동네(골목길)를 지나거나(걷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Ⅳ 지역 기반 예방 생태계 및 자원 인식

D1. 귀하는 최근 3년 사이에, 여성폭력 관련 교육(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이나 캠페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D1-1로 이동)　　② 아니오 (☞ D2로 이동)

※ D1번에 ① 응답자에 한함.

D1-1. 있다면,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학교(초중고대학)　② 직장　③ 주민센터・지자체 교육
④ 온라인 교육　⑤ 인터넷・SNS・유튜브　⑥ 종교단체・시민단체 프로그램
⑦ 기타(　　)

D2. **현재 거주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이름만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D3. 다음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험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기관이 하는 일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고 기관의 역할도 잘 알고 있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 상담 전화로 초기상담 및 정보, 긴급보호 등을 제공함	①	②	③
2)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수사/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	①	②	③
3)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상담, 보호, 수사/의료/법률지원 등을 제공함	①	②	③
4)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수사/의료/법률지원 등을 제공함	①	②	③
5) 해바라기센터 병원에 설치되어 365일 24시간 여성·아동 대상 폭력피해에 대해 상담, 의료, 수사, 심리지원 등을 제공함	①	②	③
6) 경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영상을 삭제 지원 등을 제공함	①	②	③
7) 직장내 고충상담창구, 위(wee)클래스 및 대학인권센터 등 학교내 상담실 직장과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상담, 지원함	①	②	③
8)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구조, 상담, 의료/법률/자활지원 등을 제공함	①	②	③
9) 성매매 아동청소년 상담소 온오프라인에서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발견, 지원함	①	1②	③

D4. 귀하는 **<u>태어나서 지금까지 다음의 폭력을 경험한 적</u>**이 있습니까? (※ 남성, 여성 모두 응답)

- 온라인 속에서 원치 않은 성희롱이나 성적 촬영물 전송(게임, 메신저 등)
- 버스나 지하철, 직장이나 학교, 길거리 등에서 성차별적 인사나 불쾌한 성적 접촉, 성적인 언동, 성적 시선
-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이별 폭력 등)
- 친밀한 사이에서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나 성적인 도구, 옷이나 시간, 만나는 사람 등 일·생활 통제, 물리적 폭력이나 폭언
- 가정 내에서의 성차별적 언행이나 일상생활 통제, 물리적·경제적·성적 폭력
- 성적 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나 요구(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 성적인 사진 합성(딥페이크)이나 성적 촬영을 유포/유포 협박, 개인정보 유포나 유포 협박, 동의하지 않은 성적 촬영(불법촬영) 등

① 있다　　② 없다

※ D4번에 ① 응답자에 한함.

D4-1. **여성폭력 피해나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D4-2. **있다면,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가족(연인 포함) ② 친구 또는 이웃 주민 ③ 직장 동료 또는 상사
④ 학교 관계자(교사, 상담교사 등) ⑤ 경찰 ⑥ 의료기관(병원, 의료진 등)
⑦ 여성폭력 상담기관 (여성폭력상담소 등)
⑧ 지역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⑨ 종교기관 또는 종교인 ⑩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⑪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SNS ⑫ 기타 ( )

D5. 귀하의 **이웃에서 여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① 즉시 경찰(112)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②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상태를 묻거나 도움을 제안한다
③ 이웃 주민이나 이장·통장 등 마을 리더와 상의한다 ④ 개인적인 일이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⑤ 보복이나 구설수가 두려워 모르는 척한다

(※ D3문항에서 9항목 모두 ① "전혀 모른다"를 응답한 경우 D7로 이동)

D6. **아래와 같은 기관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신 적**(본인, 가족, 지인 동행 포함)이 있습니까?

1)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담 전화로 초기상담 및 정보, 긴급보호 등을 제공함
2)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수사/의료/법률지원 등을 제공함
3)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상담, 보호, 수사/의료/법률지원 등을 제공함
4)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수사/의료/법률지원 등을 제공함
5) 해바라기센터	병원에 설치되어 365일 24시간 여성·아동 대상 폭력피해에 대해 상담, 의료, 수사, 심리지원 등을 제공함

6) 경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영상을 삭제 지원 등을 제공함
7) 직장내 고충상담창구, 위(wee)클래스 및 대학인권센터 등 학교내 상담실	직장과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상담, 지원함
8)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구조, 상담, 의료/법률/자활지원 등을 제공함
9) 성매매 아동청소년 상담소	온오프라인에서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발견, 지원함

① 있다　　② 없다　　③ 응답하기 어렵다

D7. 우리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여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직장, 지역사회 단체에서 정기적인 성평등·폭력예방 교육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민센터, 복지기관, 경찰, 상담소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폭력 피해자가 오기 전이라도, 위험이 높은 지역·가구를 찾아가는 선제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농촌·어촌·외곽지역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사업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 장애여성, 이주여성, 노년 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언론·미디어, 종교·시민단체 등이 여성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주민들이 여성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정책 및 인프라 만족도

E1.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나 전문기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함 ② 충분함 ③ 보통
④ 부족함 ⑤ 매우 부족함 (기관이 어디인지 모름 포함)

E2. **경상북도에서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지역 밀착형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확대
②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처벌 체계 구축
③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산간벽지 지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강화
④ 주민 자치조직(부녀회, 노인회 등) 중심의 안전망 구축 지원
⑤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등 신종 폭력 대응 인프라 확충
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 대응 체계 마련

E3. **우리 지역에 여성폭력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① 안심 귀갓길 조성 및 가로등, CCTV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강화
② 마을 단위(부녀회, 노인회 등) 밀착형 폭력 예방 교육 확대
③ '이웃 파수꾼', 마을 지킴이 등 주민 참여형 조기 발견 시스템 운영
④ 위기 상황 대비 24시간 긴급 신고 및 현장 출동 대응 체계 고도화
⑤ 피해자 자립 지원(주거, 일자리 연계) 및 전문 상담 서비스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도민 심층면접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여성·아동·가족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북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또는 현장에서 경험하신 내용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정책개선과 연구 수행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으며,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은 언제든지 건너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경상북도 여성폭력 예방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책임연구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김민아

PART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경상북도는 고령화율이 높고 읍면동 단위의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 차지하여, 여성폭력 발생 시 은폐되거나 방치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그러나 현재까지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의 보호·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예방 중심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 ❍ 또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은 대부분 일회성·형식적 전달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실질적인 조기 감지와 선제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특히 1인 가구 여성, 한부모, 이주여성, 고령 여성 등 복합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권 기반 예방체계 마련이 시급함
- ❍ 이에 따라, 가족센터, 상담소, 1366센터 등 기존의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의 예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PART II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유형이 떠오르십니까?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기타

○ 최근 지역사회에서 여성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폭력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ART III 지역사회 환경

○ 평소 생활하면서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장소나 상황이 있습니까?

➔ 골목길, 대중교통, 공원, 유흥가 및 술집 주변, 온라인 공간, 기타

○ 여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와 농촌의 차이, 지역 공동체 문화,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신고 및 도움 요청의 어려움, 기타

PART IV 예방 환경

○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활동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억에 남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실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교육, 직장교육, 주민 대상 교육, 온라인 콘텐츠. 캠페인, 기타

PART V 도움요청 및 지원체계

○ 여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 경찰,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시·군 및 행정복지센터, 기타

○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변의 시선,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신고 절차의 어려움, 지원기관 부족, 접근성 부족,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기타

○ 우리 지역의 여성폭력 지원체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ART VI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 기관 가운데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상북도, 시·군, 경찰, 학교, 기업,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복지기관, 여성 단체, 기타

○ 지역주민들이 여성폭력 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ART VII 정책 제안

○ 경상북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폭력 예방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상북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해야 할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경찰,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지역기반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전문가 심층면접

❍ 경상북도는 고령화율이 높고 읍면동 단위의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 차지하여, 여성폭력 발생 시 은폐되거나 방치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그러나 현재까지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의 보호·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예방 중심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은 대부분 일회성·형식적 전달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실질적인 조기 감지와 선제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특히 1인가구 여성, 한부모, 이주여성, 고령 여성 등 복합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권 기반 예방체계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따라, 1366센터, 상담소 등 기존의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의 예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여성폭력 예방 생태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PART Ⅰ 지역사회 여성폭력 실태 및 인프라 진단

❍ 최근 경북 지역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폭력의 양상(예: 디지털 성범죄, 이주여성 폭력, 고령층 가정폭력 등)과 그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현재 경북 내 시·군별 지원 기관(상담소, 쉼터 등)의 배치와 자원이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 산간 지역 또는 여성폭력 지원기관 미설치 지역 등에 발생하는 지원 체계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는 무엇입니까?

PART II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의 연계 체계(거버넌스)

- ❍ 경찰, 지자체, 상담소, 의료기관(해바라기센터 등) 간의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 ❍ 피해자 발견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정보 공유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 ❍ 지역주민 참여하는 예를 들어 이장·통장, 부녀회 등 주민 자치 조직이 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PART III 지역 밀착형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

- ❍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하게 도입하거나 강화해야 할 여성폭력 예방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주민 참여형 안전망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 ❍ 이주여성, 장애인, 고령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 생태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니까?

PART IV 정책 제언 및 제도적 보완

- ❍ 경상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예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 폭력 예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